

한국과 일본,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과 한일관계

최은미

2021년 12월



Asan Report

한국과 일본,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과 한일관계

최은미

2021년 12월

아산정책연구원

우리 연구원은 한반도와 동아시아 그리고 지구촌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올바른 사회담론을 주도하는 독립 싱크탱크를 지향합니다. 특히, 통일-외교-안보, 거버넌스, 공공 정책-철학 등의 분야에 역량을 집중하여 우리가 직면한 대내외 도전에 대한 해법을 모색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 및 번영을 위한 여건 조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외교와 유관 분야 전문가를 육성해 우리의 미래를 보다 능동적으로 개척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데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 입장이 아닌 저자의 견해입니다.

저자

최은미

최은미 박사는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이다. 한국외국어대학교 정치학사(2007), 고려대학교 정치학 석사(2009), 박사(2015) 학위를 취득하였다. 미국 University of Michigan 및 일본 早稲田大学에서 방문연구원, 외교부 연구원, 세종연구소 객원연구위원, 국립외교원 일본연구센터 연구교수로 재직하였다. 한국외국어대학교 강의교수, 현대일본학회 편집이사, 한국정치학회 편집위원, 한국유엔체제학회 홍보간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일본정치외교, 한일관계, 동북아 지역협력 등이다. 최근 연구로는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일본의 대한국 협력방안』(2021, 공저), 『외교의 부활』(2021, 공저), 〈人的交流は国際認識を変えるのか-日中韓大学間交流プログラム「キャンパス・アジア」の試み-〉(2021, 공저, 『일본연구논총』), 『Trilateral Cooperation: Young Professionals Research Project』(2021, 공저), 〈일본의 코로나19 대응과 정책결정과정〉(2021, 『일본연구』), 『Issues and Perspectives in The Korean Peace Process』(2021, 공저), 『국가정체성과 한중일관계』(2020, 공저), 〈코로나19 대응을 통해 본 국가의 위기관리 유형 연구: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2020, 『일어일문학연구』), 〈박근혜 정부의 「동북아평화협력구상」은 왜 사라졌을까? 동북아 다자협력을 위한 (신)기능주의적 접근의 도전과 한계〉(2020, 『국가전략』), 〈한일 갈등관리 메커니즘의 역사적 전개와 구조적 변용〉(2020, 『아세아연구』), 〈한국의 일본정치연구: 동향과 과제-2010년대 일본정치연구의 위기와 새로운 도전-〉(2020, 『일본연구논총』) 등이 있다.

목차

1. 들어가며	8
2. 한국의 인식: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11
2.1 (인식①) 한국의 대일 인식: ‘긍정’보다 높은 ‘부정’ 인식	12
2.2 (인식②) 주변국과의 비교: 호감도와 거리감	15
2.3 (정치·사회) 한국의 눈에 비친 ‘군국주의’ 국가, ‘경계’ 혹은 ‘경쟁’ 상대로서의 일본	18
2.4 (경제) 한국에게 여전히 중요한 일본	21
2.5 (문화) 한국 사회의 일본문화에 대한 낮은 관심: 한일 문화 교류의 비대칭성	22
2.6 요약 및 분석: 반감(反感)에도 중요한 일본,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양가성(兩價性)	25
3. 일본의 인식: 한국은 일본에게 무엇인가	32
3.1 (인식①) 일본의 대한국 인식: 부정 → 긍정 → 부정	32
3.2 (인식②) 주변국과의 비교: 친근감, 관계 평가, 중요성	43
3.3 (정치·사회) 일본의 눈에 비친 ‘민족주의’ 국가 한국	48
3.4 (경제) 중요성이 낮아지는 한국	48
3.5 (문화) 일본 사회에 스며든 한국문화: 한국 ‘콘텐츠’에 대한 높은 호감도	50
3.6 요약 및 분석: 반복되는 관계의 부침(浮沈) 속 한국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저하	52

4. 한일관계: 갈등과 협력의 이중구조	58
4.1 갈등 구조: 과거사 문제의 해결 -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59
4.2 협력 구조: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	73
4.3 향후 전망	84
5. 나오며: 정책적 고려사항	88
부록 1. 주요 여론조사 개요	94
부록 2.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정상 연표(1965-2021.12)	97
부록 3. 한일관계 주요 정치·외교 사안(2017.05-2021.12)	101

그림

[그림 2-1]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1991-2019)	13
[그림 2-2] 한국의 일본에 대한 신뢰감(1996-2021) 및 친근감(2013-2021)	13
[그림 2-3]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상과 한일관계 평가(2013-2021)	14
[그림 2-4]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2010-2020)	16
[그림 2-5]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2007-2020)	17
[그림 2-6] 한국의 일본 사회 및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2013-2021)	19
[그림 2-7] 한국의 일본에 대한 국가 이미지(2007-2020)	20
[그림 2-8] 한국과 일본의 상대 국가에 대한 이미지(2020)	20
[그림 2-9] 일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복수응답)(2010-2015)	25
[그림 3-1]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1978-2020)	33
[그림 3-2]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신뢰감(1996-2021) 및 친근감(2013-2021)	36
[그림 3-3]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상과 한일관계 평가(2013-2021)	36
[그림 3-4] 일본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친근감/관계 평가/관계 발전의 중요성(1978-2020)	37
[그림 3-5] 친근감(2006-2020): 성별	38
[그림 3-6] 한일관계 평가(2006-2020): 성별	38
[그림 3-7] 일본의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2016-2020): 성별	39
[그림 3-8] 친근감(2006-2020): 세대별 ‘긍정’	40
[그림 3-9] 관계 평가(2006-2020): 세대별 ‘긍정’	40
[그림 3-10] 일본의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성 인식(2016-2020): 세대별 ‘부정’ 답변	41
[그림 3-11] 일본의 주변국에 대한 친근감(1978-2020): 긍정 답변	44
[그림 3-12] 일본의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1987-2020): 긍정 답변	45
[그림 3-13] 일본과 주변국과의 향후 관계 발전의 중요성(2016-2020): 긍정 답변	47
[그림 3-14] 일본의 한국 사회 및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복수응답)(2013-2021)	48
[그림 3-15] 일본 무역 중 한국의 위치(1988-2020)	49
[그림 3-16]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복수응답)(2010-2015)	52
[그림 4-1] 한일은 역사인식 문제에서 서로 양보해야 하는가(2021)	59
[그림 4-2]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여부 인식(2020)	59
[그림 4-3]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여론(2015-2020)	65

[그림 4-4]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일 여론(2019-2020)	69
[그림 4-5]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대항조치에 대한 일본 여론(2019-2020)	70
[그림 4-6] 한미관계와 수출규제·'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에 대한 강경 대응(2020)	71
[그림 4-7]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은 더 이상 일본에 피해배상을 요구해서는 안된다(2019-2020)	72
[그림 4-8] 강제징용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한일 여론(2019-2021)	72
[그림 4-9] 북한에 대한 위협(2010-2018)	74
[그림 4-10] 일본에게 군사적 위협이 되는 국가(1995-2020)	74
[그림 4-11] 한국에게 군사적 위협이 되는 국가(1995-2020)	75
[그림 4-12]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2007-2020)	76
[그림 4-13] 한반도 전쟁 시 주변국의 태도 예상(2007-2020)	77
[그림 4-14]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2008-2020)	77
[그림 4-15] 북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한일 여론(2010-2021)	78
[그림 4-16]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해야 할 일(2010-2016)	79
[그림 4-17] 북한에 대한 관심사항: 일본 여론(2000-2020)	79
[그림 4-18] 자국과 가장 중요한 관계의 국가(2016-2020)	81
[그림 4-19] 미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가 더 중요한가(2015-2020)	81
[그림 4-20] 자국 경제에 중요한 국가(복수응답)(1995-2013)	82
[그림 4-21] 향후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강화/약화시키는 것이 좋은가?(2021)	83
[그림 4-22] 한일관계 현황 평가 및 향후 전망(1995-2021): 한국 여론	84
[그림 4-23] 한일관계 현황 평가 및 향후 전망(1995-2021): 일본 여론	85
[그림 4-24] 한국과 일본의 상대국에 대한 인상과 관계의 중요성(2013-2021)	85
[그림 4-25] 한일관계와 역사 문제(2013-2021): 일본 여론	86
[그림 4-26] 한일관계와 역사 문제(2013-2021): 한국 여론	87
[그림 4-27] 역사 문제와 경제 및 문화 교류를 통한 관계 개선(2018-2019)	87

표

[표 4-1] '위안부' 문제 주요사항(1991.08-2021.12 현재)	61
[표 4-2] 강제징용 문제 주요 소송일지(1997.12-2021.12 현재)	67

1. 들어가며

‘한국은 적인가(韓国は『敵』なのか)’¹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9년. 일본에서는 와다 하루키(和田春樹) 도쿄대 명예교수, 우치다 마사토시(内田雅敏) 변호사 등을 중심으로 한 일본 지식인 78명이 ‘한국은 적인가(韓国は『敵』なのか)’라는 이름의 성명을 내고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벌였다(2019.7.25). 그리고 성명을 낸 지 한달여 만에 약 1만 명(8.15 기준 8,404명, 8.31 기준 9,463명)의 일본인들이 서명에 동참하며 한일 간의 화해를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 이후 정부 간 갈등이 심화되고, 한국에서 ‘No Japan’, ‘No Abe’를 외치며,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관광 보이콧이 일어나는 등 일본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에 이르던 시기에 일본에서 일었던 작은 화해의 움직임이었다. 이처럼 일본 내에서도 한국을 적대시하고, 양국을 대립과 반목에 이르게 하는 일본 정부의 대항조치에 반성을 촉구하고, 한일 갈등이 심화되는 것에 경종을 울리는 목소리가 존재한다. 다만, 일본에서 이러한 목소리는 극히 소수이고,² 대다수는 한국에 대한 강경 대응을 지지한다. 한국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다. 한국 또한 일본에 대한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의견이 더 많다는 의미이다.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이후 한국에서 광범위하게 확산되었던 반일시위와 불매운동은 한국의 강경 여론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예이다.³

그리고 2여 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한일관계는 강제징용 문제, ‘위안부’ 문제 등 단기간

-
1. 韓国は敵じゃない. <https://peace3appeal.jimdofree.com/>; [연합뉴스] “한국이 적인가’ 외친 日 시민들…서명운동 참가자 9천명 넘어” <https://www.yna.co.kr/view/AKR20190827088000073> (검색일: 2021.5.20).
 2. 일본에는 세 가지 시선이 존재한다. 첫 번째는, 와다 하루키 도쿄대 명예교수를 중심으로 한 전통적 리버럴의 시각으로, 한국과 일본이 역사 문제를 극복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평화로운 동아시아를 만들어가자는 견해이다. 두 번째는, 아시아신문과 같은 중도 리버럴의 시각으로, 한일이 서로 양보해 역사 문제에 종지부를 찍고 북한 및 중국에 대비하기 위해 한일, 한미일 군사협력을 강화하자는 것이다. 세 번째는, 자민당을 지지하는 보수 주류의 견해로 역사 문제에 대해 더 이상의 양보가 불가능하며, 한일관계가 중요하나 지나치게 목말 필요가 없고, 사태 악화만을 막자는 것이다. 이 중 첫 번째 시선에 동의할 수 있는 일본인은 극히 소수일 것이다. - 김윤형, 2021. 「신생전 한일전」, 생각의 힘, pp.353-356.

내 해결책을 찾기 어려운 다양한 문제에 대한 양국 정부의 원칙과 입장, 그리고 여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정부의 입지는 좁아지고, 한일관계는 정치화되며, 관계 개선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다. 1998년 불과 20여 년 전 우호와 친선의 의미를 다지며 새로운 한일관계를 약속했던 양 정상들의 선언, 즉,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이하,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⁴, 그리고 코로나19로 정체되기는 하였지만, 양국 교류 천만시대를⁵ 맞이할 만큼 발전한 양국관계가 무색하게 같듯이 깊어지는 양상이다.

K-POP과 드라마, 음식 등 한국문화를 좋아하면서도 한국과의 관계 개선에는 냉정한 일본. 그리고 일본음식과 일본여행을 즐기면서도 일본과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단호한 한국. 역사적 과오에 대해 사죄는 이미 충분히 했다는 일본. 그리고 수차례에 걸친 일본의 사죄에도 진정성이 없다는 한국. 이처럼 좁혀지지 않는 양국의 인식과 입장 차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또한, 양국의 인식 차이는 일시적인 것인가 혹은 고착된 것인가. 긴 시간 동안 양국 여론은 어떻게 변화해 왔으며,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이고, 어떠한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는가. 나아가 우리는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극복하고, 우호와 협력의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까.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시작되었다. 이를 위해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혹은 한일공동으로 시행된 여론조사 중 비교적 장기간 동일한 조건으로 시행된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을 분석하여 한국과 일본이 서로에게 어떠한 존재로 자리매김하여 왔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한국갤럽> 여론조사(1991-2019), <통일연구원>과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소>의 ‘통일의식조사(2007-현재)’,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일본 <내각부>의 ‘외교에 관한 조사(1978-현재)’를 중심으로, 한일관계에 대해서는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시행한 <한국일보-요미

-
3. 한국리서치가 2019년 8월과 2020년에 8월에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일본제품 불매운동’에 대해 ‘참여하고 있다’가 2019년 83%, 2020년 72%로 나타났다. - [한국리서치] “[기획] 일본 제품 불매운동 1년, 현재 상황과 앞으로의 전개 방향은?” (2020.8.12) <https://hrcopinon.co.kr/archives/16215> (검색일: 2021.5.10).
 4.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전문)” (1998.10.12)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746505>.
 5.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한일 관광교류 천만 명 시대를 여는 첫 걸음을 내딛다” (2016.12.7) <https://www.korea.kr/news/pressReleaseView.do?newsId=156171959>.

우리신문(讀売新聞)의 ‘한일공동여론조사(1995-현재)⁶’, <동아시아연구원(EAI, East Asia Institute)-言論NPO>의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2013-현재)’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아산정책연구원>의 ‘여론조사’, <한국언론진흥재단> ‘한일 갈등에 대한 양국 시민 인식 조사(2020)’ 등의 자료 등을 활용하였다.

주지하듯이, 일부의 여론조사가 국민여론 전체를 대변할 수는 없다.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를 참고한다고 하더라도 한 조사의 대상이 되는 표본 수는 1,000~2,000명 수준이며, 문항의 설계, 조사 목적 및 시점, 방법 등 다양한 변수들이 응답자의 답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론조사에 대한 분석은 정확히는 해당 조사에 대한 데이터가 나타내는 의미를 파악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 더욱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된 양국의 인식과 여론의 변화를 파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다. 여론조사의 한계와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 그리고 지표만으로는 알 수 없는 현실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현상들을 고려할 때, 서로에 대한 인식을 한마디로 규명하는 것 또한 우려되는 부분도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론조사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이유는 당시의 시대적 흐름에 따른 전반적인 경향, 분위기, 인식 등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도 이러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었다. 여론조사가 국민 모두의 인식을 대변할 수는 없지만, 국민 대다수의 인식과 사회적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 유의미하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한일의 상대국에 대한 인식과 위치,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를 살펴봄으로써 양국 인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한다.

6. 「동아일보-아사히신문(朝日新聞)」이 실시해 온 공동여론조사는 1984년부터 시작되었으나,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비교가 쉽지 않아 상대적으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자료를 주된 자료로 삼았다. 「동아일보-아사히신문」이 실시한 가장 최근 실시된 공동조사는 2015년으로 확인된다.

2. 한국의 인식: 일본은 한국에게 무엇인가

가깝고도 먼 이웃 나라. 일본에 대해 언급할 때 종종 사용하는 이 표현만큼 한국의 대일(對日) 감정을 잘 나타내는 말도 없을 것이다. 양립하기 어려운 이 두 단어의 조합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이중적 인식을⁷ 명확히 표현하는데, 오랜 기간 협력과 갈등의 부침(浮沈)을 겪어온 한일관계의 굴곡진 역사만큼 한국의 대일 감정은 복잡하다. 지리적으로 가깝고, 정서적으로 친근하며, 문화적으로 유사하고, 동일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지닌 이웃 나라이지만, 36년간 식민통치에 대한 상흔(傷痕)과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고통의 역사, 그리고 1965년 국교수립 과정에서 봉합되어 버린 식민통치의 불법성 문제와⁸ 충분하지 않았던 과거사 처리 문제 등은 현재까지도 해결되지 않은 양국의 주요 갈등 사안으로 남아 있다. 이러한 고통과 상처의 역사만큼 일본에 대한 한국의 응어리는 깊다. 이에 따라 한국인의 대일 인식을 다루는 대부분의 연구들은 한국의 대일 감정은 ‘반일(反日)’이라는 상수를 가지고 있다고⁹ 본다.

그렇다면 실제로 한국의 대일 인식은 뿌리 깊은 ‘반일’ 감정에 기반하는가.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은 앞으로도 변하지 않는 상수로 존재한다고 보아야 하는가. 만약 그렇다면, 한국의 일본에 대한 높은 관광 수요, 음식·쇼핑 등 일본문화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나아가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한국의 전후 세대가 과거 기성세대가 경험한 일본으로부터의 식민 통치, 고통과 아픔, 그리고 상처의 역사를 기억하고, 공감할 수 있을까. 그리고 일본에 대한 사죄 요구는 한국의 전후 세대도 동일하게 요구하고 있는 것일까. 한국의 일

-
7. 아산정책연구원에서 2014년도에 발간한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일본에 대한 이중적 인식을 지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시행한 여론조사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은 일본의 군사·안보적 역할 확대 및 군사대국화 움직임을 우려하면서도 일본과의 협력은 필요하다고 본다. - 아산정책연구원, 2014. 「일본을 향한 두 시선: 한국인의 한일관계 인식과 그 함의」, 아산리포트.
 8. 「한일기본조약」 2조는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로 되어 있다. 양국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식민지배의 법적 성격을 ‘이미 무효 (already null and void)’라는 각기 다른 해석이 가능한 문구로, 이른바 ‘비합의의 합의(agree to disagree)’를 이루며 1965년 6월 22일 한일협정에 조인하였다. - 최은미, 2020. “한일 갈등관리메커니즘의 역사적 전개와 구조적 변용.” 「아세아연구」 63(2), pp.107-135.
 9. 최종호 외, 2014. “한국인의 대일본 감정에 미치는 요인에 대한 경험적 분석 - 일본의 군사대국화, 경제협력, 그리고 정체성.” 「국제관계연구」 19(1), pp.41-76.

본에 대한 인식이 모든 세대의 인식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질문을 중심으로 본 장에서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을 양자관계 및 국제관계 속에서 살펴보고, 정치, 사회, 경제, 문화 등의 분야에서 일본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다각도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2.1 (인식①) 한국의 대일 인식: ‘긍정’보다 높은 ‘부정’ 인식

후술하겠지만, 일본에서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인식 조사가 1978년부터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한국에서는 대일 인식이 장기간 진행된 조사는 찾기 어렵다. 대부분의 조사는 특정 계기에 일회성으로 이루어지거나, 비정기적 혹은 간헐적으로 이루어져 왔다.¹⁰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의 대일 인식 조사 중 비교적 긴 기간 시행된 「한국갤럽」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 조사(1991-2019)’¹¹를 살펴보았다(그림 2-1 참조). 그리고 이를 통해,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긍정적’ 인식보다 ‘부정적’ 인식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¹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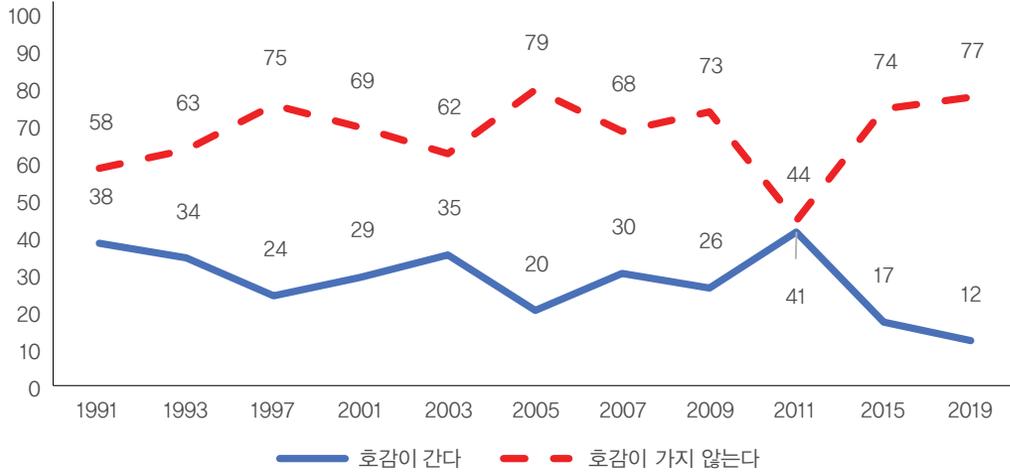
특히, 동 조사에서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가장 높았던 시기는 2011년 41%, 가장 낮았던 시기는 2019년 12%로 조사되었는데, 가장 높았던 시기조차 부정적 인식(44%)이 긍정적 인식(41%)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동 조사에서는 2011년도 호감도가 전년도 26%에서 41%로 크게 상승한 이유는 3.11 동일본 대지진에 대응하는 일본인들의 태도, 2005년도 호감도가 전년도 35%에서 20%로 크게 감소한 이유는 일본 시마네현의 ‘다케시마의 날’ 제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았다.¹³ 한편, 전체 조사 기간 중 가장 낮은 호감도(12%)가 나타난 2019년도는 2018년도부터 이어진 강제징용 문제, 레이더 조사(照射)/초계기 사건, 일본의 수출규제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유사한 시기에 실시된 다른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10. 이 시기보다 더 이전의 조사로 정대균, 2000. 「한국인에게 일본은 무엇인가」(도서출판 강)의 연구에서 인용된 국교정상화 이전인 1955년과 1962년 서울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서울 시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이후 1980년 한국갤럽연구소 여론조사, 1998년 여론조사, 1989년 고려대학교 신문방송연구소 여론조사 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원본을 찾을 수 없고, 지속적으로 시행된 조사가 아니어 제외하였다.

11. 조사 개요에 대한 상세사항은 부록 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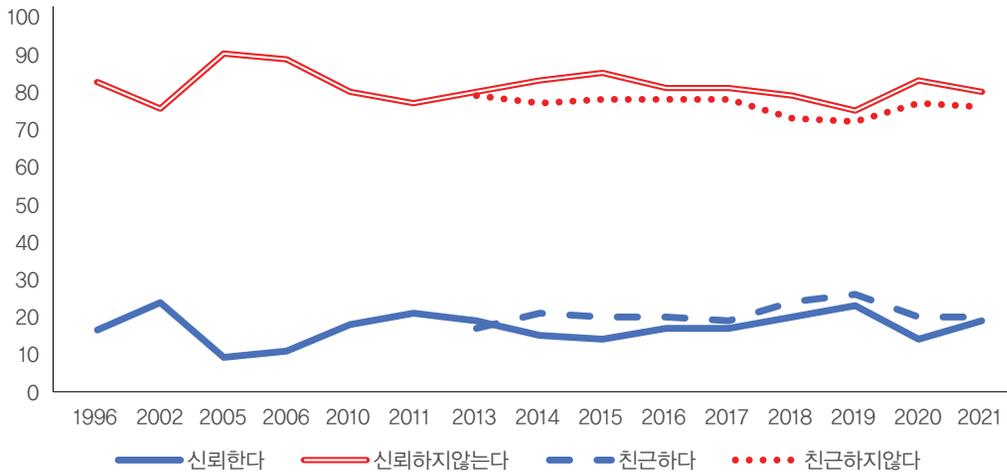
12.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62호 (2019년 7월 2주) - 한일관계 인식, 경제전망”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031> (검색일: 2021.7.13).

[그림 2-1] 한국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1991-2019)



※ 출처: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62호 참조하여 필자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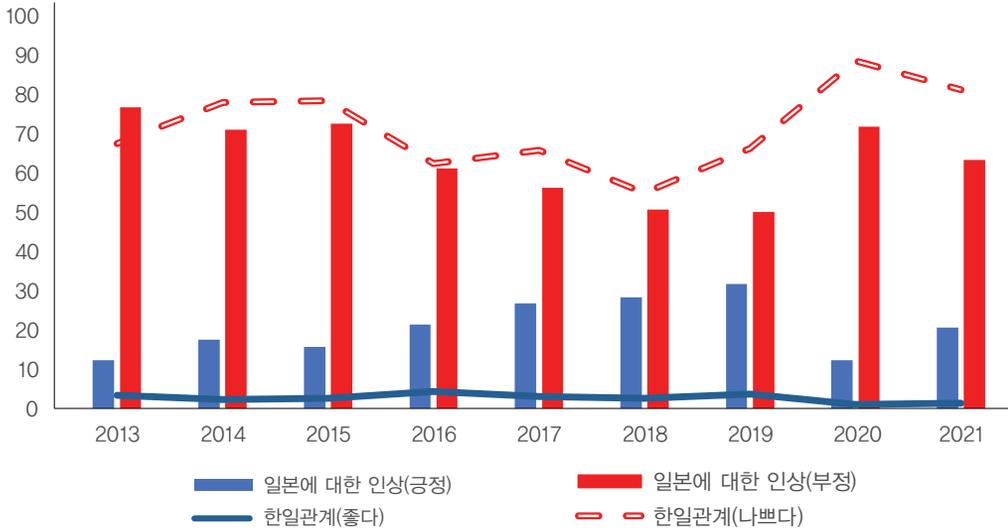
[그림 2-2] 한국의 일본에 대한 신뢰감(1996-2021) 및 친근감(2013-2021)



※ 출처: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한일공동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13.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151호(2015년 2월 4주) - 태극기, 일본/일본인 호감도, 한일 정상회담, 독립운동가, 일제 강점기 주요 사건 발생년도 정인지율 (1, 2월 월간 통합 포함)” <http://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635> (검색일: 2021.7.13).

[그림 2-3]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성과 한일관계 평가(2013-2021)



※ 출처: EAI-言論NPO.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각 년도 조사자료 참조하여 필자 작성.

예를 들어, [그림 2-2]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의 ‘한일공동여론조사’¹⁴의 ‘한국의 일본에 대한 신뢰감(1996-2021) 및 친근감(2013-2021)’, [그림 2-3] 「동아시아연구원-言論NPO」의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¹⁵의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성과 한일관계 평가(2013-2021)’에서도 수치상의 차이는 나타나지만, 2005년도와 2019년도를 기점으로 한국의 긍정적 대일 인식 감소, 부정적 대일 인식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다.¹⁶

그러나 이와 같은 특정 사건이 있었던 시기 외에도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호감, 친근감, 신뢰감 등 전(全) 영역에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높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¹⁷ 요약하자면, 지난 30여 년의 기간 동안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높게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 2-2]에서 나타나듯, ‘신뢰감’과 ‘친근감’의 변화 추이는 유사하지만, [그림 2-3]

14. 조사 개요에 대한 상세사항은 부록 1 참조.

15. 조사 개요에 대한 상세사항은 부록 1 참조.

16. [그림 2-3]의 경우, 2019년도 조사시기(한국: 5.15-5.17)가 7월 일본의 대한국 수출규제보다 이전이었던 점을 고려할 때, 2020년도의 부정적 인식의 급격한 증가는 2019년도 일본 수출규제에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상’과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의 변화 추이는 유의미한 관계에 있지는 않다. 다시 말해, 일본에 대해 긍정적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한일관계가 좋다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며, 일본에 대해 부정적 인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반드시 일본과의 관계를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곧 일본에 대한 인상 및 인식 변화가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와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2.2 (인식②) 주변국과의 비교: 호감도와 거리감

그렇다면 한국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다른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나타나는가. 타국과 비교할 때 월등히 낮은 수준인가. 혹은 다른 나라에 대한 인식과 비슷한가. 이를 알아보기 위해 한국의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와 거리감에 대한 조사를 통해 일본에 대한 인식이 타국과 비교하여 어떻게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그림 2-4]는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를 나타낸 조사로, 「아산정책연구원」이 2010년부터 시행해 온 여론조사(2010-2012: 연례조사, 2013-2020: 데일리폴)¹⁸에 의하면, 한국의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는 미국, 중국, 일본, 북한 순으로 나타났다.¹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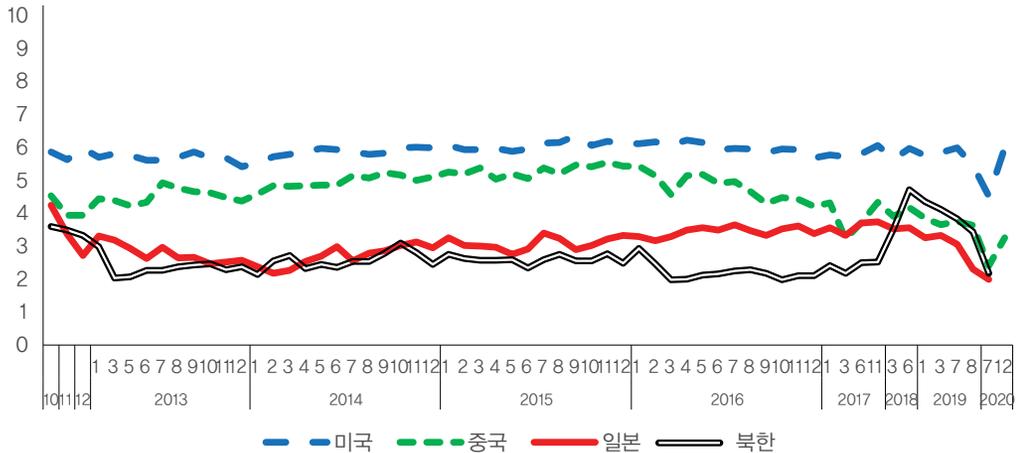
이 중, 일본에 대한 호감도는 북한과 비슷하거나 북한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지만, 2018년도 이후 뚜렷한 감소세가 확인된다. 이는 앞서 제시한 강제징용, 수출규제 문제 등이 영향

17. 1995년에 이루어진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에서 “‘일본인’이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단어가 떠오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한국 응답자들은 ‘식민지 지배, 2차 세계대전’ 32%, ‘간사하다, 야비하다’ 29%, ‘잔인하다, 무섭다’ 15%, ‘근면/성실’ 11%, ‘친절/예절/질서’ 11% 순으로 응답하여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1988년에 서울대 차재호 교수 연구팀이 실시한 “외국인에 대한 학생 및 성인에 대한 태도 연구”에서도 일본인에 대한 선호도는 하위권에 위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중앙일보] “성인·학생 “일본인 가장 싫다”-외국인 선호도 조사 차재호 서울대교수 연구팀” (1992.5.11) <https://www.joongang.co.kr/article/2708025> (검색일: 2021.12.10).

18. 동 조사에 대한 상세설명은 부록 1 참조.

19. 유사한 관점으로 한국리서치에서 2020년 11월부터 2021년 10월까지 최근 12회에 걸쳐 시행한 한반도 주변 5개국에 대한 감정온도를 조사한 결과, 미국, 러시아, 북한, 중국, 일본 순으로 나타났다. 순위의 차이는 있으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하위권에 있음은 다르지 않다. - [한국리서치] “[주변국 호감도 - 2021년 10월 2주차] 미국 호감도 57.6도, 역대 최고치” (2021.10.21) <https://hrcopinion.co.kr/archives/19591> (검색일: 2021.12.20).

[그림 2-4]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2010-2020)



주1. 0=전혀 호감이 없다, 10=매우 호감이 있다(2020년: 미국과 중국의 호감도만 조사함.)

주2. 2010-2012: 연례조사: RDD 표본추출 및 온라인조사, 그 외: 유무선 RDD전화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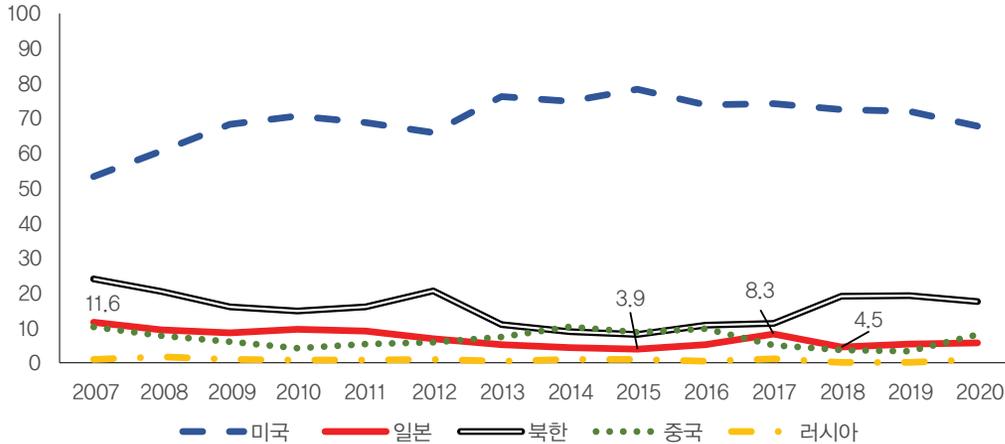
※ 출처: 아산정책연구원. '아산연례조사', '아산데일리풀' 참조하여 필자 작성.

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북한에 대한 호감도는 2018년도에 급격히 상승하는 것이 관찰되는데, 이는 당시 남북, 북미 대화의 분위기와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진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거리감은 어떠한가. [그림 2-5]는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에서 시행한 ‘통일의식조사’ 중, ‘가장 가깝게 느끼는 국가’에 대한 질문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여기서 한국은 미국을 다른 국가에 비해 월등히 가깝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평균 69.8%). 조사 기간 중, 2010년 70.7%에서 2012년 65.9%로, 2015년 78.3%에서 2020년 67.8%로 수치가 하락한 시기도 있었지만, 조사가 시작된 2007년 53.3%와 비교하여 보면, 지난 13년간 한국인이 미국에 대해 가깝게 느끼는 정도는 상승하였다.

한편, 일본에 대한 거리감은 타 국가와 비교할 때 멀게 느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평균 6.95%). 조사를 시작한 2007년부터 2020년까지 2007년(11.6%)을 제외하고 전 기간 10% 미만의 수치로 조사되었다. 또한, 2012년에는 6.8%, 2015년에는 3.9%로 하락하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후 2017년 8.3%까지 다소 상승하였으나, 2018년 4.5%로 다시 하락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등락은 10% 미만의 낮은 범위대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그 변동 수치가 크지 않다. 따라서 한국이 일본에 대해 가깝게 느끼는 정도는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으며,

[그림 2-5] 가장 가깝게 느껴지는 국가(2007-2020)



※ 출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각년도 참조하여 필자 작성.

이는 북한을 가깝게 느끼는 정도보다 낮고, 시기에 따라서는 근소한 차이이기 는 하지만 중국보다도 가깝지 않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2013년(일본 5.1%, 중국 7.3%), 2014년(일본 4.3%, 중국 10.3%), 2015년(일본 3.9%, 중국 8.8%), 2016년(일본 5.2%, 중국 9.7%)로 일본에 대한 거리감은 중국보다 멀게 나타났다.

한편, 중국에 대해서는 평균 6.8%로 가깝게 느끼는데, 2014년 10.3%, 2015년 8.8%, 2016년 9.7%로 다른 시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시기도 있지만, 전반적인 변화 폭은 크지 않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2008년 1.7%, 2017년 1.1%를 제외하고 모두 1% 이하로 나타났으며(평균 0.8%), 북한에 대해서는 조사가 시작된 2007년 24%를 기록한 이후 줄곧 20% 이하의 범위에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2012년 20.6%에서 2015년 8.1%로 12.5%p 하락한 이후, 2016년 10.8%, 2017년 11.3%, 2018년 19.1%, 그리고 2019년에는 19.3%까지 점차 상승하다 2020년 17.5%로 1.8%p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2018년에서 2020년까지의 인식의 변화는 당시 추진되었던 남북대화, 북미대화 등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진전에 따른 한반도 유희 무드, 그리고 이후의 정세 국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요약하면, 한국의 대일 감정은 친근감, 호감, 거리감, 신뢰감 등 전 영역에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높게 나타난다. 그리고 이는 주변국, 즉 미국, 중국, 북한, 러시아 등과 비교하여 볼 때도 상대적으로 더 부정적임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호감도’는 인지적,

사회적 측면이 강하고, '친근감'은 개인적, 정서적 측면이 강해서 접촉과 교류를 통하여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친밀감을 높인다고 여겨진다.²⁰ 그러나 한국의 대일 인식은 길게는 지난 30여 년, 짧게는 지난 10여 년간 양국의 활발한 문화 및 인적교류에도 불구하고, 친근감과 호감 등이 모두 부정적으로 나타나며, 그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2.3 (정치·사회) 한국의 눈에 비친 '군국주의' 국가, '경제' 혹은 '경쟁' 상대로서의 일본

일본에 대해 친근하게도, 가깝게도 느끼지 않는 한국에게 일본은 어떠한 모습으로 비춰질까. [그림 2-6]은 한국의 일본 사회 및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을 나타낸 것으로, 일본은 한국에게 '군국주의(2013-2021, 9년 평균 51.5%)', '자본주의(9년 평균 37.1%)', '국가주의(9년 평균 33.5%)', '민족주의(9년 평균 32.8%)'로 비춰지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²¹

동 조사에서 각 선택지에 대한 용어 정의를 제시하거나, 이것을 선택한 이유까지는 조사되지 않아 한국인들에 눈에 비친 일본의 '군국주의'가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까지는 알기 어렵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군국주의'가 갖는 부정적 의미를 생각해 볼 때, 한국의 눈에 비춰진 일본의 모습은 그 동안 일본이 강조해 온 '전후 평화주의'²²와는 큰 괴리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일본의 개헌논의는 한국에서 부정적으로 여겨지는데, 이는 곧 헌법개정 움직임이 일본의 군국주의의 일환이라는 인식과 연계되기²³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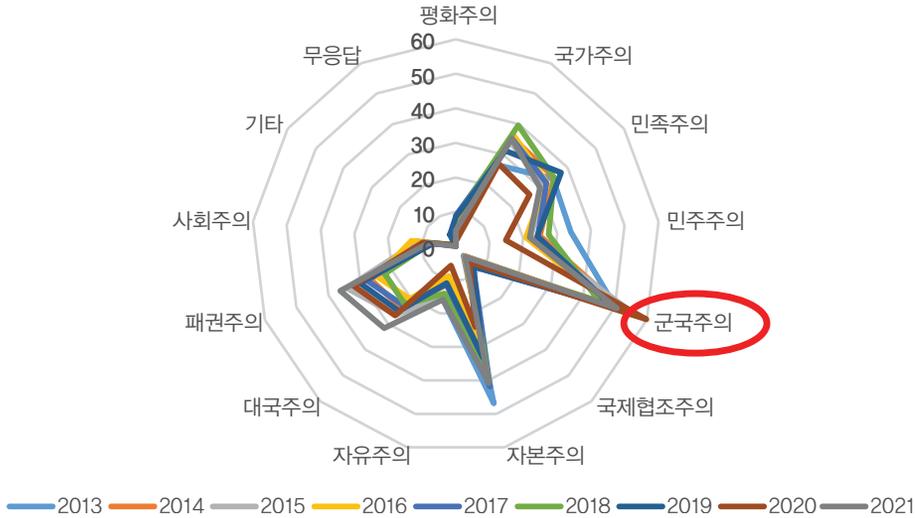
20. 이성환. 2009. "식민지의 기억과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 그리고 한일관계." 「제2기 한일역사공동연구보고서 제5권」, pp.131-160.

21. 다만, 세대 간 인식에서는 차이가 나타난다. 20대(19-29세)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군국주의'를 가장 높은 비율로 응답한 것과 달리, 20대는 '민족주의'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2019년도 조사 결과 기준, '민족주의'(40.2%), '국가주의'(37.4%), '자본주의'(35.6%), '군국주의'(34.5%) 순으로 나타났다. - 오승희. 2020. "[EAI 워킹페이퍼] 한일관계 세대분석 1_한일관계. '나'중심적 대외관, '소비'하는 일본, 반일보다 '공정'". 동아시아연구원; 조은일. 2020. "[EAI 워킹페이퍼] 한일관계 세대분석 2_안보, 청년세대(MZ세대)가 바라보는 한일 안보관계." 동아시아연구원.

22. 일본의 전후평화주의에 대해서는 남기정. 2014. "일본의 전후 평화주의 - 원류와 전개, 그리고 현재." 「역사비평」 통권 106호, pp.94-134 참조.

23. 박명희. 2018. "일본 헌법 개정의 최근 동향과 한국의 대응방향." 「이슈와 논점」 제1448호, 국회입법조사처.

[그림 2-6] 한국의 일본 사회 및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201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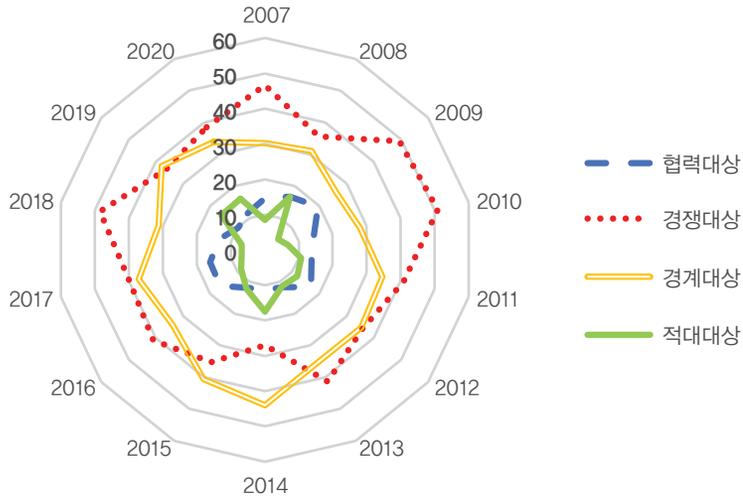
※ 출처: EAI-言論NPO.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각 년도 조사자료 참조하여 필자 작성.

한편,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한국의 '일본에 대한 국가 이미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림 2-7]과 같이, 한국은 일본을 '경쟁대상'이자, '경계대상'으로 보는 인식이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는 '경쟁대상'이라고 보는 경향이 더 강하였으나, 2012년 이후부터는 '경쟁대상'으로 보는 비율과 '경계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거나, 시기에 따라서는 '경계대상'으로 보는 비율이 더 많이 나타나기도 하였다(2014년: '경계대상' 44%, '경쟁대상' 27%, 2015년: '경계대상' 40.6%, '경쟁대상' 35.3%). 즉, 2000년대 중후반 한국이 일본을 '경쟁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강했다면, 2010년대 중반경부터는 '경쟁대상'이자, '경계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은 2020년도에 시행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의 '한일 갈등에 대한 양국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²⁴ 유사하게 나타난다. [그림 2-8]은 한국과 일본의 상대 국가에 대한 이미지를 나타내 것인데, 한국이 일본보다 상대국에 대해 협력/경쟁/경계/적대대상 전 영역에서 높게 인식하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경쟁대상(80.8%)'과 '경계대상(83.1%)'으로 보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둘 사이의 수치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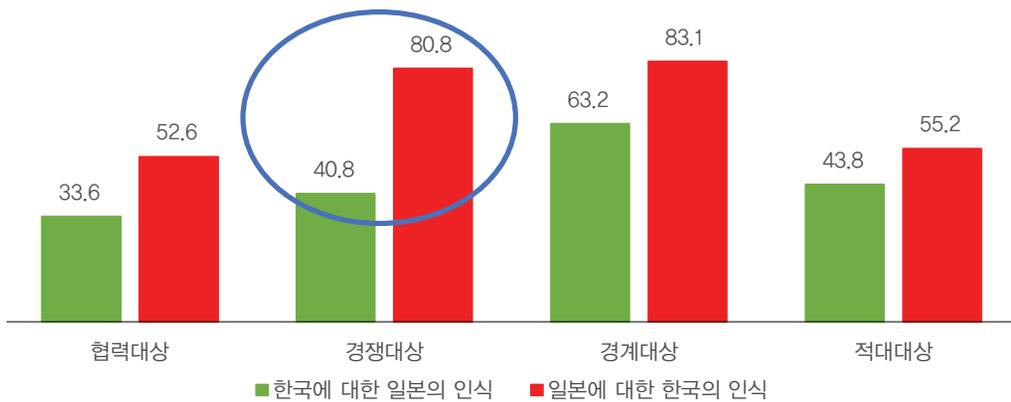
24. 김위근. "한일갈등에 대한 양국 시민의식 조사," 「Media Issue 6(4)」,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에 대한 상세개요는 부록 1 참조.

[그림 2-7] 한국의 일본에 대한 국가 이미지(2007-2020)



※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그림 2-8] 한국과 일본의 상대 국가에 대한 이미지(2020)



※ 한국언론진흥재단. '한일 갈등에 대한 양국 시민 인식 조사'(2020.9.10) 참조하여 필자 작성.

요약하면, 한국은 일본을 군국주의 국가이자, 경계 혹은 경쟁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이 중에서도 상대국을 경쟁대상(한국: 80.8%, 일본 40.8%)과 경계 대상(한국 83.1%, 일본 63.2%)으로 인식하는 한일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점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한국이 인식하는 것만큼 일본은 한국을 경쟁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며, 이것이 오히려 일본의 한국에 대한 반감을 형성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²⁵

2.4 (경제) 한국에게 여전히 중요한 일본

2019년 7월,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²⁶ 많은 한국인들이 반감을 가졌던 이유는 갑작스러운 일본 조치의 부당함에 대한 분노이자, 동시에 일본의 조치가 한국의 핵심 성장 산업 중 하나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일본의 견제로 여겨졌기 때문이었다. 일본의 조치는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에서 기인한 것과 다름없었으나, 이것이 한국의 5대 수출입 품목²⁷ 중의 하나인 반도체 산업에 대한 조치로 이어진 것은 한국인들의 반감을 크게 불러일으켰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일본의 조치가 일본보다 늦게 선진국에 반열에 오른 한국에 대한 경계심이자, 일본의 위치를 빼앗길 것이라는 조바심, 그리고 한국의 성장을 억누르려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이에 따라 당시의 많은 분석과 정치권의 반응, 그리고 정부의 인식은 일본의 조치를 ‘경제침략’으로²⁸ 규정하고, ‘다시는 지지 않겠다’는²⁹ 대응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와 같은 한국의 인식은 일본의 조치가 한국 경제에 치명적이며, 한국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이라는 우려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었다.

실제로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2019년도 기준, 63.7%)³⁰에게 일본은 주요 수출국 중 5위(5.2%), 주요 수입국 중 3위(9.5%)에 해당하는³¹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수치는 무역점유율 40% 이상을 웃돌며 일본이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자리매김하고 있

-
25. 오구라 기조(2015)는 한국에서 일본을 비교나 경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보통의 일본인들에게 큰 충격이며, 이러한 현상이 오히려 한국에 대한 불쾌함을 갖게 한다고 분석한다. - 오구라 기조, 2015. 「일본의 험한파는 무엇을 주장하는가」, 제이앤씨.
 26. 일본에서는 ‘수출관리강화조치’라고 부른다. - 經濟産業省, 「韓国向け輸出管理の運用の見直し」 https://www.meti.go.jp/policy/external_economy/export_control_korea/index.html (검색일: 2021.7.15).
 27. 2019년도 기준 5대 수출품목은 반도체 17.3%, 자동차 7.9%, 석유제품 7.5%, 자동차부품 4.2%, 평판디스플레이 및 센서 3.8%이며, 5대 수입품목은 원유 14%, 반도체 9.3%, 천연가스 4.1%, 석유제품 3.5%, 석탄 23.8%이다. -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통관자료,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10대 교역상품” <https://stat.kita.net/stat/world/major/KoreaStats12.screen>.
 28. [뉴스1] “민주 ‘日 경제침략…비상한 각오로 전쟁 임해 승리할 것’(종합)” (2019.8.2) <https://www.news1.kr/articles/?3686603>; [아시아타임즈] “[전문]민주당, 일본 화이트리스트 배제 조치에 ‘경제침략’으로 규정” (2019.8.3) <https://www.asiatime.co.kr/261794> (검색일: 2021.7.20).
 29. 대한민국 정부, 「다시는 지지 않겠습니다 -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의 대응」; 대한민국 정부, 「아무도 흔들 수 없는 나라 - 일본 수출규제 조치와 우리의 대응」.
 30. 산업통상자원부, 관세청 통관자료, 출처: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무역의존도” <https://stat.kita.net/stat/world/major/KoreaStats02.screen>.

던 1960~1970년대와 비교하면 현저히 감소한 수치이고, 무역 상대국으로서의 지위는 낮아진 수치이지만, 여전히 일본은 한국에게 중요한 경제 교역국이다. 이를 반영하듯, 「동아시아연구원-言論NPO」의 2021년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에서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로 가장 많은 응답이 나온 것은 “중요한 무역 상대이며, 경제와 산업 측면에서 상호의존성이 크기 때문에(79.7%)”,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관계가 깊은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62.4%)”이었다. 이 답변은 2020년 “경제와 산업 면에서 상호의존 관계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통관심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56.6%)”, “중요한 무역상대국이기 때문에(50.7%)”라는 답변이 합쳐진 것이다. 요약하면, 한국의 인식에서 일본과의 경제 관계는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그만큼 실리적 측면에서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다. 즉, 한국에게 일본이 필요하고, 중요하게 인식되는 것은 한국의 실익, 실리적인 측면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2년여가 지난 현재, 이와 같은 조치가 실제로 한국 경제에 미친 영향은 제한적이며, 한국의 피해가 예상보다 크지 않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지만,³² 당시 일본의 조치는 한국인들에게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으로 깊게 각인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곧 일본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관광 보이콧 등의 전국적 확산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이어졌다. 당시 민간차원에서 자연스럽게 확산되던 불매운동의 기류 가운데 큰 화제가 되었던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라는 표현들은³³ 일본과의 대치 구도가 민족주의적 감정을 고양시키는 단적인 사례였음을 보여준다.

2.5 (문화) 한국 사회의 일본문화에 대한 낮은 관심: 한일 문화 교류의 비대칭성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이후 한국에서는 일본 대중문화가 단계적으로 개방되었고, 일본 내에도 한국문화가 스며들게 되었다. 그리고 지난 20여 년 동안 일본에서는 한국 요리, 영화, 드라마, 음악 등이 크게 인기를 끌었고, 이제 일본 사회에서 한국문화는 일시

31. 2019년도 기준 주요 수출국으로는 1위 중국 25.1%, 2위 미국 13.4%, 3위 베트남 8.9%, 4위 홍콩 5.9%이며, 주요 수입국으로는 1위 중국 21.3%, 2위 미국 12.3%, 4위 사우디아라비아 4.3%, 5위 베트남 4.2%이다. - 한국무역협회. “한국의 10대 무역국” <https://stat.kita.net/stat/world/major/KoreaStats06.screen>.

32. KIEP. “일본 수출규제 100일의 경과, 영향 및 향후 대응.” 세계경제 포커스, Vol.2, No.35, (2019.10.30).

33. [디지털조선일보] “화제의 키워드 ‘불매운동’, “독립운동은 못했어도, 불매운동은 한다” (2019.7.23) http://digitalchosun.dizzo.com/site/data/html_dir/2019/07/23/2019072380047.html (검색일: 2021.7.20).

적 현상을 넘어 일상의 일부로 자리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는 어떨까.

2021년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의 ‘한일공동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인에게 “일본문화 중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복수응답)”를 물었을 때, 가장 많은 응답을 얻은 것은 ‘없음(43%)’이었고, 그 다음으로 만화/애니메이션(26%), 요리(24%)로 나타났다. 그 외 영화, 드라마, 문학, 음악, 패션 등의 응답도 있었으나, 모두 10% 이하의 응답률을 보였다. 여기에서 1위로 조사된 ‘없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는 일본에 대한 반감이라기보다 글자 그대로 ‘없다’는 의미일 가능성이 더 크다. 일본에서 한국문화가 요리, 드라마, 영화, 음악, 패션, 뷰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크게 확산되며 일시적 현상을 넘어 생활의 일부분, 혹은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은 반면, 한국에서의 일본 문화는 상대적으로 존재감이 크지 않다. 물론 한국 내에서도 일본 영화, 음악, 애니메이션 등 문화에 대한 수요는 있지만, 일본 내 한류처럼 일반 대중들에게 큰 관심과 인기를 얻고 있다기보다는 특정층에 의한 수요라고 보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한국에서의 일본 대중문화 개방은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이후 ‘단계적이며 상당한 속도’를 방침으로 이루어졌다. 1차 개방은 1998년 10월 20일로 공동제작 영화, 한국 영화에 일본배우 출연, 4대 국제 영화제 수상작, 한일 영화주간 상영작을 중심으로 영화 및 비디오, 일본어판 만화와 만화잡지가 개방되었다. 2차 개방은 1999년 9월 10일로 공인국제 영화제(총 70여 개) 수상작, ‘전체 관람가’ 영화(애니메이션 제외), 2천 석 이하 규모 실내 장소의 대중가요 공연으로 확대되었다. 3차 개방은 2000년 6월 27일로 ‘12/15세 관람가’ 영화, 극장용 애니메이션, 국제 영화제 수상작, 일본어 가창을 제외한 나머지 음반, 비디오 게임물을 제외 나머지 게임물이 대상이었고, 대중가요 공연은 전면 개방되었다. 이후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문제로 인해 4차 개방이 무기한 연기되었으나(2001.7.12 문화관광부, 일본대중문화 개방 중단 발표), 2003년 6월 7일 한일정상회담에서 ‘일본 대중문화 개방 확대’ 원칙을 확인하고, 다음 해인 2004년 1월 1일부터 4차 개방을 실시하여 영화, 음반, 게임 분야의 전면 개방(단, 일본방송과 극장용 애니메이션 개방 추후 결정)이 발표되었다(2003.9.17).³⁴ 이로 인해 한국 내 일본 대중문화는 일부 방송 프로그램과 애니메이션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 개방되었다.

34. 국가기록원. “일본 대중문화 개방” (2006.12.1)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3027&sitePage=> (검색일: 2021.7.17).

당시 일본 대중문화 개방을 앞두고 한국에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개방을 반대하는 이들은 일본 대중문화의 저질성과 해악성을 경계하고, 경쟁력이 취약한 한국의 문화산업이 위기를 맞고, 문화적으로 일본에 편입되는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³⁵ 이와 같은 우려는 한국문화가 일본에 유입되는 것보다 일본문화가 한국에 더 많이 유입되어 한국 사회를 압도하는 불균형과 비대칭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는 전망으로도 이어졌다.³⁶ 그러나 대중문화 개방 이후 오히려 한국의 대중문화가 일본에 빠르게 흡수되고, 한국에서는 일본의 대중문화가 자리잡지 못하면서 한일 문화 교류가 역전되는 비대칭성이 나타났다.³⁷

이와 같은 현상은 이미 10여 년 조사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림 2-9]는 2010년부터 2015년까지의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 중 한국인들에게 “상대국(일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복수응답)”를 묻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관광지’, ‘전자제품 및 자동차’, ‘없음’, ‘요리’, ‘만화/애니메이션’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반면, ‘영화’, ‘TV드라마’, ‘음악’ 등은 그 비중이 높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이러한 관심의 정도는 30~40% 이하의 비율로 나타나며, 일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높은 분야가 평균 50~60% 정도였던 것과 비교하면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국 대중문화가 일본에서 열광적으로 소비되며³⁸ 일본 사회에 스며든 반면, 일본 대중문화는 정부의 개방정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큰 성공을 거두지 못하였다.³⁹ 그리고 이는 곧 문화를 통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친근감 형성 혹은 호감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하지 못하였다고 볼 수 있다.

35. [MBC 뉴스] “한일 현안, 일본문화의 국내침입 심각” (1991.1.7) https://imnews.imbc.com/replay/1991/nwdesk/article/1842876_30445.html; [매일경제] “정치권 일본 대중문화 개방 반대” (1994.2.1) <https://www.mk.co.kr/news/home/view/1994/02/5894/>; [서울신문] “(시론) 일 대중문화 개방 아직 이르다” (1995.2.25)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19950225014002>; [한국경제] “2002년 일본상품에 밀린다” … 일본 대중문화 영향 분석” (1998.8.17) <https://www.hankyung.com/life/article/1998081701411> (검색일: 2021.7.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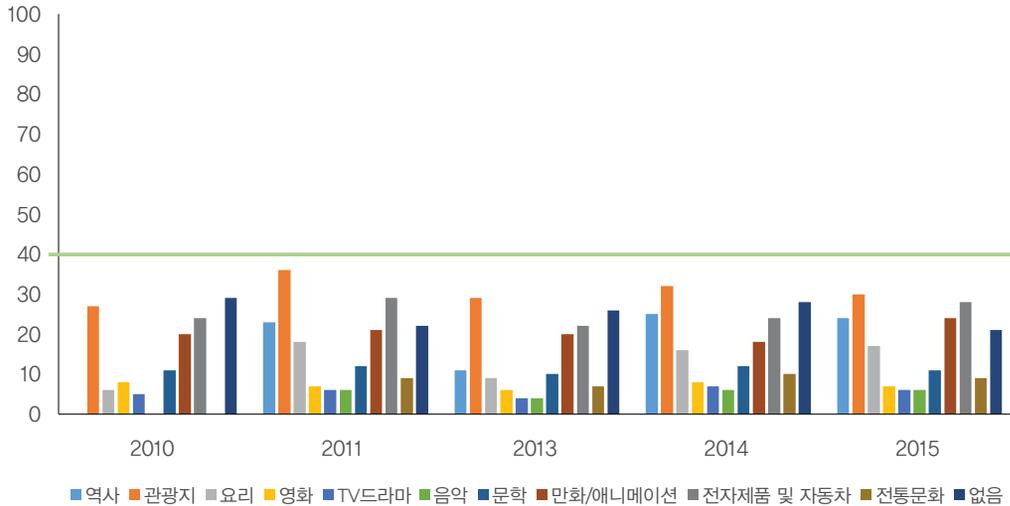
36. 이성환. 2015. “일본 대중문화 유입과 한일관계,” 『日本文化研究』 53, p.279.

37. [MBC 뉴스] “일본 대중문화 국내 개방 영향력 적었다” (2003.8.15) https://imnews.imbc.com/replay/2003/nwdesk/article/1907689_30767.html (검색일: 2021.7.15).

38. [시사저널] “일본 열도는 왜 한국에 빠졌나” (2004.5.4) <https://www.sisajournal.com/news/articleView.html?idxno=80180> (검색일: 2021.7.15).

39. 노명우. 2007. “간지나는 니뽀뽀”와 한일 문화 교류의 시제,” 『담론201』 10권 3호, pp.19-45.

[그림 2-9] 일본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복수응답)(2010-2015)



※ 출처: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한일공동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2.6 요약 및 분석: 반감(反感)에도 중요한 일본,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양가성(兩價性)

한국 여론은 일본에게 긍정적 인식보다는 부정적 인식을 더 많이 갖고 있다.⁴⁰ 이는 앞서 제시한 여론조사들의 어느 시기, 어느 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일본에 대한 한국의 부정적인 인식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며, 최소한 지난 30여 년간의 시간 흐름에서 볼 때 비교적 일관되게 장기간 지속되어 나타났다. 이는 한국에 대한 일본의 인식이 상대적으로 증감의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과 크게 다른 점이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은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일본에 대해 호감도 및 친근감과 거리감의 측면에서도 일관되게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고, 이는 타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에도 두드러진다.

40. 다만, 한국인의 '일본인(국민)'에 대한 호감도는 '일본(국가)'에 대한 호감도보다 높게 나타난다. - 「한국갤럽」이 2019년도에 시행한 여론조사에서도 한국인의 '일본에 대한 호감도'가 12%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시기에도 '일본인에 대한 호감도'는 41%로 나타났다.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62호(2019년 7월 2주) - 한일 관계 인식, 경제 전망" (2019.7.11)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031> (검색일: 2021.7.17).

그러나 이러한 부정적 인식이 곧 한국이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오히려 한국은 일본을 안보, 경제적 측면에서 실리적으로 중요한 상대로 여기고 있으며, 일본과의 관계 증진 또한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 즉,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는 별개로 일본과의 협력과 연대를 중요시하고 있다. 한국인의 대일관의 특징이 반일과 친일, 반발과 이끌림, 적의와 경의가 교차하는 것이었다면,⁴¹ 이에 더하여 반감과 중요성이 공존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것이 곧 일본에 대한 한국인의 양가성(ambivalence), 즉 양립하기 어려운 대립적 감정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 한국에게 비춰진 ‘경계’와 ‘경쟁’의 상대, ‘군국주의’ 국가 일본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에서 일본이 가장 괴리감을 느끼는 것은 바로 한국에게 일본이 ‘군국주의’,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국가’라는 점일 것이다. 전후 일본이 평화헌법을 유지하며 평화국가로 발전해 왔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는 것과 달리, 한국은 일본정치권의 우경화, 일본의 헌법개정 움직임 등을 불안하고, 우려스럽게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일본에게 군사적 위협을 느끼는 것일까. 이에 대해 2021년에 시행된 「동아시아연구원-言論NPO」의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를 보면, ‘일본을 군사적 위협으로 느끼는 이유’에 대해 1위인 71.2%(2019년 56%, 2020년: 58%)가 “일본이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2위인 45.8%(2010년: 44.5%, 2019년 47.2%)가 “일본이 전쟁 책임에 대해 아직까지 모호한 자세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로 답변하였다. 이는 한국의 일본에 대한 군사적 위협감은 군사력 및 방위비 증강이나, 가시적 형태의 실제적 위협이 아닌, 독도를 둘러싼 양국 갈등, 과거 한일 간의 역사적 경험 등에 의한 인식적 위협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은 앞서 제시한 한국이 일본을 ‘경계대상’으로 보는 것 과도 이어진다.

또한, 한국은 일본에 대해 ‘경쟁의식’을 많이 느끼는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경쟁의식이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에서 양국 간의 인식 차이가 나타

41. 정대균(2000)은 1995년 요미우리 신문이 실시한 ‘아시아 7개국 여론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한국인의 일본/일본인에 대한 이미지는 ①‘침략국가’ 유형, ②‘악당’ 유형, ③‘선인’ 유형, ④‘경제대국·선진국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한국인의 대일 인식은 긍정적 이미지와 부정적 이미지가 공존한다고 보았다. - 정대균, 2000. 「한국인에게 일본은 무엇인가」. 도서출판 강. p.27-36.

난다. 앞서 제시한 바와 같이, 한국 응답자의 80.8%가 일본을 경쟁대상으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일본 응답자는 40.8% 정도가 한국을 경쟁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 단적으로 말하면, 한국은 일본을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반면, 일본은 한국을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경향이 높지 않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과거 산업 후발 주자였던 한국이 발전하고, 이에 따라 국제사회에서 위상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변화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 MZ세대⁴²의 “보통의 이웃 나라 일본” vs 기성세대의 “동경과 경계의 일본”

2021년 5월에 실시된 「한국일보-한국리서치」의 여론조사에 의하면,⁴³ 40, 50, 60대 이상의 대일 호감도와 20, 30대의 대일 호감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미국, 북한, 일본, 중국 등 주변국에 대한 호감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 전체 평균이 26.7도(높을수록 긍정적, 0~100으로 표시)로 조사되었는데, 이 중 40대가 21.7도, 50대 26.8도, 60대 이상 29도로 나타난 반면, 20대는 30.8도, 30대는 23.9도로 나타났다. 특히, 순위에 있어서도 전체 연령대의 평균 호감도 순위가 미국>북한>중국>일본이었던 것과 달리, 20대는 미국>일본>북한>중국, 30대는 미국>북한>일본>중국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40대가 일본에 대해 가장 낮은 호감도를 보였다.⁴⁴

이처럼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세대, 그리고 시대에 따라 나타난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현재 일본을 위협적이고, 두려운 대상이면서 동시에 동경과 배움의 대상이자, 경계와 경쟁상대로 인식하는 것은 주로 현재 50, 60대 이상의 기성세대이며, 전 세대에 걸친 인식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유사한 관점에서 20여 년 전인 1995년에 실시한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의 ‘한일공동 여론조사’에서 살펴보면, 한국인들이 ‘일본인들에게 배워야 할 점’으로 ①근면함(67.6%),

42. 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한 밀레니얼 세대와 1990년대 중반~2010년대 초반 출생한 Z세대를 통칭하는 말로, 모바일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고, 집단보다는 개인, 미래보다는 현재, 소비에 있어서 가격보다는 취향, 가치, 경험 등을 중시하는 특징을 보인다.

43. 조사개요에 대한 상세사항은 부록 1 참조.

44. [한국일보] “한국인, 日 가장 혐오’ 통념 깨진다… 2030세대 “中이 더 싫다” (2021.6.14)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61311510002670> (검색일: 2021.7.15).

②친절함(58.4%), ③좋은 제품을 만드는 노력(56.3%), ④애국심(37.3%), ⑤조직중시(27.2%) 순으로 답변한⁴⁵ 것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과거 일본의 경제산업발전에 대한 동경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그로부터 10년 후인 2005년에 시행되었던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는 ①근면함(49.5%), ②질서의식(43.9%), ③친절함(36.7%), ④예의(35.4%), ⑤청결(26.7%) 순으로 나타나⁴⁶ 10년 전의 인식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당시의 상황을 되돌아보면, 1990년대 이후 일본에 대한 기억으로 장기불황을 빼놓을 수 없다. 이 시기 일본의 모습은 더 이상 한국이 배우고 뒤쫓아가야 할 발전모델은 아니었고, 오히려 반면교사로 여겨졌다. 따라서 이 시기 일본의 성장과 쇠퇴를 보며 성장한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의 일본에 대한 인식은 다르게 형성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해, 전쟁과 일본의 급속한 경제 발전을 직접 경험한 기성세대에게 일본은 넘어야 할 두려움과 열등감의 대상임과 동시에 경제적으로 도달해야 할 목표와 동경의 대상이었다면,⁴⁷ 일본의 경제적 침체와 대비되는 한국의 경제적 발전과 세계적 수준의 IT, 전자제품을 선도하는 시대를 살아 온 MZ세대에게 일본은 기성세대가 갖고 있는 두려움 혹은 동경심을 갖는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에 태어난 Z세대의 경우, 과거 전자제품의 주류를 차지했던 일본의 ‘소니’, ‘모토로라’가 아닌 한국 제품을 사용하고, K-POP 등 한국문화의 세계적 돌풍을 보며 자란 세대로, ‘선진국’ 일본에 대한 공감은 있으나, 기성세대만큼 동경이나 선망의 대상으로 여기지는 않으며,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적, 문화적으로 못하다는 열등감도 갖고 있지 않다. 더욱이 최근 코로나19 대응상황에서 나타난 일본의 낙후된 행정 시스템과 비효율적 관리 체계 등을 한국과 비교하며 우월감과 자부심을⁴⁸ 느끼

45. 이 외에도 예의(16.3%), 주장을 명확히 하는 것(15.4%), 역사에 대한 높은 관심(13.2%), 활력(12.2%), 전통문화(6%), 효도(5.7%), 예술적 재능(2.5%), 신앙심(1.6%) 등의 답변이 있다.

46. 이 외에도 애국심(18.8%), 독창성(15.9%), 역사에 대한 높은 관심(6.4%), 효도(3.7%), 정의감(2.3%) 등 답변이 있다.

47. 1989년과 1995년에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에서 실시한 대일 여론조사에 의하면, ‘주변 주요 5개국(미국, 소련, 일본, 중국, 북한) 가운데 ‘가장 싫은 나라’, ‘한국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힌 나라’, ‘가장 경계해야 할 나라’로 일본이 모두 1위를 차지하였다. 동시에 ‘가장 많이 배워야 할 나라’로도 일본이 1위를 차지하였다. - 정대균. 2000. 「한국인에게 일본은 무엇인가」. 도서출판 강.

48. ‘대한민국을 선진국이라고 생각한다’는 응답은 Z세대(10-20대)가 54%, 밀레니얼 세대(20-30대) 51%, 40-50대 47%, 50-60대 41.7%로 나타났는데, 이는 젊은 세대일수록 한국을 선진국으로 인식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을 보여준다. - [미래한국] “청년세대들의 이유 있는 反中” (2021.8.3) <http://www.futurekorea.co.kr/news/articleView.html?idxno=146122> (검색일: 2021.8.4).

기도 한다.⁴⁹ 이러한 경험은 이 세대들에게 선진-후발주자의 경쟁, 즉 수직관계에서 일본을 뒤따라가며 느끼는 경쟁의식이 아닌, 수평관계에서 일본을 경쟁자로 인식하게끔 한다. 이에 더하여 대중문화 개방 등으로 일본과의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일본여행, 문화, 음식 등으로 일본을 접할 기회가 많아졌던 점도 일본에 대한 반감을 줄이고, 기성세대와의 다른 인식을 형성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따라서 2030세대가 일본에 대해 갖는 반감은 기성세대의 반감과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다. 즉, 이들 세대에게 일본은 국가·민족·집단적 반감은 있으나, 반드시 이겨야 하거나 혹은 극복해야 하는 대상이라기보다는 국가적으로 불편한 관계에 있는 조금은 다른 ‘보통의’ 이웃 국가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 ‘문화는 문화, 역사는 역사’라는 분리된 사고(思考)

그럼에도 2030세대의 일본에 대한 높은 친근감은 한일관계 개선의 긍정적 요인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들의 일본에 대한 친근감이 40,50대 이상의 기성세대보다 높게 나타나고, 반감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것이 한일 갈등 사안에 대해 기성세대와 다른 태도로 이어질 것이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예를 들어, 「통일연구원」에서 시행한 ‘KINU 통일의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를 살펴보면, ‘코로나19 관련 대일협력’에 대한 질문에 대해 ‘적극 지원’, ‘일본 요청 시 지원’, ‘한일 문제 해결 후 지원’, ‘요청하더라도 지원 불가’라는 선택지 중, 전 연령대에서 ‘일본 요청 시 지원한다’는 응답이 51.2%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한일 문제 해결 후 지원한다’라는 선택지에 대해서는 밀레니얼세대(1991-2002년 출생자)⁵⁰가 가장 높은 비율(33%)을 차지한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즉, 이들이 일본에 대해 갖는 친근감과 달리

49. 필자가 인터뷰한 20대 한국인 대학생들은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로 ‘낙후된’,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구식의’, ‘아날로그’라는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여전히 신용카드를 사용할 수 없는 곳이 많아서”, “도장과 팩스를 아직도 쓴다는 것이 놀라워서”라는 답변을 하였다.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고, 디지털 기기에 익숙한 그들의 눈에 비친 일본은 변화하는 시대를 따라오지 못하고, 융통성 없는 모습이었다.

50. 동 조사에서는 코호트 분류기준으로 ‘전쟁세대’를 1950년도 이전 출생자, ‘산업화세대’를 1951-1960년 출생자, ‘386세대’를 1961-1970년도 출생자, ‘X세대’를 1971-1980년 출생자, ‘IMF세대’를 1981-1990년 출생자, ‘밀레니얼세대’를 1991-2002년 출생자로 구분하였다. - 이상신 외, 2020. 「통일의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통일연구원, p.39.

한일 갈등 사안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다른 예로, 지난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일본제품 불매운동, 일본여행 보이콧 등에 젊은 세대의 참여가 높았던 점도 이들의 역사 문제를 중심으로 한 갈등 사안에 대한 태도가 어느 세대 못지 않게 강경함을 나타낸다.

그렇다면 이처럼 전쟁과 식민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2030세대가 역사 문제에 강경한 태도를 취하는 이유는 무엇일까.⁵¹ 이에 대해서는 실제로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갖는 파편적인 기억과 달리, 미디어를 통해 통합적으로 전달받은 기억이 보다 강렬하고 축약적이기 때문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⁵² 특히, 대부분의 정보를 인터넷, 미디어 등을 통해 얻는 이 세대에겐 디지털 공간과 같이 정보량이 많은 상황에서 역사의식은 더 민감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⁵³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인터넷상의 정보를 수용하기에 앞서, 잘못된 정보를 구분해 낼 수 있는 능력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아직 이러한 체계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결국 온라인상의 범람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통합적이고 총체적인 이해와 균형적인 사고보다는 치우친 정보에 기반한 편파적인 사고가 이루어질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일본 대중문화의 유입, 한일월드컵 공동 개최 등 한일 우호의 시기를 경험한 현재의 30, 40대와 달리, 현재 10, 20대가 겪어온 지난 10여 년간의 한일관계는 협력보다는 갈등과 대립이 두드러진 시기였다. 2012년 이후 악화일로에 접어들었던 한일관계를 상기해 볼 때, 젊은 세대일수록 이들 기억 속에 한일관계는 협력보다는 대립하는 관계였으며, 우호적인 시기는 거의 없었거나 매우 짧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한일관계에서 이들이 갖는 역사 문제에 대한 강경한 태도는 기성세대가 갖는 국가를

51. 흥미로운 점은 1970년대와 1980년대에 실시된 여론조사에서도 당시 20대인 젊은 세대, 즉 식민시대를 경험하지 않은 젊은 세대와 대학생 집단이 일본에 대한 반감이 높았다는 것이다. 정대균(2000)은 이에 대해 사회에 나오지 않은 젊은 세대가 일본을 정치, 사회, 문화 등 포괄적인 측면에서 이해하나, 사회에 나온 30대 이상부터는 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하였다. - 정대균. 2000. 「한국인에게 일본은 무엇인가」. 도서출판 강.

52. [주간조선] 「[MZ세대가 쓴 MZ세대 사용법] “586은 반미, 우리는 반중!” MZ 세대의 중국 혐오를 키운 것은?» (2021.5.24) <https://weekly.chosun.com/client/news/viw.asp?nNewsNumb=002659100011> (검색일: 2021.7.25).

53. 임지현. 2019. 「기억전쟁」. 휴머니스트.

중심으로 한 민족주의, 애국심과는 다르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성세대의 일본에 대한 반감이 ‘국가 대 국가’의 민족주의적 대항이었다면, 젊은 세대는 ‘공정과 정의’이라는 키워드로 한일 갈등을 바라본다. 일본의 수출규제 이후 일었던 불매운동에 대한 동참도 민족주의적 가치와 애국심이라기보다는 이웃 국가의 ‘부당한 대우에 대한 당당한 항의’⁵⁴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부여되어 있었다.

이미 많은 연구들을 통해 증명되었듯, 상대국에 대한 친근감과 관심이 상대국에 대한 이해로 이어지는 파급효과는 제한적이다. 현재의 MZ세대 또한 기성세대보다도 일본과의 교류가 많고, 문화적으로 친근하며, 일본에 대한 선입견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세대이지만 양국관계에 대한 사회적 기억은 부정적이고, 일본에 대한 반감은 기성세대보다 작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이들의 기억은 스스로 ‘경험을 통해 형성’된 것이 아닌, 사회적으로 형성된 기억을 ‘전달받은’ 것이며, 그 안에서 자신들의 가치(공정, 정의 등)로 사안을 바라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순히 ‘반감을 갖는 대상’이 아니라, ‘반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이 얹혀 있는 대상인 것이다. 결국 한일관계를 대하는 이들의 인식은 “문화는 문화, 역사는 역사”라는 ‘사고의 분리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54. [동아일보] “불매운동은 한국 소비자의 선택… 위안부는 민족 아닌 인권문제” (2019.9.4) <https://www.donga.com/news/Opinion/article/all/20190904/97260090/1> (검색일: 2021.7.30).

3. 일본의 인식: 한국은 일본에게 무엇인가

일본 「내각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는⁵⁵ 일반 국민들의 외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이다.⁵⁶ 1975년부터 매년 실시되고 있는 이 조사는 2020년까지 총 45회 실시(1976년 제외, 1차: 1975년, 2차: 1977년)되었으며, 이 중,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에 대한 친근감, 현재 관계 평가, 중요도 등을 질문하는 주변국에 대한 인식은 1978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⁵⁷ 주로 매년 10월(2015년도 조사, 2016년 1월 시행⁵⁸) 꾸준히 조사되고 있다. 2021년 12월 현재, 가장 최근 자료는 2020년 10월에 실시되어 2021년 2월에 발표되었다. 이 중 한국에 대한 인식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3.1 (인식①) 일본의 대한국 인식: 부정 → 긍정 → 부정

[그림 3-1]은 1978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친근하게 느낀다’와 ‘친근하게 느끼지 않는다’)⁵⁹을 나타낸 것이다. 앞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인식(호감, 좋은 인상, 친근감, 신뢰감 등)’이 어느 조사를 보더라도,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높게 나타났던 것과 달리,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변화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

55. 동 조사에 대한 상세설명은 부록 1 참조.

56. 정대균(1999)의 연구에서 언급된 바에 의하면, 1939년, 1949년에 구스노키가 일본인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러 민족에 대한 호감 조사”, 1951년 이즈미 세이이치가 도쿄 도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이민족에 대한 태도 조사” 등이 있는 것으로 여겨지나, 조사 대상이 지엽적이고, 지속적으로 실시된 조사가 아니어서 본 연구에서는 내각부 조사자료를 기반으로 한다. - 정대균, 1999. 「일본인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도서출판 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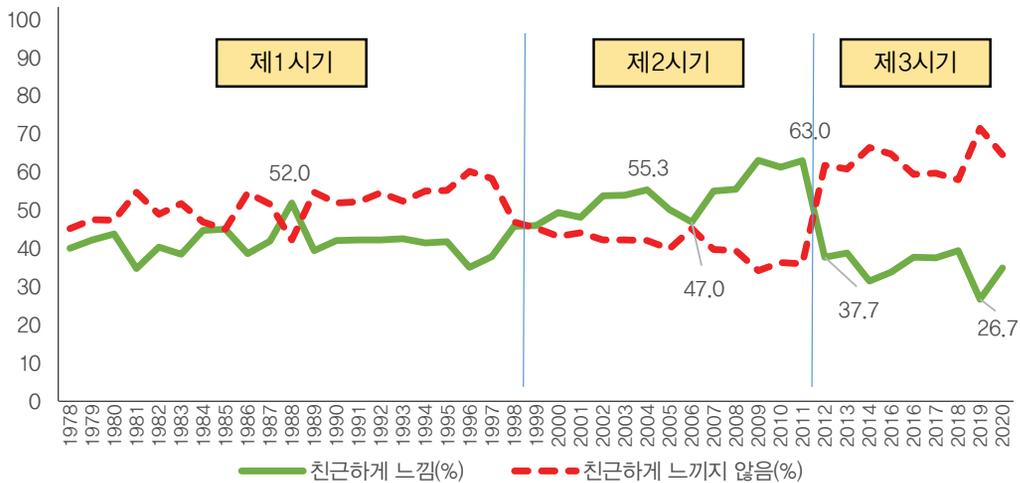
57. 2020년도 조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기존과 달리 우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내각부에서는 2020년의 조사 결과를 기존 자료와 단순히 비교하는 것에 대해 주의할 것을 밝히고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동 조사가 일본의 대외인식에 대해 가장 오랜 기간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무이한 조사라는 점에서 해당 자료(2020년도)까지 포함하여 참고하고자 한다.

58. 2015년도 조사의 경우, 2016년 1월 7일부터 1월 17일까지 열흘간 실시되어 같은 해 3월에 발표하였다. 이에 따라 동 조사 결과를 활용한 이하의 그래프에서는 2015년이 아닌 2016년으로 표기하였다.

59. ‘친근감을 느낀다’는 “親しみを感じる”(친근감을 느낀다), “どちらかというと親しみを感じる”(어느 쪽인가 하면 친근감을 느낀다)를,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どちらかというと親しみを感じない”(어느 쪽인가 하면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와 “親しみを感じない”(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를 더한 것이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이 일관되게 일본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높게 가지고 있다면, 일본은 한국에 대해 긍정이 부정보다 높게, 혹은 부정이 긍정보다 높게 나타나는 등 변화가 두드러졌다.⁶⁰ 이를 긍정적 인식과 부정적 인식이 역전되는 시점인 1998년과 2012년을 기준으로 하면 총 3개의 시기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림 3-1]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1978-2020)



※ 출처: 내각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 참조: 2015년 조사는 2016년 1월에 시행, 상세사항 각주 58 참조.

먼저 【제1시기】는 1978년부터 1998년까지로 긍정적 인식보다 부정적 인식이 다소 높았던 시기이다. 1988년 일시적으로 긍정적 인식(52%)이 부정적 인식(42.3%)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지만, 다시 부정적인 인식이 긍정적인 인식을 상회하였다. 1988년 긍정적 인식의 증가는 1987년 한국의 민주화 및 1988년 서울올림픽의 영향이었던 것으로 여겨진다. 1987년 민주화 이전의 한국은 일본에게 군부정권에 대한 두려움이 앞선 곳이었으나,⁶¹ 이후 한국이 일본과 동일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되었으며, 1988년 서울올

60. 정대균(1999)은 일본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무관심과 관심 회피의 시기(1945-1965), 정치적 관심의 시기(1965-1984), 문화적 관심의 시기(1984-1990년대)로 나뉜다고 보고, 1980년대를 기점으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크게 변화한다고 보았다. 더불어 이와 같은 일본인의 인식 변화는 '단절의 시기'에서 '일방 통행의 시기'를 거쳐 '교류의 시대'로 이어지는 한일관계와 부합한다고 보았다. - 정대균. 1999. 「일본인은 한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도서출판 강.

림픽 등을 계기로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은 보다 확산되었다.⁶² 그러나 1990년대의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 대두에 따른 역사 마찰, 한일어업협정 파기 등 악재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1998년 이전의 한일관계는 갈등과 대립 사안이 빈번하게 발생하였고, 이에 따라 긍정적 인식보다는 부정적 인식이 더 많았던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제2시기】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높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에도 2004년 55.3%에서 2006년 47%로 긍정적 인식이 하락한 시기도 있었지만, 이 시기에도 여전히 긍정적 인식(‘친근하다’, 47%)이 부정적 인식(‘친근하지 않다’, 45.2%)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당시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다른 시기보다 높게 나타난 이유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이후, 일본 대중문화 개방과 일본 내 한국문화의 유입과 한류붐, 한일 교류 활성화 등에 따른 영향이었을 것으로 여겨진다.⁶³ 그러나 2000년대 중반 한일 간의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등은 양국관계를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일본의 대한국 인식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마지막으로 【제3시기】는 2012년 이후부터 현재까지로 부정적 인식이 급격히 증가한 시기이다. 특히,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⁶⁴ 천황 사죄 발언은⁶⁵ 일본 사회에 큰 반감을 불러일으켰고, 보수우익 성향의 아베 정권의 등장과 맞물려 한국에 대한 반감이 크게

61. 쓰지무라 아키라(辻村明)(1982)의 연구에서 ‘한국’이라는 단어를 듣고 일본인들이 떠올린 것은 ‘김대중사건’ 16.1%, ‘남북한 대립’ 13.8%, ‘최근 급속한 경제성장’ 13.6%, ‘이웃 나라’ 12.7%, ‘한국전쟁’ 12.1%, ‘박정희 대통령’ 11.6%, ‘박정권 독재정치’ 10% 순으로 나타났다. - 辻村明 외. 1982. 『日本と韓国の文化摩擦』出水書店.

62. 1984년에 실시된 ‘동아일보-아사히신문’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국이라고 하면 무엇이 떠오릅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김치/한국요리 등 음식’, ‘민족의상/춤/문화’, ‘일본침략 및 학대’, ‘서울올림픽’ 순으로 나타났으며, 1990년의 조사에서는 ‘일본침략 및 학대’, ‘김치/한국요리 등 음식’, ‘싫다’, ‘경제 발전’, ‘서울올림픽’ 순으로 조사되었다. - [朝日新聞] 1984.11.27.

63. 한편, 이 시기는 동시에 일본 내 혐한(嫌韓) 인식이 증가하던 시기이기도 하다. 일본에서 혐한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은 1992년이었으나, 2005년 「만화 혐한류」가 출판되고 인기를 끌며 혐한 출판물이 붐을 형성한다. 「만화 혐한류」에는 “대한민국의 2002년 월드컵 4강 진출은 심판의 오심이 결정적이었다”, “대한민국은 독도를 국제법상 부당하게 점유하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 일본의 혐한 현상에 대해서는 이홍천 외. 2017. 「일본 출판 미디어의 혐한의 현황과 비판적 고찰」 제1회 학봉상 논문 및 연구 지원사업 연구보고서 참조. http://law.snu.ac.kr/data/hb_award/1/1_rnd_support_03_leehongchun_kimmilim_leekyungeun_hwangsunhye_kor.pdf (검색일: 2021.7.10).

64. [YTN] “일본, 이명박 대통령 독도방문 강력반발” (2012.8.10) https://www.ytn.co.kr/_ln/0104_201208101807577986 (검색일: 2021.7.1).

증가하였다. 이러한 인식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한 상황에서 2018년 이후 심화된 양국 갈등 등으로 2019년도 한국에 대한 친근감은 1978년 조사 이래 최저치인 26.7%를 기록하였다. 한편, 2020년도 조사에서는 전년도인 2019년도 26.7%에 비해 8.2%p 상승하여 34.9%를 기록하였다. 2020년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적은 수치이지만 반등한 이유로는 ‘사랑의 불시착’, ‘이태원 클라쓰’와 같은 한국드라마, K-POP 등 일본 내 제4차 한류붐의 영향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⁶⁶

그러나 조금 더 긴 시간의 흐름에서 본다면, ‘한국에 대한 일본의 친근감’은 2012년 급격히 하락한 이후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으며, 동 조사를 시작한 1978년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알 수 있다. 또한, 2019년(26.7%)에서 2020년(34.9%)로 8.2%p 반등하였지만, 이는 하락하기 직전인 2018년(39.4%)보다도 낮은 수치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약간의 상승을 긍정적인 신호로 보기에는 아직 이르다. 다시 말해, 현재의 미미한 수치 상승에 낙관하고 기대를 걸기에는 그 수치가 여전히 낮고,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이후 쌓아온 수십 년의 문화 및 인적 교류에도 불구하고 크게 하락하였고, 장기간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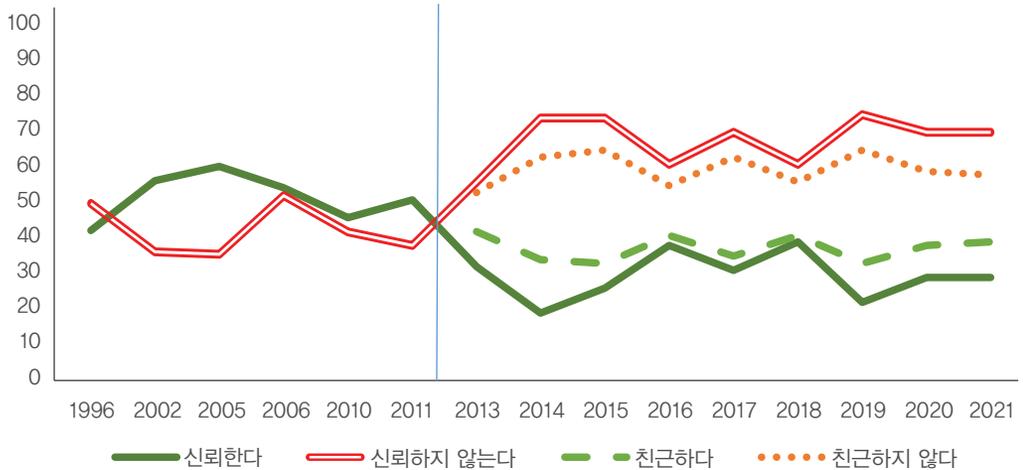
이와 같은 인식의 변화는 타 여론조사에서도 확인된다. [그림 3-2]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의 조사 결과와 같이, 2010년대 이전에는 한국에 대해 ‘신뢰한다’는 응답이 ‘신뢰하지 않는다’보다 높거나 비슷하게 나타났지만 2011년 이후 ‘신뢰하지 않는다’가 ‘신뢰한다’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013년도 이후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에 대해 앞서 [그림 3-1]과 마찬가지로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높게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그림 3-3]의 「동아시아연구소-言論NPO」의 조사에서도 2013년 이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일본의 ‘한국에 대한 부정적 인상’은 ‘긍정적 인상’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현재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 또한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65. [연합뉴스] “日, 李대통령 일왕 사과 요구 발언에 반발” (2012.8.14) <https://www.yna.co.kr/view/AKR20120814191100073> (검색일: 2021.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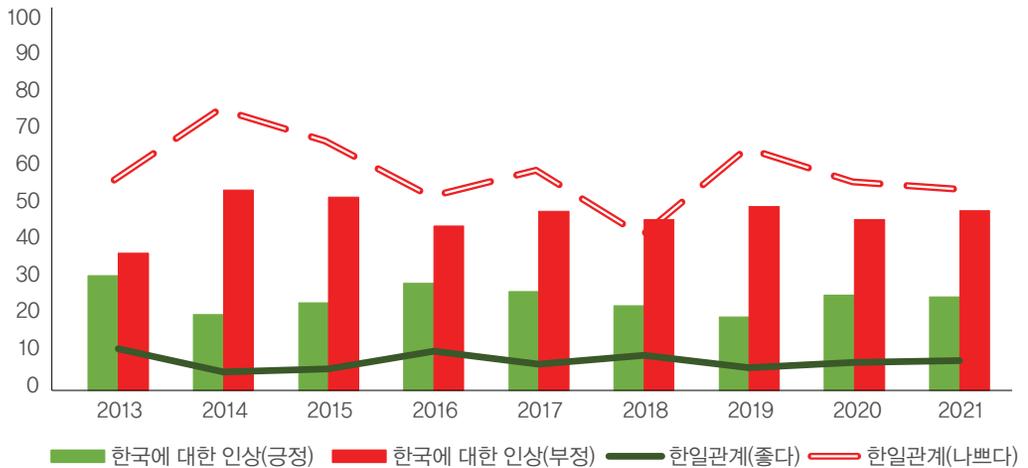
66. [서울신문] “‘사랑의 불시착’ 효과?... 일본 국민 “한일관계 개선” 평가 늘었다” (2021.2.19)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19500216> (검색일: 2021.7.1).

[그림 3-2] 일본의 한국에 대한 신뢰감(1996-2021) 및 친근감(2013-2021)



※ 출처: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한일공동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그림 3-3]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성과 한일관계 평가(201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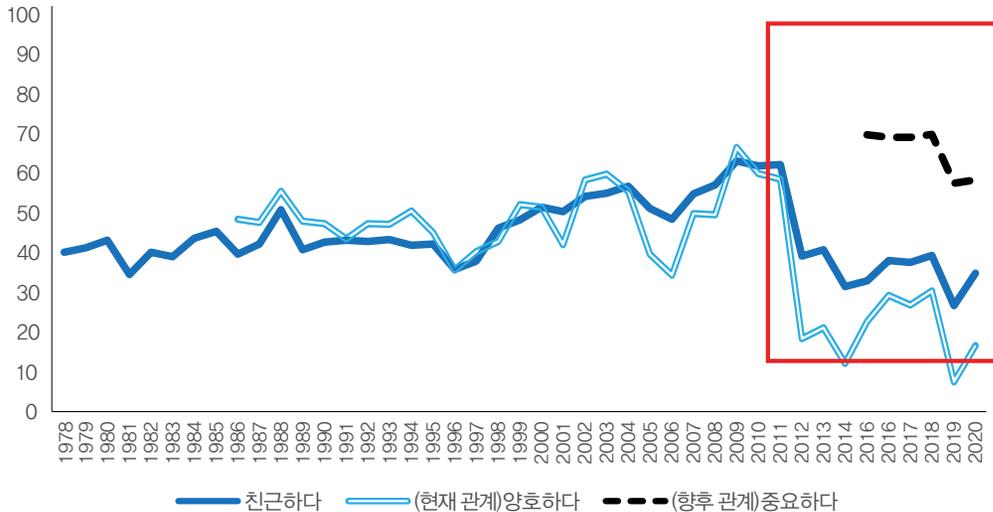


※ 출처: EAI-言論NPO.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각 년도 조사자료 참조하여 필자 작성.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인식은 일본 사회 전반에 확산되어 있는 것인가, 혹은 특정 집단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이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앞서 제시한 「내각부」의 여론조사 결과를 성별, 세대별로 분석해 보았다.

■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관계 평가/관계 발전의 중요성

[그림 3-4] 일본의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인식: 친근감/관계 평가/관계 발전의 중요성(1978-2020)



※ 출처: 내각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 참조: 2015년 조사는 2016년 1월에 시행, 상세사항 각주 58 참조.

[그림 3-4]는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1978-2020), 일본과의 관계 평가(1987-2020), 향후 일본과의 관계 발전 중요성(2015-2020)에 대한 긍정적 답변을 하나로 나타낸 것이다. 각 문항별로 조사가 시작된 시기는 다르지만, 전반적인 추이 변화를 살펴보면, '친근감'과 '관계 평가', '향후 관계 발전의 중요성'이 비교적 유사한 추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성별, 세대별로 상이한 점들이 발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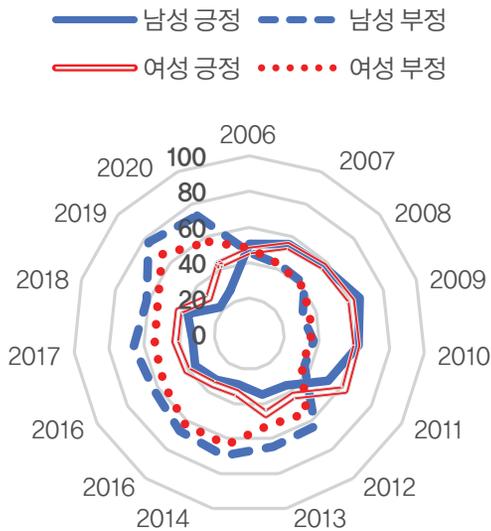
■ 여성보다 부정적인 남성

[그림 3-5]와 [그림 3-6]은 2006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과 '한일 관계 평가'를, [그림 3-7]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향후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성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세 가지 항목 모두 전반적으로 여성에 비해 남성이 더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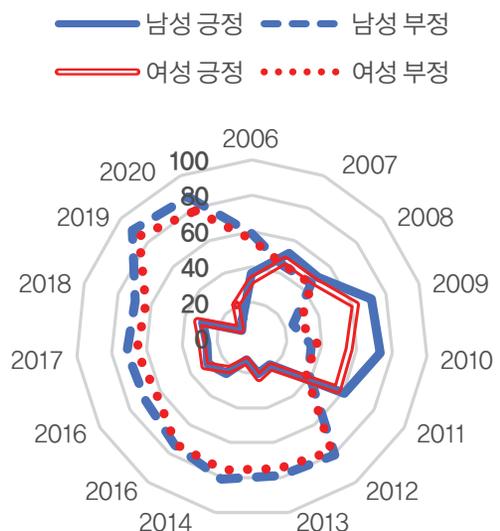
구체적으로 [그림 3-5]의 2006년부터 2020년까지 15년의 기간 중, 부정적 인식이 가장 높

왔던 시기와 낮았던 시기를 비교해보고자 한다. 남성의 경우, 부정적 인식이 가장 낮았던 2009년 31.8%(‘친근하지 않은 편이다’ 18.1%, ‘친근하지 않다’ 13.7%)⁶⁷와 가장 높았던 2019년 77%(‘친근하지 않은 편이다’ 30.7%, ‘친근하지 않다’ 46.3%)를 비교하면 45.2%p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도, ‘친근하지 않은 편이다’가 12.6%p 상승한 것에 비해 ‘친근하지 않다’라는 극단적인 부정 인식이 32.6%p 상승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우 부정적 인식이 가장 낮았던 2011년 34.6%(‘친근하지 않은 편이다’ 19%, ‘친근하지 않다’ 15.6%)와 가장 높았던 2019년 66.6%(‘친근하지 않은 편이다’ 30.9%, ‘친근하지 않다’ 35.7%)를 비교하면 32%p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에서도 ‘친근하지 않은 편이다’가 11.9%p 상승한 것에 비해, ‘친근하지 않다’라는 극단적인 부정 인식이 20.1%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인식이 남성 45.2%p, 여성 32%p 증가하였지만, 그중에서도 ‘친근하지 않다’라는 극단적인 부정적 인식 변화가 남성 32.6%p, 여성 20.1%p로 나타나 실질적인 친근감은 수치상의 차이보다 더 멀어졌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여성에 비해 남성의 부정적 인식이 변동 폭이 크다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그림 3-5] 친근감(2006-2020): 성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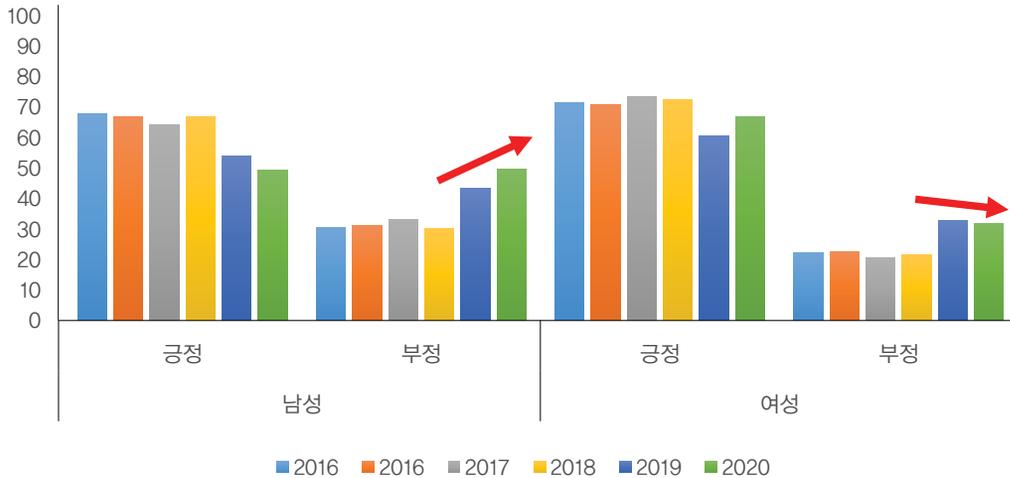
[그림 3-6] 한일관계 평가(2006-2020): 성별



※ 출처: 내각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 참조: 2015년 조사는 2016년 1월에 시행, 상세사항 각주 58 참조.

[그림 3-7] 일본의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2016-2020): 성별



※ 출처: 내각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 참조: 2015년 조사는 2016년 1월에 시행, 상세사항 각주 58 참조.

마찬가지로, [그림 3-6]의 '한일관계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가장 낮았던 2009년도와 가장 높았던 2019년도를 비교할 경우, 남성의 경우, 2009년 25.1%('양호하지 않은 편이다' 18.9%, '양호하지 않다' 6.2%)⁶⁷, 2019년은 90.7%('양호하지 않은 편이다' 27.1%, '양호하지 않다' 63.6%)로 전체적으로는 65.6%p 증가하였지만, '양호하지 않은 편이다' 8.2%p보다 '양호하지 않다'라는 극단적 부정적인 평가가 57.4%p 증가하였다. 한편, 여성의 경우, 2009년 29.4%('양호하지 않은 편이다' 22.8%, '양호하지 않다' 6.6%), 2019년 85.3%('양호하지 않은 편이다' 32.9%, '양호하지 않다' 52.4%)로 전체적으로는 55.9%p 증가하였지만, '양호하지 않은 편이다' 10.1%p보다 '양호하지 않다'라는 극단적 부정적인 평가가 45.8%p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즉, 전체적으로는 부정적인 인식이 남성 65.6%p, 여성 55.9%p 증가하였지만, 그중에서도 '양호하지 않다'라는 극단적인 부정적 인식의 변화가 남성 57.4%p, 여성 45.8%p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실제로 체감하는 관계 악화 인식은 남성이 여성보다 더 크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친근감에 대한 조사와 마찬가지로 남성의 부정

67. 일본어 원문은 "親しみを感じない"(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 "どちらかというと親しみを感じない"(어느 쪽인가 하면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이지만, 보다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위해 의역하였다.
 68. 일본어 원문은 "あまり良好だと思わない"(그다지 양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良好だと思わない"(양호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이지만, 보다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위해 의역하였다.

적 평가가 여성의 부정적 평가보다 높게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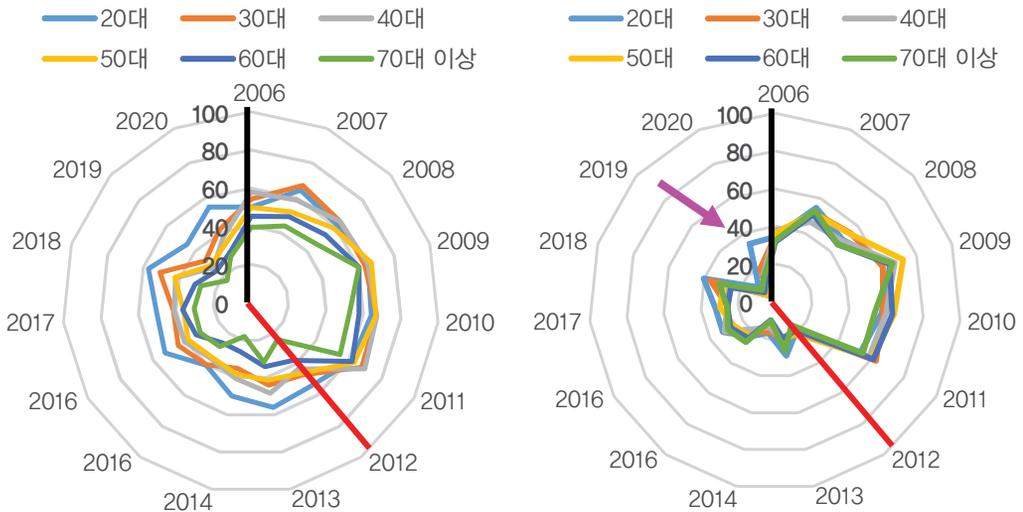
이와 같은 인식은 ‘향후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3-7]과 같이 여성보다는 남성이 ‘향후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높아지고,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으로 상승하였던 2019년도에서 2020년의 시기에도 남성들은 ‘향후 한일관계의 발전에 대한 중요성’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요약하면, 남성이 여성보다 한국에 대한 친밀감 및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한다. 이는 곧 한국과의 감정적인 유대감이 낮고, 한일관계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더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 20대의 긍정적 인식 상승 대비 30, 40대의 부정적 인식 증가에 주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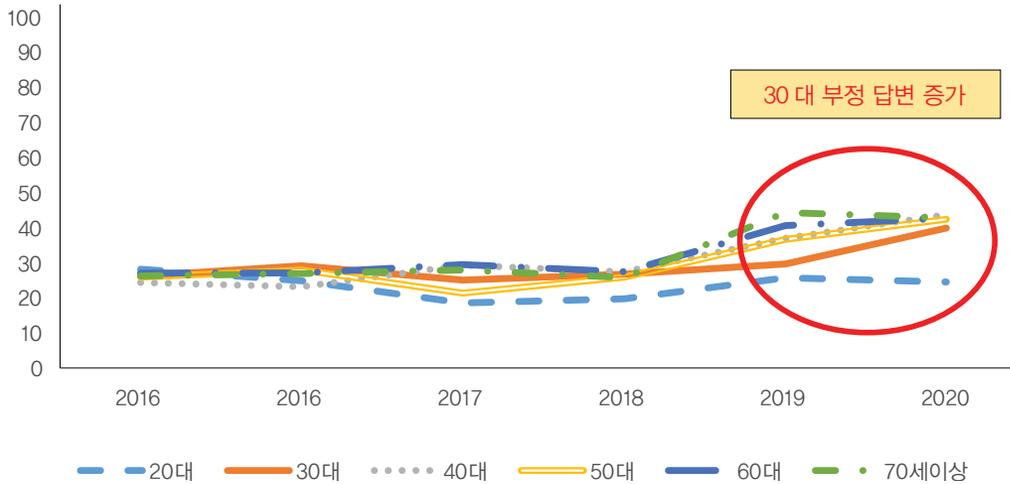
그렇다면 연령별로는 어떠한 변화양상이 나타나는가. 앞서 제시한 내각부의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2006-2020)를 연령별로 다시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8] 친근감(2006-2020): 세대별 ‘긍정’ [그림 3-9] 관계 평가(2006-2020): 세대별 ‘긍정’



※ 출처: 내각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 참조: 2015년 조사는 2016년 1월에 시행, 상세사항 각주 참조.

[그림 3-10] 일본의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성 인식(2016-2020): 세대별 '부정' 답변



※ 출처: 내각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 참조: 2015년 조사는 2016년 1월에 시행, 상세사항 각주 58 참조.

[그림 3-8]에서 알 수 있듯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은 연령이 낮을수록 높게, 연령이 높을수록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에 대해 2006년에서 2020년까지 15년의 시간적 흐름이 있고, 2016년부터 18세부터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음을 감안 하더라도, 크게 다르지 않다. 앞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을 긍정과 부정이 역전되는 시점을 기점으로 1978년부터 2020년까지를 총 3개의 시기(【제1시기】 1978~1998/부정, 【제2시기】 1998~2012/긍정, 【제3시기】 2012~현재/부정)로 나누었는데, 그중 【제2시기】에 해당하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의 기간은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긍정적 인식이 부정적 인식보다 높았던 시기이다. 이 시기의 그래프를 보면 60, 70대의 긍정 인식이 다른 세대에 비해 낮게 나타나지만, 그 폭이 세대별로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러나 2012년 이후의 양상은 크게 달라진다. 즉,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급격히 하락했던 2012년 20, 30대와 60, 70대의 인식이 크게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20대의 경우,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2년 이후에도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매우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인 수치로 보면,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급격히 하락했던 2012년 20대는 61.3%에서 53.8%로 7.5%p 하락한데 반해, 70대 이상은 54.3%에서 23.8%로 30.5%p 크게 하락하였다.

한편, [그림 3-9]의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에서는 전반적으로는 전 세대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020년도 긍정평가가 60대 7.3%에서 11.9%로 4.6%p, 70대

이상이 9.3%에서 14.3%로 5%p로 소폭 상승한 것과 달리, 20대의 긍정 평가가 2019년 11.6%에서 2020년 33.8%로 22.2%p 상승해 다른 세대에 비해 변동 폭이 크게 나타나는 시기도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전 세대가 비교적 유사한 추이를 보인다. 다만, 한일관계가 상대적으로 양호했던 2012년도 이전, 구체적으로는 2007년에서 2010년까지 긍정적 평가의 상위에 50대가 있었다면, 한일관계가 악화되었던 2012년도 이후, 보다 구체적으로 2018년도 이후부터 현재까지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60대가 된 기존의 50대의 부정적 인식이 증가하고, 여론조사 대상으로 새롭게 진입한 20대가 한일관계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현재 한일관계의 긍정 평가는 20대가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음으로 [그림 3-10]은 일본의 ‘향후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나타낸 것이다. 이를 통해, ‘향후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또한 연령이 높을수록 부정적인 평가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은 30대의 인식 변화이다. ‘향후 한일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묻는 질문에서 30대의 부정적 인식의 증가 폭(2019년 29.5% → 2020년 39.8%)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크게 증가한 점에 주목할 만하다. 문항별로 조사 시작 시점에 따라 5년, 혹은 15년의 시간적 흐름이 있다는 점을 감안 하더라도 이들이 20대 초중반이었던 2000년대 중후반은 일본 내 한류붐이 일던 시기로 이들 또한 한류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은 세대이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에서 한류가 세대별로 어느 정도 확산되어 있는지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한류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하지만 2000년대 중반 제1차 한류붐이 주로 중장년 여성층에 집중되었던 것과 달리, 2010년을 전후로 한 K-POP 중심의 제2차 한류붐에서는 아이돌 그룹을 좋아하는 젊은 여성층과 남성층까지 폭넓게 확대되었다는 점에서⁶⁹ 현재의 30대가 그들의 관심도나 선호도와 관계없이 한류를 쉽게 접할 수 있었던 세대라는 점에서 한류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현재 이들의 인식은 20대가 아닌 40, 50대와 더 가깝다. 문화를 매개로 한 친근감이 국가 간 관계의 중요성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정치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비정치적 교류가 정치적 교류로 확산 효과가 일어나지 않는 기능주의적 접근의 한계로도 볼 수 있다. 사회학적 관점에서 보자면, 개인이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자연스럽게 생각과 태도, 정치적 성향 등이 바뀌는 ‘연령 효과

69. 한영균. 2020. “일본 내 한류의 현황과 한일관계: 한류의 문화외교 기능을 중심으로,” 「국제학논총」 제32집, p.12.

(age effect)'로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이 세대가 공통으로 경험한 고유의 정치·사회·문화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⁷⁰ 개념에서 본다면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후술하고자 한다.

요약하자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 즉 친근감, 관계 평가, 향후 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여성보다는 남성, 그리고 낮은 연령대보다는 높은 연령대에서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국에 대한 친근감 및 한일관계에 대한 긍정적 평가가 2012년 이전에는 50대 이상의 중·장년층 중심이었다면, 현재는 20대의 젊은 세대가 그 중심에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3.2 (인식②) 주변국과의 비교: 친근감, 관계 평가, 중요성

■ 친근감: 미국 > 중국 - 한국 > 러시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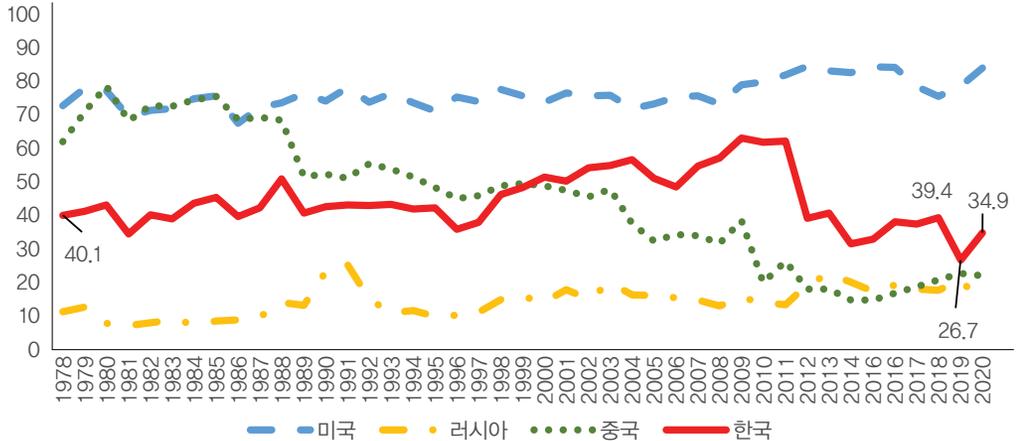
[그림 3-11]은 1978년부터 2020년까지 '일본의 주변국(미국, 중국, 러시아, 한국)에 대한 친근감('친근하다'+'비교적 친근하다')⁷¹을 나타낸 것이다. 조사에서는 시기에 따라 호주, 인도, 동남아시아, 유럽,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중남미 카리브, 대양주 등이 추가 혹은 제외되기도 하였는데, 1978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질문하고 있는 것은 미국, 러시아, 중국, 한국 등 4개국이 유일하다. 이를 한국에 대한 인식과 비교하여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은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 이는 함께 조사된 미국, 러시아, 중국에 대한 친근감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크게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제1시기】인 1978년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40% 전후의 수치로 비교적

70. 세대연구의 대표적 사회학자인 칼 만하임(Karl Mannheim)은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세대들이 동일한 생애주기 단계에서 동일한 역사적 사건을 경험함으로써 의식과 행위양식 면에서 동질적일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한다. - Mannheim, Karl, 1952, "The Problem of Generations," 「Essays on the Sociology of Knowledge」,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pp.276-320; 박재홍, 2001, "세대연구의 이론적·방법론적 쟁점," 「한국인구학」 24(2), pp.47-78.

71. 일본어 원문은 "親しみを感じる"(친근감을 느낀다), "どちらかというと親しみを感じる"(어느 쪽인가 하면 친근감을 느낀다)이지만, 보다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위해 의역하였다.

[그림 3-11] 일본의 주변국에 대한 친근감(1978-2020): 긍정 답변



※ 출처: 내각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 참조: 2015년 조사는 2016년 1월에 시행, 상세사항 각주 58 참조.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나, 【제2시기】인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까지는 상승곡선이 나타난다(2004-2006년 제외). 그러나 2012년도에 급격히 하락한 이후 다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제3시기】인 2019년도에는 1978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친근감인 26.7%를 기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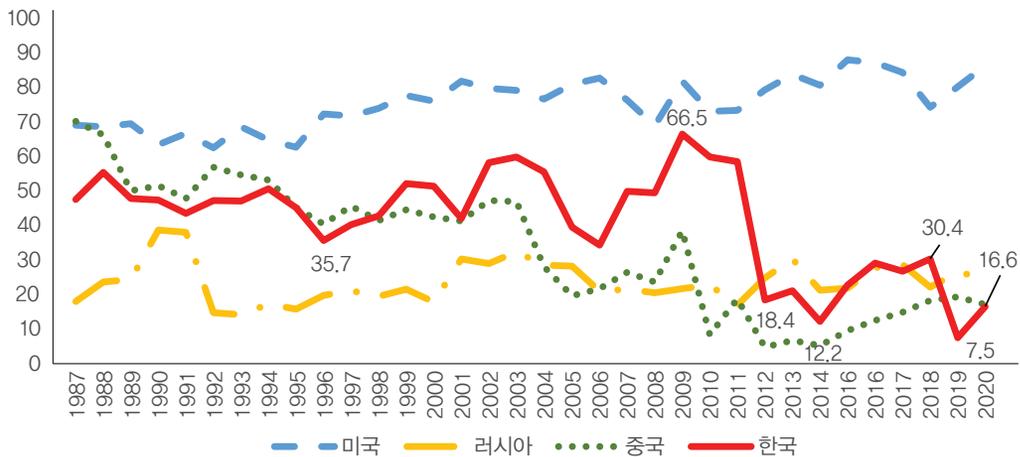
한편, 미국에 대해서는 70~80%대(평균 76.2%)의 높은 친근감을, 러시아에 대해서는 10~20%대(평균 14.5%)의 낮은 친근감을, 중국에 대해서는 일시적인 상승 시기는 있으나, 1980년대 후반부터는 전반적으로 친근감이 저하되는 하향 곡선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⁷² 이는 1980년대 초·중반 중국에 대한 친근감이 미국과 유사할 정도로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현재는 그 정도가 현저히 악화된 것이라 볼 수 있다.⁷³

72. 일본의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1989년 천안문사건 등을 비롯한 공산주의 체제에 대한 반감, 2000년대 중국에서의 반일 운동, 2012년도 센카쿠 갈등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2010년 9월 센카쿠열도 주변 인근 해상에서 일본 해상보안청 순시선과 중국 어선이 충돌하면서 중일 갈등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당시 일본은 해당 선박의 중국인 선장을 구금하였고, 중국은 이에 일본의 희토류 수출을 금지하는 것으로 대응하였다. 2012년 일본 노다 정권이 센카쿠 섬 일대를 국유화하고, 실효 지배를 강화하며 중일 갈등이 한층 격화되었다.

■ 관계 평가: 미국 > 중국 - 한국 > 러시아

친근감과 마찬가지로, 한국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변화 폭이 크게 나타났다. 조사기간 중 1990년대 전반까지 40~50%대의 긍정적인 평가가 이어졌으나, 1996년 35.7%로 하락하고, 등락을 반복하였다. 이후 2009년에 66.5%까지 상승하지만, 2012년(58.5%→18.4%), 2014년(21.1%→12.2%), 2019년(30.4%→7.5%) 급락하였다. 특히, 2019년은 1987년 조사 시작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인 7.5%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현재의 악화된 한일관계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2020년도의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는 16.6%로 2019년도에 비해 9.1%p 상승하였으나, 앞서 [그림 3-11] 친근감 조사와 마찬가지로, 하락하기 직전인 2018년 30.4%보다 낮은 수치이고, 1987년부터 2020년 현재까지 30여 년의 전체 기간 중 가장 낮은 범위에 머물러 있다. 따라서 그래프에 근거한다면, 일본 여론은 현재의 한일관계에 대해 조사가 시작된 1987년 이후 가장 악화된 상태로 인식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12] 일본의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한 평가(1987-2020): 긍정 답변



※ 출처: 내각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 참조: 2015년 조사는 2016년 1월에 시행, 상세사항 각주 58 참조.

73. 구체적으로, 1980년부터 1988년까지 일본의 '미국에 대한 친근감'과 '중국에 대한 친근감'은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으며, 근소한 차이지만 '중국에 대한 친근감'이 '미국에 대한 친근감'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1980년: 미국 77.2%, 중국 78.6%, 1982년: 미국 71.4%, 중국 72.7%, 1983년: 미국 71.9%, 중국 72.5%, 1986년: 미국 67.5%, 중국 68.6%).

한편,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평균 75.5%가 양호하다고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러시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40% 이하의 구간에서 등락이 반복되고는 있다(평균 23.7%). 중국과의 관계는 조사가 시작된 1987년 당시에는 양호하다는 평가가 미국과의 관계 평가보다도 다소 높게(1987년 중국: 70.2%, 미국: 69%) 나타났으나, 이후 30여 년간 하향 곡선을 그리며, 긍정적 평가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프에서 나타나듯, 1992년(47.9%→56.9%), 2009년(23.7%→38.5%), 2011년(8.3%→18.8%) 등 상승 시기도 있었으나, 2004년(46.9%→28.1%), 2010년(38.5%→8.3%), 2012년(18.8%→4.8%) 급락하였다. 2014년도 이후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는 하나, 여전히 20% 미만의 낮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된 것으로 평가한 배경에는 2010년, 2012년 중일 간 센카쿠 열도 분쟁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 중요성: 미국 > 중국 - 러시아 > 한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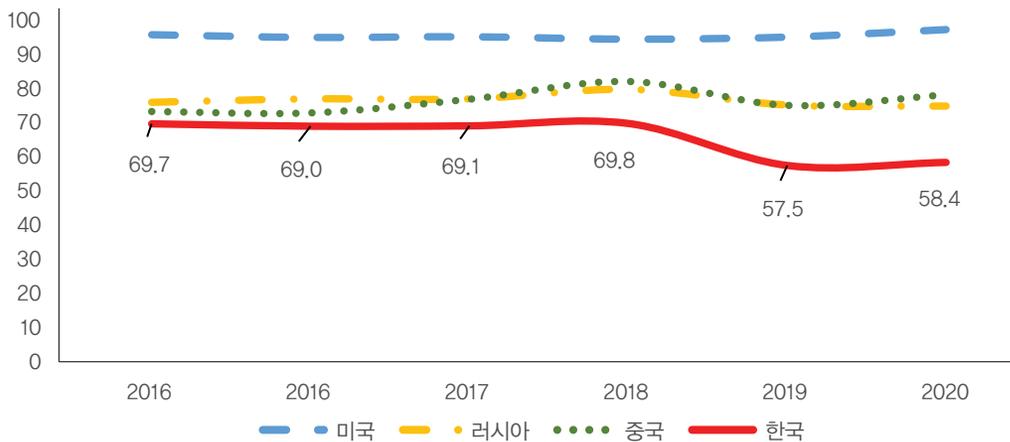
흥미로운 점은 [그림 3-13]의 일본의 '주변국과의 향후 관계 발전에 대한 중요성('중요하다' + '중요한 편이다'⁷⁴)에 대한 인식'이다. 일본은 미국과의 관계 발전에 대해 90% 이상(평균 95.5%)의 응답자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 발전 또한 미국에 비해 낮지만, 러시아 76.7%, 중국 76.4%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는 앞서 중국, 러시아에 대한 낮은 친근감과 현재 관계에 대한 낮은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일본이 향후 중국과의 관계 발전을 중요하게 인식하는 이유는 경제 분야에서의 협력, 안보 분야에서의 위협 감소 및 지역 안정을 위한 목표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일본은 중국을 친근감도 낮고, 관계도 양호하지 않고, 위협적이지만, 중요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한국과의 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이 국가들과는 다른 인식이 나타난다. 구체적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약 70%, 2019년과 2020년도에는 응답자의 약 60%가 한국과의 관계 발전이 중요하다 응답하였으나, 함께 조사된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비교하였을 때는 그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상대적으로 낮고, 그조차도 점차 하락하고 있다. 2020년도 조사 결과에 대해 조사 실시 기관인 내각부에서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전년도와 조사 방법이 달라 단순 비교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으나, 이러

74. 일본어 원문은 “重要だと思ふ”(중요하다고 생각한다), “まあ重要だと思ふ”(그럭저럭 중요하다고 생각한다)이지만, 보다 자연스러운 한국어 표현을 위해 의역하였다.

한 경향은 이미 나타났고, 그 원인으로는 강제징용 문제 등으로 인한 한일관계 악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⁷⁵

[그림 3-13] 일본과 주변국과의 향후 관계 발전의 중요성(2016-2020): 긍정 답변



※ 출처: 내각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 참조: 2015년 조사는 2016년 1월에 시행, 상세사항 각주 58 참조.

요약하자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 및 한일관계에 대한 평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변화 폭이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향후 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대해 점차 낮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앞서 조사한 '친근감'과 관련성이 낮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사 결과, 미국에 대해서는 비교적 일관되게 친근하고, 중요한 국가로, 러시아에 대해서는 친근하지 않지만, 중요한 국가로, 중국에 대해서는 친근감은 하락하지만, 중요한 국가로, 한국에 대해서는 친근감도 하락하며, 중요하지도 않은 국가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이러한 결과는 상대국에 대한 친근감 상승이 관계 형성의 중요성과 반드시 직결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75. [読売新聞] “日韓関係「重要でない」、過去最高 40.4%…内閣府調査” (2021.2.9) <https://www.yomiuri.co.jp/politics/20210219-OYT1T50231/> (검색일: 2021.7.3).

3.3 (정치·사회) 일본의 눈에 비친 ‘민족주의’ 국가 한국

앞서 한국인들의 눈에 비친 일본은 ‘군국주의’ 국가이자, ‘경쟁’ 혹은 ‘경계’의 대상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렇다면 일본인들의 눈에 비친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 [그림 3-14]를 통해 보면, 일본에게 한국은 ‘민족주의(2013-2021, 9년 평균 50.3%)’, ‘국가주의(9년 평균 36.0%)’, ‘군국주의(9년 평균 27.2%)’로 비춰지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족주의’라는 인식은 2013년 43.3%, 2014년 44.8%, 2015년 55.7%, 2016년 48.1%, 2017년 48.6%, 2018년 55%, 2019년 53.2%, 2020년 54.1%, 2021년 49.9%의 변화를 보였는데, 특히, 한일관계가 악화된 2019년도를 전후하여 응답자의 50% 이상이 한국을 ‘민족주의’ 국가로 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이는 한일 갈등을 대하는 한국의 대응이 일본에게는 민족주의적으로 인식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지점이다.

[그림 3-14] 일본의 한국 사회 및 정치체제에 대한 인식(복수응답)(201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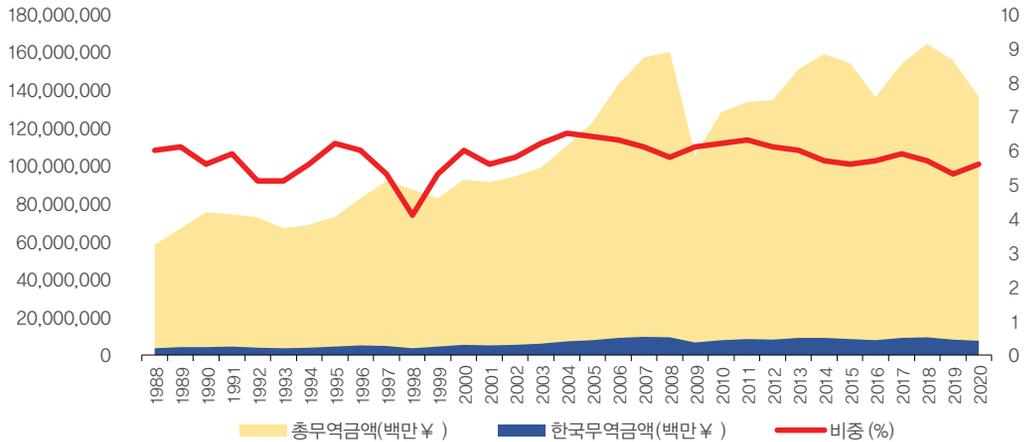


※ 출처: EAI-言論NPO. '한일국민 상호인식조사' 각 년도 조사자료 참조하여 필자 작성.

3.4 (경제) 중요성이 낮아지는 한국

앞서 한국에게 일본은 과거에 비해 무역의존도가 현저히 저하되었지만, 여전히 주요한 상대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아보았다. 일본에게 한국 또한 3위(6.6%)의 주요 수출국이자, 4위

[그림 3-15] 일본 무역 중 한국의 위치(1988-2020)



※ 출처: 일본관세협회, 한국무역협회 자료 참조하여 필자 작성.

(4.3%)의 주요 수입국이다.⁷⁶

다만, 한국과 달리 일본의 무역의존도는 일본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 않다. 한국은 G20 국가 중 수출의존도는 네덜란드, 독일에 이어 3번째(37.5%)로, 수입의존도는 네덜란드, 멕시코, 독일에 이어 4번째(31.3%)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의 경우, 수출의존도 14.3%로 17위, 수입의존도 13.8%로 18위로 하위권에 위치하고 있다.⁷⁷ 다시 말해, 한일은 서로에게 중요한 무역상대국이지만, 전체 경제 중 무역의존도가 높지 않은 일본에게 있어 한국이 가지는 위상은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에게 있어 일본이 갖는 위상에 비해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은 인식조사에서도 나타난다. 앞서 언급한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일본 여론은 ‘일본경제에 가장 중요한 국가로’, 1995년 미국, 중국,

76. 2019년도 기준 일본의 주요 수출국은 1위 미국 19.8%, 2위 중국 19.1%, 4위 대만 6.1%, 5위 홍콩 4.8%이며, 주요 수입국은 1위 중국 23.5%, 2위 미국 11%, 3위 오스트레일리아 6.3%, 5위 사우디아라비아 3.8%이다.

- 자료: 일본관세협회. 출처: 한국무역협회. “일본의 10대 수출국” <https://stat.kita.net/stat/world/major/JapanStats02.screen>; “일본의 10대 수입국” <https://stat.kita.net/stat/world/major/JapanStats03.screen>.

77. [연합뉴스] “외풍에 취약” 한국 무역의존도, 일본의 2.4배” (2019.7.18) <https://www.yna.co.kr/view/AKR20190717147500003> (검색일: 2021.7.20).

아세안을, 2002년 미국, 중국, 한국을, 2010년에는 중국, 미국, 인도라고 응답하였으며, 「동아시아연구원-言論NPO」 조사에서는(2017-2021) 미국, 중국, 인도, 아세안, EU, 그 다음으로 한국이라고 응답하였다. 같은 조사에서 한국은 미국, 중국, 다음으로 일본을 선택하였다. 이는 한일 간 경제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일본의 인식이 한국의 인식보다 높지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자국의 미래에 있어 한일경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한국 응답자의 80.4%(2021년 기준, 2020년: 78.1%)가 중요하다고 언급한 것과 달리, 일본 응답자는 44.0%(2021년 기준, 2020년 47.1%)만이 중요하다고 언급하였다.

한편, '한일관계가 중요한 이유'에 대해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한국이 일본과의 경제 교역, 무역 등 실리적 측면을 강조한 것과 달리, 일본인의 응답 중 가장 많은 답을 차지한 것이 '역사적, 지리적, 문화적으로 관계가 깊은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2021년도 기준, 73.4%)'로 조사되었다. 이는 2020년도에 '이웃 국가이기 때문에(57.7%)', '역사적, 문화적으로 관계가 깊은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42.2%)'가 통합된 답변이다. 이를 긍정적/적극적인 의미로 해석한다면, 일본에게 한국은 이웃 국가로서 당연히 잘 지내야 하는 당위성을 지닌다고도 볼 수 있지만, 또 부정적/소극적인 의미로 해석해 본다면, '지리적' 근접성 외에 이유를 찾기 어렵다는 것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이처럼 한일 양국이 서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가 다른데, 일본이 한국을 지리적 혹은 가치적 측면에서 중요한 국가로 본다면, 한국은 일본을 실리적 측면의 중요성에 중점을 두고 생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일본에서 한국에 대한 전략적, 경제적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는 것과도 이어진다. 즉, 한국에 있어서 일본의 경제·안보적 측면의 실리적 중요성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중요성보다 강하게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3.5 (문화) 일본 사회에 스며든 한국문화: 한국 '콘텐츠'에 대한 높은 호감도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의 '2021 한일공동여론조사'에서는 '상대국(한국)의 문화에 대해 좋아하는 것(복수응답)'에 대한 답변으로, 일본은 한국의 요리(68%), 영화·드라마(40%), 음악(40%), 패션(27%) 순으로 호감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설문조사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이 실시한 '2021 해외한류실태조사'⁷⁸에서도 '한국에 대한 연상 이미지'로 일본은 한식(29.2%), K-POP(22.4%), 드라마(7.4%) 순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통해 한국문화

78. 조사개요에 대한 상세사항은 부록 1 참조.

중에서도 ‘음식’, ‘영화·드라마’, ‘음악’ 등에 대한 인지 혹은 선호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⁷⁹⁾

이와 같은 결과는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이후 한일교류가 활발해지며, 한국의 문화가 일본에도 상당 부분 알려지고, 이것이 일본 사회에 자리 잡게 된 것에서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에서의 한류는 2000년대 초반 ‘쉬리’, ‘공동경비구역 JSA’, ‘엽기적인 그녀’ 등 영화의 인기에 이어, 제1차 한류(2003-2005)는 드라마 <겨울연가>와 배용준 등이 크게 인기를 모으며 일본의 중년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되었다. 제2차 한류(2008-2010)는 드라마 <미남이시네요>와 장근석, 그리고 카라, 소녀시대, 빅뱅, 동방신기 등 K-POP이 유행하며 젊은 층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이후 제3차 한류(2015-2018)는 BTS, 블랙핑크 등 K-POP에 이어 화장품, 패션, 음식 등이 10대, 20대 등에게 크게 인기를 끌었다. 그리고 제4차 한류(2020-현재)로 불리는 현재는 영화 <기생충>,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등을 중심으로 영상 콘텐츠가 인기를 끌고 있다.⁸⁰⁾ 이는 동 조사에서 ‘한국의 문화 중 좋아하는 것’으로 언급된 요리, 영화·드라마, 음악 등의 답변과 관련하여 생각해 볼 때, 한국문화가 일본 사회에 꾸준히 자리잡게 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2010년대 초중반에도 나타났다. [그림 3-16]은 2010년부터 2015년까지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의 공동여론조사에서 ‘상대국(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복수응답)’에 대한 응답을 나타낸 것이다. 조사시기에 따른 증감은 있지만, 2010년대 초중반까지 일본의 한국에 대한 관심은 주로 ‘역사’, ‘관광지’, ‘요리’ 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외에도 TV드라마, 음악, 영화, 전통문화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처럼 일본에서의 한국문화는 일시적인 인기를 넘어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았다고 볼 수 있다. 지속되는 한일 양국 정부의 외교적 마찰 속에서도 일본에서 한국문화는 일본인들의 일상 속에 안착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⁸¹⁾ 다만, 이것이 ‘한국’에 대한 관심이라기보다는 ‘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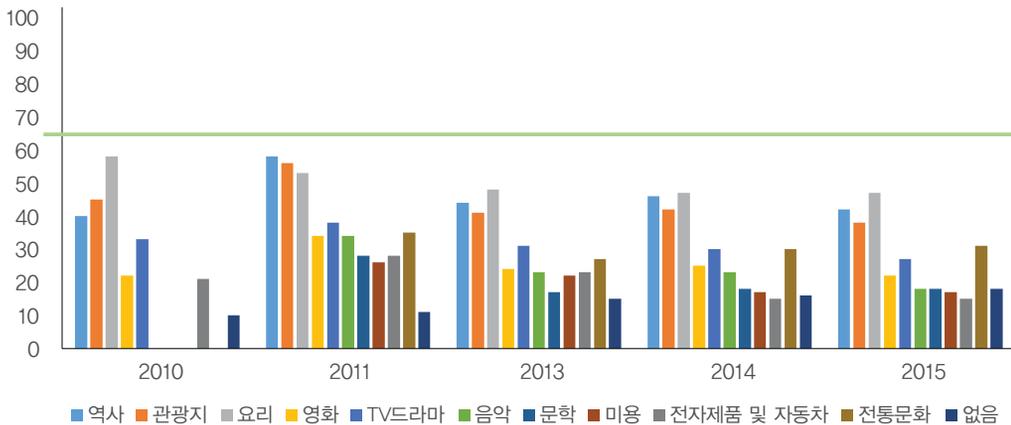
79. 한편, 한국문화콘텐츠별 소비 비중을 보면, 일본에서의 소비 비중은 ‘패션’ 이 2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뷰티’ 16.4%, ‘예능’ 15.3%, ‘게임’ 15.2%이었다. 같은 아시아 권역에서 중국,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인도 등이 한국 ‘드라마’를 1순위로 언급한 것과는 다른 양상임을 알 수 있다.

80.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 “[카드뉴스] 일본 언론이 바라본 ‘일본내 신한류 열풍!’” (2021.2.23) <http://www.kocis.go.kr/press/view.do?seq=1037289&page=1&pageSize=10&photoPageSize=6&totalCount=0&searchType=null&searchText=&RN=3> (검색일: 2021.7.1).

81. 한영균. 2020. “일본 내 한류의 현황과 한일관계: 한류의 문화외교 기능을 중심으로.” 「국제학논총」 제32집, pp.5-24.

텐츠'에 대한 관심이라고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할 것이다.⁸² 그리고 이러한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국가에 대한 호감으로 이어진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림 3-16] 한국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복수응답)(2010-2015)



※ 출처: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한일공동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3.6 요약 및 분석: 반복되는 관계의 부침(浮沈) 속 한국에 대한 중요성 인식 저하

일본의 대한국 인식은 미국, 중국, 러시아 등과 비교하여 친근감 및 관계 평가에서 변동 폭이 상대적으로 큰 반면, 향후 관계 발전에 대해서는 점차 그 중요성을 낮게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결과는 함께 조사된 미국에 대해서는 높은 친근감, 양호한 미일관계, 그리고 앞으로의 관계 발전이 중요한 '당연히 잘 지내야 하는' 「당위적 우호국」으로,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서는 낮은 친근감, 양호하지 않은 양국관계, 그러나 향후 관계 발전이 중요한 「필연적 관리국」으로 인식되는 것과 다르다. 이상의 관점에서 볼 때, 일본에게 한국은 때로는 친근하지만 때로는 그렇지 않고, 때때로 양호하지 않은 관계에 놓이지만 그래도 잘 지내야 하는, 그렇지만 중요성이 하락하여 잘 지내야 하는 이유를 찾기 힘든 상대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여겨진다.

82. 필자가 인터뷰한 20대 일본인 대학생들 대다수는 K-POP, 한국 아이돌, 뷰티 등을 좋아하지만,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한일 갈등 혹은 한일관계에 대한 관심은 별도의 영역이라 생각한다고 한 목소리로 답하였다.

■ 일본에게 비춰진 한국: ‘민족감정’, ‘애국심’, ‘공동체’가 우선시되는 국가

앞서 제시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EAI-言論NPO」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일본의 눈에 비친 한국은 ‘민족감정과 애국심이 강한 국가’, 그리고 ‘개인보다는 국가(공동체)가 우선시되는 나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 조사를 통해 일본의 응답자들은 한국의 정치·사회 체제에 대해 ‘민족주의’, ‘국가주의’라는 답변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1995년과 2005년의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조사에서는⁸³ ‘한국인에게 본받아야 할 점’으로 ‘애국심’이 1순위로 조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조사에서 이러한 인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무엇인지까지는 나와있지 않아 응답 이유까지 정확히 알기는 어렵지만, 과거 일본의 역사, 그리고 당시의 한일관계를 통해 볼 때 다음 사항에 주목해 볼 수 있다.

하나, 과거 일본의 역사를 통해 볼 때 ‘애국심’과 ‘국가주의’라는 단어가 긍정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전후 일본에게 애국심은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고, 이후 강조된 민주주의의 발전과 인권의 향상은 애국심과 국가주의를 견제하는 강력한 이념이자 제도로 작용하였다.⁸⁴ 1990년대부터 2000년대 일본 경제가 침체되어 있던 상황에서 역설적으로 일본 내 보수층을 중심으로 ‘애국심’이 강조되었던 점을 상기해 본다면, 1990년대 후반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에 대한 고민, 그리고 단합된 한국의 모습은 그간의 일본의 모습을 되돌아보는 것이었다고 해석해 볼 수 있다.

다른 하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이다. 즉, 2013년에서 2021년의 9년간 흐름 가운데 한일 갈등이 재점화되었던 2018년을 전후하여 살펴보면, 일본의 눈에 비친 한국의 ‘민족주의’는 2013년 43.3%였으나, 2018년 55%, 2019년 54.1%, 2020년 54.1%로 50%를 상회하고, ‘국가주의’는 2013년 29.4%에서 2018년 41.2%, 2019년 40.9%, 2020년 42.8%로 급격히 상승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악화된 한일관계 속 한국을 바라보는

83. 「한국일보와 요미우리신문」 설문조사(1995, 2005)에 의하면, “한국인들에게 본받아야 할 점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일본인들은 한국인들의 ①애국심(31.7%), ②근면함(23.9%), ③효도(23.4%)의 순으로, 10년 후인 2005년에는 ①애국심(41%), ②효도(36.5%), ③예의(24.5%), ④근면함(21.3%) 순으로 답변하였다. 이외에도 역사에 대한 높은 관심(19.1%), 정의감(8.7%), 친절함(8.4%), 청결(6.9%), 질서외식(4%), 독창성(2.2%) 등이 있다.

84. 현대 일본의 애국심, 국가주의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에 대해서는 장인성, 2013. “현대일본의 애국주의 -전후공간과 탈냉전공간의 애국심론,” 「일어일문학연구」 84(2), pp.37-71 참조.

일본 사회의 인식을 유추할 수 있다. 즉, 한일 갈등에 대처하는 한국의 모습이 국제사회에서의 법, 질서보다는 국민감정에 우선하고, 국가중심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이미지가 일본 사회에 넓게 확산되어 이에 대한 반감으로 여겨진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일본 정부가 강조하는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 ‘신뢰할 수 없는 나라’라는 프레임이 일본 여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도 볼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한국 정부가 강조하는 ‘개인의 권리’, ‘피해자 중심주의’라는 기조와 ‘민주주의 3권분립’의 원칙이 일본 사회에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것으로도 볼 수 있다.

■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일본의 Z세대 vs 여전히 한국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일본의 기성세대

앞서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은 젊은 세대가 기성세대보다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음을 확인한 바 있다. 이처럼 젊은 세대들의 긍정적 인식이 높은 주된 이유로는 ‘문화’의 영향이 지목된다. ‘#한국인이 되고 싶어’, ‘#韓国人になりたい’. 일본 10대의 66.7%, 20대의 76.1%가 사용하는(2018년도 기준)⁸⁵ 일본 트위터에서 이 해시태그가 달린 게시물이 자주 사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말은 일본 젊은 세대들이 나타내는 한국문화, 콘텐츠에 대한 동경, 친근감을 나타내는 것이며,⁸⁶ 한국과 우호적인 관계 형성에 대한 바람을 담은 것이라 볼 수 있다. 조사 결과, 실제로 ‘#한국인이 되고 싶어’라는 트위터 해시태그에는 한국인과 친구가 되고 싶고, 한국인과 대화하고 싶다는 내용이 함께 기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젊은 세대의 친근감은 일본 내 확산된 ‘한류’의 긍정적 영향임을 부인하기 어렵다. 일본의 많은 기성세대가 한국

85. 일본 「정보통신백서」(2019)에 의하면, 2018년도에 조사된 일본에서 주로 사용되는 SNS, 어플리케이션은 전 세대 기준 LINE이 82.3%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사용자 간 교류 및 커뮤니케이션을 목적으로 한 SNS로는 트위터 37.3%, 인스타그램 35.5%, 페이스북 32.8%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트위터는 10대 66.7%, 20대 76.1%로 다른 세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이용률이 나타나고 있다. - [総務省情報通信政策研究所] “平成30年度 情報通信メディアの利用時間と情報行動に関する調査報告書”(2019.09) https://www.soumu.go.jp/main_content/000644166.pdf; [머니투데이] “트위터가 일본에서 인스타·페북 제친 이유”(2019.5.18) <https://news.mt.co.kr/mtview.php?no=2019051717451094644> (검색일: 2021.7.18).

86. [세계일보] “[이동준의 일본은 지금]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일본 여성들… 新한류를 이끈다”(2017.12.14) <https://www.segye.com/newsView/20171212003655> (검색일: 2021.7.17); [서울경제] “한일 감정 악화하는 데도… ‘한국인이 되고 싶다’는 요즘 일본 10대들”(2019.7.17) <https://www.sedaily.com/NewsView/1VLQ92NYUN> (검색일: 2021.7.17).

을 소위, ‘위에서 내려다보는’ 시선으로 본다면, 젊은 세대에게 대중문화, 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한국문화는 오히려 선망이자, 동경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다.⁸⁷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현재 일본의 10대, 20대들은 그들의 유년 시절과 청소년기의 성장과정에서 한국문화를 자연스럽게 접하고, 받아들이며, 동경하며 자란 ‘한류 네이티브’⁸⁸ 세대이다. 이들이 접한 한국은 삼성, 현대, LG 등 글로벌 기업들이 세계적으로 활약하는 가운데, 국제사회에 영향력을 확대해 가고 있는 나라이다. 즉, 이들에게 한국은 문화적으로 친근한 국가이자,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이 적지 않은 국가로 인식된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코로나19 대응 초기 보여준 선진적인 기술과 디지털화 등에 의한 발 빠른 조치들은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를 높였다.

한편, 지난 20여 년간 일본 내 한류의 흐름 속에서 현재의 10대, 20대들이 한류와 함께 태어나 성장하고, 30, 40대가 한류의 유입 속에서 한국을 삶의 일부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였던 것과 달리, 50대 이상의 중장년 및 노년층이 한국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와 계기는 많지 않았다. <겨울연가>를 중심으로 한 1차 한류붐은 중년 여성들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이후의 K-POP 등은 당시의 10, 20대였던 남녀 젊은 세대 등을 중심으로 크게 인기를 끌었다. 물론 최근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 등이 중장년층 남성들에게 인기를 끌었지만, 이는 극히 최근의 일이다. 결국 일본 사회에 확산된 한류의 흐름 속에 ‘남성’, 그리고 ‘중장년층·노년층’에게 미친 영향은 다른 세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미하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이 세대의 기억 속의 한국은 현재의 발전된 모습이 아닌 과거의 ‘약소국’이자, 일본에 비해 경제·사회적으로 뒤떨어진 국가로 여겨지는 경향이 강하다. 전쟁을 겪은 세대의 일부는 한국에 대한 미안함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과거 일본이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하던 시절에 한국을 배려하고, 한국의 경제 발전을 도왔다는 자부심도 있다. 따라서 이 세대들이 갖는 한국에 대한 인식은 여전히 일본보다 못한 나라라는, ‘위에서부터 내려다보는’ 시선에 기반한다. 이와 같은 그들의 인식에 기반하여 볼 때, 최근의 한일 갈등은 그들이 한국을 배려하며 지난 수십 년간 쌓아온 한일관계를 부정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이들의 인식이 최근의 한일 갈등과 한국에 대해 ‘용서하기 어렵다’, ‘건방지다’라는

87. 사와다 가쓰미. 2020. 「한국과 일본은 왜?」, 책과 함께, pp.174-175; [파이낸셜뉴스] “일본 Z세대는 말한다…‘한국은 오사레한 나라’ [글로벌리포트]” (2020.12.6) <https://www.fnnews.com/news/202012061749138828> (검색일: 2021.7.17).

88. 토가시 아유미. 2020. “한국을 향하는 시선: 일본 젊은 층과 코로나19 사태,” 「일본공간」 28권, pp.283-287.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⁸⁹ 한일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자민당 보수계의 원들 사이에서 “돕지 않고, 가르치지 않고, 관여하지 않는 이른바 ‘비한(非韓) 3원칙’으로 가자”⁹⁰는 언급이 나온 것도 이러한 인식의 발로(發露)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문화 교류의 제한적 효과: 30, 40대와 남성에 주목해야...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기로 본격화된 양국 간의 문화 교류는 상호 간의 친밀감 형성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런데 이는 한일 갈등을 극복하고, 관계 개선까지는 이어지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일본에서의 한류를 다룬 연구들은⁹¹ 과거 오랜 기간 한국에 대해 무관심한 입장을 취해 온 일본인들이 한국을 새롭게 의식하게 되면서 한일관계 속 상호인식의 불균형이 해소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는 나름의 의미를 부여할 수 있었다고 본다. 즉, 한류가 일정 정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온다는 것이다.⁹² 그러나 한류의 지속적인 전개 속에서도 양국 갈등은 해소되지 않았고, 오히려 양국 갈등이 문화 교류에 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흥미로운 점은 현재 30, 40대의 인식이다. 앞서 언급하였듯, 조사의 시간적 흐름이 있음을 고려하여 동일한 문항 내에서도 짧게는 5년에서 길게는 15년이 흘렀음을 감안하더라도, 이 세대는 청년 시절 일본에서 한국음식, 한국문화가 확산되던 시기를 경험한 세대로 한류의 영향과 무관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들이 현재 한국에 대해 보이는 인식이 20대 청년층이 아닌 기성세대인 중장년층과 유사해지고 있다. 이 또한 설문조사 내에서 그 이유를 질문하고 있지 않아 통계적으로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는 것은 어렵지만, 이 세대가 공유하는 사회적 기억과 이들이 갖는 특징 속에서 그 이유를 유추해 볼 수 있다.

소위, ‘(취업) 빙하기 세대(氷河期世代)’, ‘잃어버린 세대(失われた世代)’라고도 불리는 이 세대는 일본의 버블경제가 붕괴된 이후 장기 불황 속에서 취업난과 경제적 빈곤을 겪으며

89. 澤田克己. 2020. 「反日韓国という幻想 誤解だらけの日韓関係」. 毎日新聞出版.

90. [연합뉴스] “교도 ‘일본 정부·여당 내 험한 분위기 팽배’” (2021.2.15) <https://www.yna.co.kr/view/MYH20210215000800640> (검색일: 2021.7.17)

91. 하야시 나츠오. 2008. “대중문화교류에서 나타난 현대 한일관계.” 『한일공동연구총서』 14. pp.232-270.

92. 한영균. 2020. “일본 내 한류의 현황과 한일관계: 한류의 문화외교 기능을 중심으로.” 『국제학논총』 제32집. pp.5-24.

사회생활을 시작한 세대이다. 일본의 경제 발전 속에서 여유로움을 누리던 기성세대와 달리, 이들은 성장과정에서 일본의 경제적 하락과 중국으로부터의 경제적 추월, 한국과의 경제적 격차가 줄어드는 것을 목도하였고, 고베 대지진(1995), 동일본 대지진(2011)과 후쿠시마 원전사고(2011) 등을 겪으며 그간 일본이 자랑하던 경제·사회 시스템의 한계를 직접 경험하였다. 이들은 이러한 일본 사회의 정체와 우울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일상화되고, 자신감과 여유가 줄어든 세대로 일컬어진다.⁹³ 이와 같은 과정에서 그들이 경험한 한국문화는 일상 속 하나의 문화로서의 부분 혹은 경험 이상의 의미가 아니었고, 따라서 이를 통해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기는 어려웠다.⁹⁴ 또한, 학생 시절을 지나 사회인으로서 경험한 한국문화는 생활의 일부로서 친근하지만, 이후 그들이 사회에 나와 접한 2010년대 이후의 한일관계의 대부분은 갈등과 대립의 기억이었다. 따라서 한국에 대한 인식,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유년 시절부터 자연스럽게 한류와 함께 성장해 온 현재의 10대, 20대 ‘한류 네이티브’들과 다르고, 한류에 무관심하거나 한국에 대한 우월감을 갖는 50대 이상과도 다르다. 이들에게 한류는 성장과정에서 새롭게 접한 문화이며, 한류붐이 일던 2000년대 초반부터 현재까지의 확산 과정을 직접 체험하고 받아들여지게 된 문화였다.

그러나 이들에게 있어 한국과의 문화 교류를 통해 한국에 대한 인식 개선 혹은 한일관계 개선이라는 상승 및 확산 효과가 일어나기는 어려웠다. 더불어 대부분의 한국문화가 젊은 세대 혹은 여성을 중심으로 확산된 점을 고려해 보면, 이 세대가 장기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한국문화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대에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이유는 향후 10년, 20년 후 가까운 미래의 한일관계, 일본의 대한반도 정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정책 결정에 관여할 세대가 바로 이 세대, 즉 현재의 30, 40대이기 때문이다.

93. 필자가 인터뷰한 한일 양국과 깊은 관계를 가진 30대 일본인 남성은 “현재 일본의 30, 40대들은 일본이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어지던 시기를 경험하던 세대로, 현재의 60, 70대들이 느끼는 위협감보다 더 큰 위협감을 느끼는 세대”라고 언급하였다. 또한, “유년시절과 사회생활을 시작하던 시기는 일본의 거품경제가 붕괴되고, 고베대지진, 옴진리교 사건, 동일본 대지진 등을 겪으면서 사회적 분위기가 저하되었고, 뉴스에서 접하는 우울한 소식들로 불안감에 익숙해지던 우울한 기억이 더 많은 시기였다”고 회상하였다.

94. 필자가 인터뷰한 40대 일본인 남성들은 “한국음식을 즐겨 먹고, 한국드라마를 알고 있지만, 이는 일상생활의 하나일 뿐 특별히 한국을 더 좋아해서는 아니다”라고 답변하였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한국에 대한 특별한 반감은 없지만, 일상 생활에서 ‘한국’이 화제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한국이 일본보다 나은 점도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일본이 한국보다 우위에 있으며, 한국은 아직 일본을 이길 수 없다는 인식을 보였다.

4. 한일관계: 갈등과 협력의 이중구조

1965년 한일국교정상화 이후, 한일관계 발전을 위한 전환의 계기를 마련한 것은 1998년 김대중 대통령과 오부치 총리의 「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십 공동선언(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이었다. 동 선언을 통해 양국 정상은 1965년 이후의 한일관계를 총괄하고, 새로운 시대의 비전을 제시하였으며, 정치, 안보, 경제, 인적·문화 교류, 글로벌 이슈 등의 분야에서 상호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하였다. 선언에서는 분야별 구체적 실천과제들이 제시되었고, 이후 양국관계는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였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4차례에 걸쳐 일본 대중문화가 개방되었고, 일본에서도 한국영화, 드라마 등이 인기를 얻으며 한류붐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양국 간 교류가 활성화되면서 일본의 한국에 대한 친근감이 상승하고, 한일관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2012년 전까지 비교적 완만한 상승 추이를 나타냈다. 비록 2000년대 초중반의 역사교과서 문제, 독도 문제, 일본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문제 등으로 양국관계가 악화되기도 하였지만, 양국관계는 활발한 문화 교류와 더불어 발전되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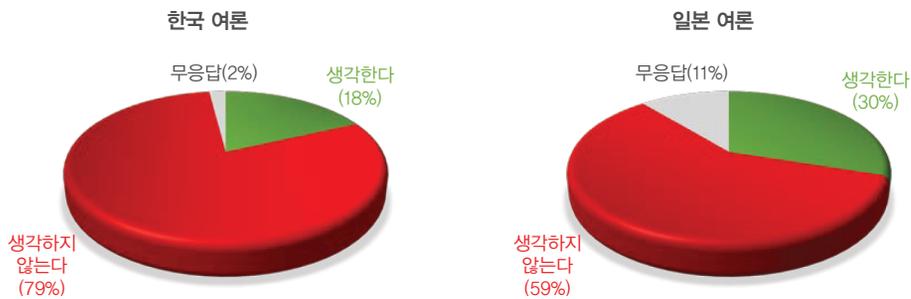
그러나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본천황 사죄발언으로 양국관계는 급격히 악화되었고,⁹⁵ 현재까지 2012년 이전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양국 정부는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관계를 개선시켜 나가고자 하였으나, 2018년 초계기/레이더조사 갈등,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2019년 일본의 수출규제에 대한 한국의 반일시위 및 불매운동확산,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문제, ‘위안부’ 소송 판결에 따른 ‘위안부’ 문제의 재점화로 인해 다시금 악화되며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협력 및 갈등 사안에 대해 양국 여론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95. 2012년 8월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천황 사죄’ 발언은 일본인들의 한국에 대한 감정을 결정적으로 악화시켰다. 평소에 강하게 의식하지 않은 ‘천황’이라는 존재가 이명박 대통령의 발언에 의해 자극된 것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일본인의 한국인에 대한 감정이 악화된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 오구라 기호, 2015. 「일본의 험한파는 무엇을 주장하는가」. 제이앤씨.

4.1 갈등 구조: 과거사 문제의 해결 -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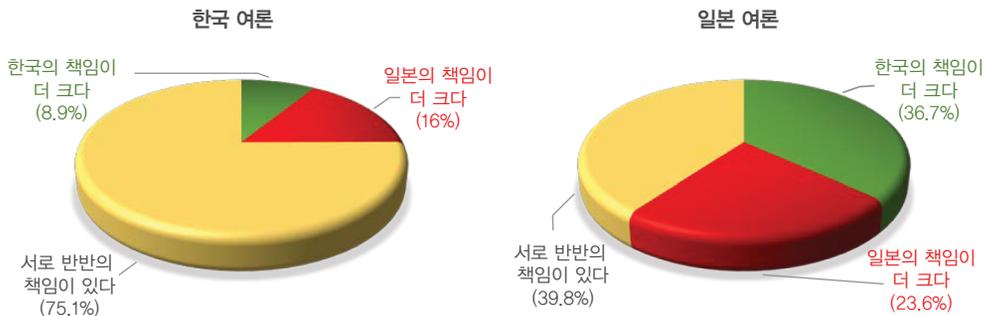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일본의 대한국 인식 변화의 폭이 크게 나타나는 것과 달리, 한국의 대일 인식은 비교적 일관되게 부정적이다. 즉, 상대국에 대한 인식에 있어 한국의 여론이 일본의 여론보다 더 상대적으로 일관되게 부정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적 인식과 더불어 한국 여론은 역사 문제를 비롯한 양국간 갈등 사안에 매우 강경한 경향이 나타난다. 예를 들어, [그림 4-1]은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서로 양보해야 하는가’에 대해, [그림 4-2]는 ‘현재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 질문한 것인데, 응답 결과를 보면 한국 여론이 일본 여론보다 더 강경함을 알 수 있다.

[그림 4-1] 한일은 역사인식 문제에서 서로 양보해야 하는가(2021)



※ 출처: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한일공동여론조사’ 2021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그림 4-2]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여부 인식(2020)



※ 한국언론진흥재단. ‘한일 갈등에 대한 양국 시민의식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구체적으로, 한일의 역사 문제에 대한 양보 여부에 대해 한국 여론의 79%, 일본 여론의 59%가 '생각하지 않는다'로, 한국 여론의 18%, 일본 여론의 30%가 '생각한다'로 답변하였다. 또한, 현재의 한일관계 악화에 대한 책임 문제에 대해 일본 여론이 '서로 반반의 책임이 있다' 39.8%, '한국의 책임이 더 크다' 36.7%, '일본의 책임이 더 크다' 23.6%로 답변한 것과 달리, 한국 여론은 '서로 반반의 책임이 있다' 75.1%, '일본의 책임이 더 크다' 16%, '한국의 책임이 더 크다' 8.9%로 답변하였다. 이처럼 일본 측의 답변이 '한국의 책임', '일본의 책임', '반반의 책임'으로 비교적 고르게 나타난 데 반해, 한국 측의 답변은 '반반의 책임이 있다'는 답변이 가장 높은 수치로 응답되었으며, 일본 응답자의 23.6%가 '스스로의 책임이 더 크다'고 응답한 것과 달리, 한국이 '스스로의 책임이 더 크다'고 본 것은 8.9%에 불과하였다.⁹⁶ 따라서 일본 정부가 줄곧 언급하는 "한국 정부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주장은 한국 여론에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라는 점을 유추할 수 있다. 그렇다면 각각의 사안에 대해서는 어떠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는가. 이에 대해 현재 양국 간 가장 큰 갈등 사안인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를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 일본군 '위안부' 문제

'위안부' 문제는 한일 갈등의 대표적 사안 중 하나이다.⁹⁷ 1991년 8월 14일故김학순 할머니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 공개 증언에 따라 사회적으로 공론화된 이후 지난 30여 년간 양국은 '위안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위안부' 문제는 여전히 한일 간의 난제로 남아있다([표 4-1] 참조).⁹⁸

96. 한편, 2019.7.9-7.11까지 한국갤럽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에서 "한일 간 분쟁의 한국 정부와 일본 정부 누구에게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61%가 '일본 정부', 17%가 '한국 정부', '양측 모두'는 13%로 답변하였다. 답변은 20, 30대(74·79%)와 성향 진보층(81%)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조사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 실시 이후에 실시된 것임을 감안하더라도, 한국의 일본에 대한 책임 인식은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 [한국갤럽] "데일리 오피니언 제362호(2019년 7월 2주) - 한일 관계 인식, 경제 전망" (2021.7.11)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031> (검색일: 2021.7.17).

97. 『동아일보-아사히신문』의 2015 한일공동여론조사에 의하면,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서 위안부 문제의 결착이 중요한가"라는 질문에 대해, 일본 여론의 53%가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11%, 어느 정도 중요하다 42%)고 답하였으며, 한국 여론은 95%가 '중요하다'(매우 중요하다 73%, 어느 정도 중요하다 22%)고 답하였다. '중요하지 않다'는 의견은 일본 39%(별로 중요하지 않다 28%, 전혀 중요하지 않다 11%), 한국 2%(별로 중요하지 않다 2%, 전혀 중요하지 않다 0%)로 나타났다. - [朝日新聞] 2015.6.22.

[표 4-1] '위안부' 문제 주요사항(1991.08-2021.12 현재)

일시	주요사항
1991.08.14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김학순 할머니 첫 '위안부' 증언 기자회견
12.08	김학순 할머니 등 피해자 3명 일본 정부 제소(일본 최고재판소 2004년 원고 패소 확정)
1992.01.13	일본 가토 관방장관 담화, 일본군 관여 공식 인정
01.17	미야자와 일본 총리 방한, 정상회담 및 한국 국회 연설에서 '위안부' 문제 사죄, 반성 표명
1993.03.13	김영삼 대통령, 정부 차원에서 물질적 보상 불요구 방침 천명, 철저한 진상 규명 촉구
08.04	일본 정부, '위안부' 동원 강제성 등 인정한 '고노 관방장관 담화' 발표
1994.08.31	무라야마 일본 총리, 과거사 특별담화 "진심으로 깊은 반성과 사죄의 심정"
1995.07.19	일본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아시아여성기금)' 발족
1997.01.11	일본 기금, 한국인 피해자에 200만엔 최초 지급 및 하시모토 총리 명의 사죄 서한 전달 - 한국 정부, 피해자 요구 외면하며 일시금 지급에 유감 표명
2007.03.31	'여성을 위한 아시아평화국민기금' 해산
2011.08.30	헌법재판소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청구권 분쟁 해결 노력 않는 것은 위헌" 결정
12.18	이명박 대통령, 한일 정상회담서 '위안부' 문제 집중 거론
2014.03.01	박근혜 대통령, 3·1절 기념사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상처는 당연히 치유하여야 한다. 과거의 역사를 부정 할수록 초라해지고 궁지에 몰리게 되는 것"이라고 언급
06.20	일본 정부, 고노담화 작성 경위 검증 보고서 중의원 제출 - 한국 정부, '사실관계 호도' 깊은 유감 표명
2015.08.14	일본 정부, '전후 70주년 아베 총리 담화' 발표
11.02	한일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 '위안부' 문제 조기 타결을 위한 협의 가속화에 의견 일치
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합의' 발표 - 일본 정부의 조치를 전제로 '위안부' 문제 최종적·불가역적 해결 확인
2016.07.28	'화해·치유 재단' 설립
2017.05.11	문재인 대통령-아베 총리 전화회담 - 문재인 대통령, "한국 국민, '위안부 합의' 정서적으로 수용하지 못한다"

98. '위안부' 문제에 대한 보다 상세한 사항은 "일본군 '위안부' 문제 연구소 아카이브 814 홈페이지" 참조. <https://www.archive814.or.kr/>

07.31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출범
12.27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검토 보고서 발표
12.28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TF 조사 결과에 대한 대통령 입장문> 발표 - 문재인 대통령,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
2018.01.09	강경화 외교부 장관, <한일 '위안부' 처리방향 정부입장> 발표 - 첫째, '위안부' 피해자 분들의 명예·존엄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해, 우리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해 나가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갈 것임. - 둘째, 이 과정에서 피해자, 관련 단체, 국민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면서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임. 화해·치유 재단 기금 10억 엔은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 기금의 향후 처리 방안은 일본 정부와 협의, 재단의 향후 운영은 피해자·관련 단체·국민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 후속 조치 마련 - 셋째, 피해 당사자인 할머니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합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의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음. - 넷째,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음. 이를 감안하여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대해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임. 일측이 스스로 국제 보편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들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촉구함. - 다섯째, 진실과 원칙에 입각해 역사 문제를 다루어 나갈 것임. 과거사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동시에, 한일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을 위해 계속 노력해 나갈 것임.
09.25	문재인 대통령, 73회 유엔총회 계기 한일정상회담에서 '화해·치유 재단' 해산 시사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 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지혜롭게 매듭지를 필요가 있다"고 발언함.
11.21	'화해·치유 재단' 해산 결정
2019.07.03	'화해·치유 재단' 해산
2021.01.08	서울중앙지법 민사 34부(재판장: 김정곤 부장판사), '위안부' 피해자 12명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번호: 2016가합505092) 승소 "원고들에게 1억 원씩 지급할 것"
01.18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 판결 문제 조금 곤혹스러운 것이 사실" 발언
01.23	일본 정부가 항소하지 않음에 따라 '위안부' 소송(사건번호: 2016가합505092) 1심 판결 확정 * 1심 판결 이후 14일 이내 항소가능
03.29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 '위안부' 피해자 12명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번호: 2016가합505092) 관련 일본에 소송비용 추심은 국제법 위반 판결

04.21	서울중앙지법 민사15부(재판장: 민성철 부장판사), '위안부' 피해자 20명의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가합580239) 각하
06.04	한국, 국무조정실장 주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민관협의회의' 개최
06.09	서울중앙지법, 일본에 '재산명시 결정서' 발송
06.18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 '위안부' 피해자 12명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사건번호: 2016가합505092) 관련 일본에 소송비용 추심결정에 대한 항고 각하
07.07	외교부 주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1차 민관회의 개최
07.28	외교부 주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2차 민관회의 개최

※ 출처: 각종 신문보도, 일본군 '위안부' 문제연구소 아카이브814(<https://www.archive814.or.kr/>),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외교부 홈페이지(<https://www.mofa.go.kr/>) 등 참조하여 필자 정리.

'위안부' 문제 해결에 새로운 불씨가 된 것은 지난 2015년,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합의(이하, 「2015 위안부합의」)」였다. 양국 정부는 동 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고 양국관계 개선을 도모하였으나,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합의로 오히려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후, 아베 총리와의 첫 전화 통화에서 “우리 국민 대다수가 정서적으로 ‘위안부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언급하면서 사실상 이 문제가 완전히 끝나지 않았음을 밝힌 바 있다. 이후, 한국 정부는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이하, 위안부 TF)」 설치 등을 통해 합의를 검증하였고, 검증 결과 첫째,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둘째,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가 한일관계 및 대외관계 전반에 부담을 주지 않는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이 필요하며, 셋째, 외교는 국민과 함께 하여야 하며, 넷째, 대통령, 협상책임자, 외교부 사이의 소통이 부재하였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정부는 「2015 위안부합의」를 양국 정부의 공식적 합의로 인정하고, 재협상은 하지 않을 것을 표명하였다. 이후, 한국 정부는 합의를 파기하지는 않았지만, '화해·치유 재단'을 해산시키는 등 합의를 사실상 형해화시켰고, 일본 정부는 「2015 위안부합의」를 통해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 불가역적으로 해결되었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현재까지 양국 정부의 입장이 대립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난 1월 8일과 4월 21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2건의 소송이 정반대의 결과가 나오면서 '위안부' 문제는 또 다른 국면에 접어들었다. 1월 소송은 원고가 승소하였고, 일본 정부가 주권면제를 이유로 대응하지 않으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 4월 소송은 원고 패소하였으나, 원고가 곧바로 항소

하면서 여전히 진행 중이다. 이처럼 ‘위안부’ 문제는 한일 양국이 「2015 위안부합의」를 양국 간 공식 합의로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면서 여전히 양국 간 풀어야 할 주요한 과제로 남아있다. 양국 정부가 인정한 「2015 위안부합의」는 ‘위안부’ 문제의 외교 분쟁화 가능성을 낮추지만, 일본 정부를 상대로 ‘위안부’ 소송이 승소하면서 한국 내 일본 정부 자산의 현금화 과정이 이루어지면 새로운 외교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국의 국민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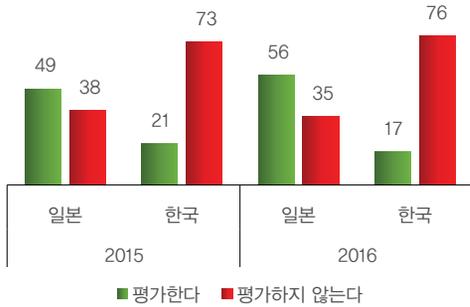
[그림 4-3]은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의 ‘한일공동여론조사’ 중, ‘2015 위안부합의 및 위안부 문제’에 관한 답변을 나타낸 것이다. 일본 여론은 「2015 위안부합의」에 대해 2015년 49%, 2016년 56%로 긍정적 평가가 증가하는 데 반해, 한국 여론은 2015년 21%, 2016년 17%로 감소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부정적 평가는 2015년 73%, 2016년 76%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또한, ‘위안부 문제가 위안부합의로 최종적으로 결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일본 여론의 74%가 ‘그렇다’고 답한데 반해 한국 여론의 75%가 ‘아니다’라고 답하여 양측의 인식 차가 현저하게 드러남을 알 수 있다.⁹⁹ ‘재교섭 여부’에 대해서도 일본 여론은 2017년 33%, 2018년 23%가 찬성하는 것과 달리, 한국 여론은 2017년 85%, 2018년 73%가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¹⁰⁰ 또한, ‘일본의 재사죄 필요 여부’에 대해 일본 여론의 2018년 77%, 2019년 80%가 부정적인 것과 달리 한국 여론의 2018년 91%, 2019년 87%가 사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어 그동안 일본 정부가 표명해온 사죄에 대한 한일 양국 간 인식의 불일치가 관찰된다.¹⁰¹ 이 외에도, 「2015 위안부합의」에서 거론되었던 소녀상 철거 문제에 대해 일본 여론은 2015년 62%, 2016년 71%, 2017년 71%가 철거해야 한다고 보는 것과 달리, 한국 여론은 2015년 9%, 2016년 11%, 2017년 11%만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양국 여론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² 다만, 화해·치유 재단 해산에 대해서는 한일 양국 모두 ‘납득할 수 없다’는 의견이 더 많아 해산 결정에 대해서는 한국 내에서도 충분히 이해와 지지를 얻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99. 유사한 인식은 2015년 위안부합의 이전에도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동아일보-아사히신문」이 공동으로 시행한 2015 한일공동여론조사에 의하면, “한일 간 과거 역사 문제”에 대해 ‘이미 결착했다’는 의견이 일본 49%, 한국 2%, ‘결착되지 않았다’는 의견이 일본 42%, 한국 95%로 나타났다. - [朝日新聞] 2015.6.22.

100. 「동아일보-아사히신문」의 2015 한일공동여론조사에서도 “식민지 지배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에 대해 일본이 다시 재검토할 필요가 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필요가 있다’는 답변이 일본 20%로 나타난 것과 달리, 한국은 89%로 조사되어 위안부합의 이전부터 양국의 인식차가 크게 나타났다. - [朝日新聞] 2015.6.22.

[그림 4-3]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 여론(201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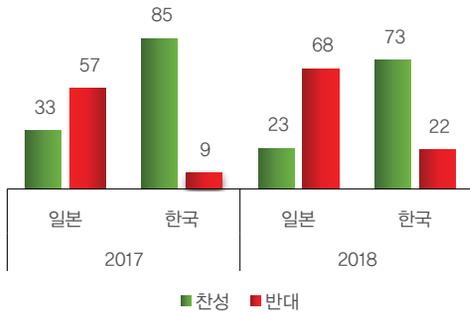
Q. 2015 위안부합의에 대해 평가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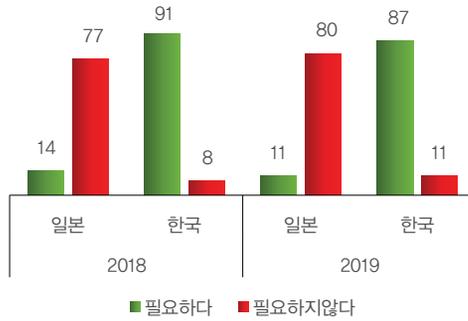
Q. 위안부합의로 '위안부' 문제는 최종적으로
결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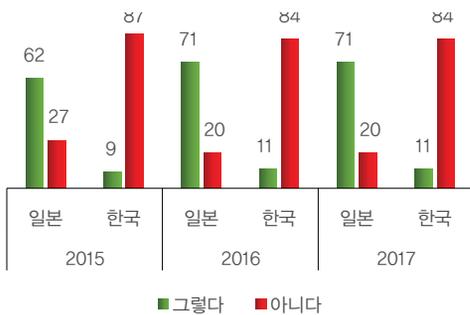
Q. 2015 위안부합의는 재교섭해야 하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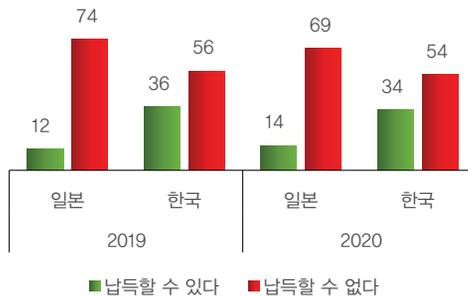
Q. 일본이 다시 사죄할 필요가 있는가?



Q. 소녀상을 철거해야 하는가?



Q. 재단 해산에 대한 한국 정부의 대응은
납득 가능한가?



※ 출처: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한일공동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요약하면, 한일 양국 여론은 ‘위안부’ 문제에 대한 견해차가 크고 그 입장이 강경한 것을 알 수 있다. 일본 여론은 「2015 위안부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인식이 크고, 한국 여론의 대다수는 여전히 미결의 과제로 보고 있다. 그리고 양국 정부의 강경한 입장은 이와 같은 자국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고 볼 수 있다.

■ 강제징용 문제

한일 갈등의 최대 난제로 꼽히는 강제징용 문제가 양국 사이에서 본격화된 것은 2018년 대법원 판결 이후부터이다. 2018년 10월 30일, 한국 대법원은 일제강점기 징용 피해자들이 신일철주금(구,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하고, 원고에 대해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심판결을 확정하였다. [표 4-2]와 같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소송은 1997년 이래 지속되어 왔으나, 이와 같은 판결이 나온 것은 2013년 대법원이 재상고심을 접수한 지 5년, 2005년 1심 법원에 소송이 접수된 지 13년 만이다.¹⁰³ 재판부는 원고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일본 정부의 한반도에 대한 불법적 식민지배 및 침략전쟁의 수행과 직결된 일본 기업의 반인도적인 불법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일본기업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이며,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다.¹⁰⁴

이에 대해 한국 정부는 “3권 분립 원칙에 따라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하며, 피해자가 납득할 수 있고, 양국관계의 손상을 방지하는 최종적인 해결책을 고심하고 있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¹⁰⁵ 반면, 일본 정부는 “강제징용 문제는 1965년 협정으로 모두 해결되었으며, 한

101. 「동아일보-아사히신문」의 2015 한일공동여론조사에서도 “일본은 한국병합 및 한반도 식민지배에 대해 충분히 사죄했는지”라는 질문에 대해 일본 65%(한국 1%)가 ‘충분히 사죄했다’고 답한 것과 달리, 한국 여론은 ‘충분하지 않다’가 96%(일본 20%)로 조사되었다. - [朝日新聞] 2015.6.22.

102. ‘위안부TF’ 검증 결과 이후 한국 정부가 발표한(2018.1.9) ‘위안부’ 문제 처리방향에 대해 일본의 TBS News와 JNN이 실시한 여론조사(2018.1.13-1.14)에서는 85%가 ‘이해할 수 없다’, 산케이신문과 FNN이 실시한 여론조사(2018.1.20-1.21)에서는 90.8%가 ‘납득할 수 없다’고 답변하였다.

103. [법률신문] “[판결] 대법원 전합,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승소’ 최종 확정(종합)” (2018.10.30)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47822> (검색일: 2021.7.15).

104. 대법원 판결문 https://www.scourt.go.kr/sjudge/1540892085928_183445.pdf (검색일: 2021.7.15).

105. 국무조정실 국무총리비서실. “강제징용 소송 관련 대국민 정부입장 발표문” (2018.10.30) <https://www.opm.go.kr/flexer/view.do?ftype=hwp&attachNo=87745> (검색일: 2021.7.15).

국 대법원의 판결은 「한일 청구권·경제 협력협정」 제2조를 명백히 위반해 일본 기업에 부당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것일 뿐 아니라, 1965년 국교정상화 이후 쌓아온 한일 우호협력관계의 법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뒤집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한국 측에 대해 계속 국제법 위반 상태의 시정을 요구해 나갈 생각이며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일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¹⁰⁶ 이처럼 양국 정부 간 입장이 극명하게 대립하는 가운데, 강제징용 문제는 여전히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면 양국 여론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표 4-2] 강제징용 문제 주요 소송일지(1997.12-2021.12 현재)

일시	주요사항
1997.12.24	피해자(여운택·신천수) 일본 오사카지방법재판소에 신일본제철(現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2001.03.27	일본 오사카지방법재판소, 원고 패소 판결
2002.11.19	일본 오사카고등재판소, 항소 기각 판결
2003.10.09	일본 최고재판소, 상고 기각 판결
2005.02.28	피해자(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식), 서울중앙지법에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제기
08.26	한국 정부, “청구권협정과 관련해 일본 정부와 군대의 반인도적 불법 행위는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된 것이 없고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공식의견 표명
2008.04.03	서울중앙지법, 원고 패소 판결, “일본 재판부의 판결이 국내에서도 효력이 있으며, 신일철주금이 옛 신일제철을 승계했다고 볼 수 없다.”
04.24	원고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 씨 등 4명 항소장 제출
2009.07.16	서울고법, 원고 항소기각 판결
08.05	원고 여운택·신천수·이춘식·김규수 씨 등 4명 상고장 제출
2012.05.24	대법원(민사 1부, 주심 김능환 대법관) 파기환송, “일본 재판부의 판결은 헌법의 취지에 어긋나며, 신일철주금은 신일본제철을 승계한 기업이다.”
2013.07.10	서울고법, ‘신일철주금이 피해자들에게 1억 원씩 배상’ 판결
08.09	대법원에 재상고심 사건 접수(사건번호: 2013다61381)
2014.06.10	대법원, 사건 접수 2년 만에 김소영 대법관을 주심 대법관으로 지정

106. 外務省, 「2020 外交青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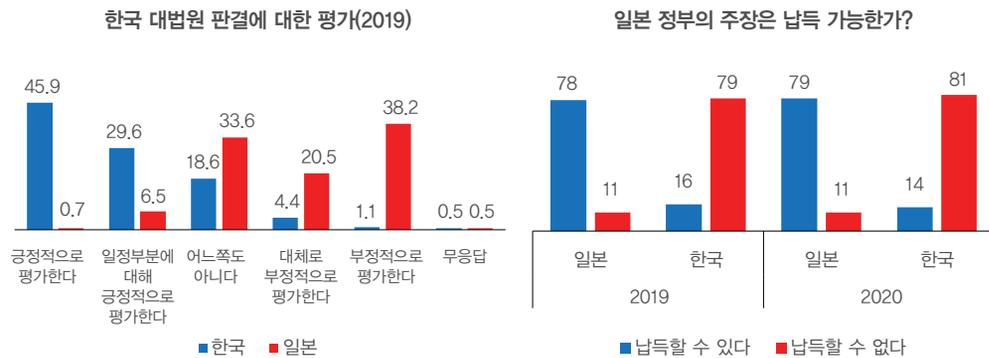
2018.07.27	대법원, 사건 전원합의체에 회부
10.30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소영 대법관),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들이 신일철주금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61381)에서 신일철주금의 상고를 기각하고, '피해자들에게 각각 1억원씩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 비고) 대법원, 2주 전 2012.5.10. 대법원 민사2부(당시 주심 이상훈 대법관)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우리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상고심 원고패소 판결 원심 심리불속행으로 기각(사건번호: 2012다12863)
11.29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 정창희(95)씨 등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6명이 미쓰비시 중공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다67587)에서 "피해자들에게 1인당 8000만 원씩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 확정
12.31	이춘식 씨 등 채권자 7명, 대구지법 포항지원에 PNR(신일철주금 및 모스크의 합작사)의 주식(19만 4,794주) 압류 강제집행 신청서 제출
2019.01.03	대구지법 포항지원, 신일철주금 PNR 주식 8만 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 5000원) 압류 신청 승인
01.09	대구지법 포항지원, 신일철주금 PNR 주식 8만 1,075주(액면가 5000원 기준 4억537만 5000원) 압류 명령 송달
04.01	신일철주금, 일본제철로 법인명 변경
07.19	일본 외무성, 법원행정처가 일본제철에 보낸 PNR 주식압류 결정문 등 해외송달요청서 반송
07.25	법원행정처, 일본 외무성이 반송한 서류 수령(반송사유 없음)
2020.06.01	대구지법 포항지원, 일본제철에 대해 PNR 주식 압류명령 등을 공시 송달 결정
08.04	PNR 주식 압류 명령 등 공시송달 발효 *공시송달: 상대방에게 서류가 전해지지 않을 경우, 법원의 직권 등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서류가 상대방에게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
08.07	일본제철, 대구지법 포항지원 압류명령 즉시 항고
10.08	대구지법 포항지원, 일본제철 주식 특별 현금화 매각명령 심문서, 주식 압류명령 결정 정보 공시송달
12.09	대구지법 포항지원, 일본제철의 한국내 자산매각(현금화) 명령 절차를 위한 심문서 공시송달 효력 발생
12.10	일본제철, 대구지법 포항지원 압류명령 2건에 대한 즉시항고 추가제출
2021.06.07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재판장 김양호)는 강제동원 피해자 등 85명이 일본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5가합13718) 각하
06.14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75명 1심 판결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민사34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에 항소장 제출

08.11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박성인 부장판사)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 이모씨 등 4명이 일본 미쓰비시 매터리얼(전 미쓰비시광업)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단5042169) 기각, 원고 패소 판결
09.27	대전지법 민사28단독(김용찬 부장판사) 강제징용 피해자 양금덕(92), 김성주(92)씨 등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권에 대한 특별현금화명령(현금화) 신청 인용, '강제징용' 미쓰비시 국내자산 첫 매각 명령
12.30	대구지법 포항지원, 이춘식(97)씨 등 강제징용 피해자 18명이 낸 일본제철의 한국 내 자산 매각 신청에 대한 특별 현금화(매각) 명령

※ 출처: 각종 신문보도, 법률신문(<https://www.lawtimes.co.kr/>), 외교부 홈페이지(<https://www.mofa.go.kr/>) 등 참조하여 필자 정리.

[그림 4-4]는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일 여론조사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2019년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문제 판결에 대해 한국 여론의 85.5%가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데 반해(‘긍정적으로 평가한다’ 45.9% + ‘일정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29.6%), 일본 여론은 7.2%만이 긍정적으로 평가하는(‘긍정적으로 평가한다’ 0.7% + ‘일정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6.5%)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4]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한일 여론(2019-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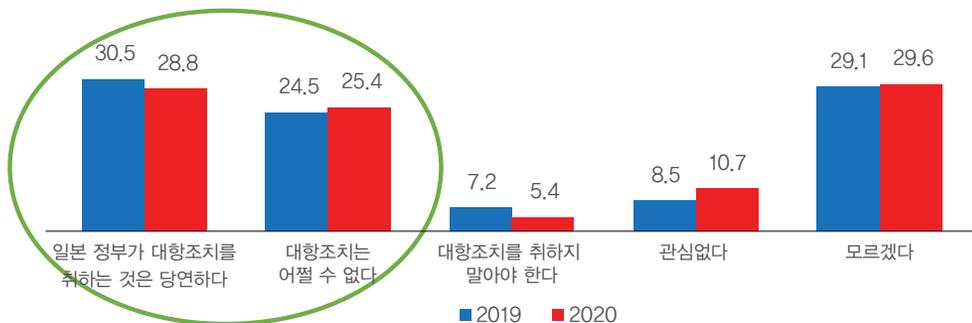
※ 출처: EAI-言論NPO.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 출처: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한일공동여론조사' 각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또한, 2019년과 2020년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의 조사에 의하면, 일본 정부의 주장, 즉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고, 이 문제는 이미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라는 주장에 대해 일본 여론의 2019년 78%, 2020년 79%가 ‘납득할 수 있다’고 응답한

반면, 한국 여론은 2019년 79%, 2020년 81%가 ‘납득할 수 없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나 양국의 인식 차이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유사한 관점에서 한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19년 ‘일본 정부의 대항조치’에 대한 일본 여론은 [그림 4-5]를 통해 알 수 있듯, 일본 정부를 지지하는 여론이 높았다. 구체적으로, “강제징용 관련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제품의 관세 인상을 포함한 대항조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이었는데,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조치로 경제 등 타 분야에서의 대항조치임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지하는(‘일본 정부가 대항조치를 취하는 것이 당연하다’ + ‘대항조치는 어쩔 수 없다’) 의견이 2019년 54.9%, 2020년 54.2%, 이에 대한 반대의견(‘대항조치를 취하지 말아야 한다’) 2019년 7.2%, 2020년 5.4%로 큰 차이를 나타냈다.

[그림 4-5] 한국 대법원 판결 이후 일본 정부의 대항조치에 대한 일본 여론(2019-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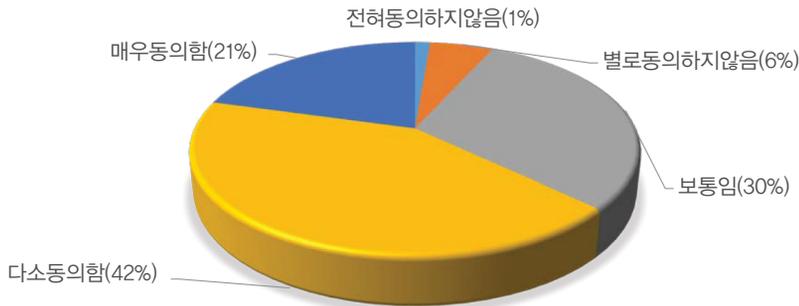
※ 출처: EAI-言論NPO.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각 년도 조사자료 참조하여 필자 작성.

그렇다면 한국의 여론은 어떠한가. [그림 4-6]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대항조치로 일본이 취한 수출규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강경 대응’을 묻는 질문이다. 이 경우, ‘한미관계가 악화되더라도 수출규제 및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에 강경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물었고, 양자 간 역사 문제와 무관한 타 분야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동의한다(다소 동의함 42%+매우 동의함 21%)’는 의견이 63%로 ‘동의하지 않는다(별로 동의하지 않음 5.5%+전혀 동의하지 않음 1.3%)’ 6.8%보다 매우 높게 조사되었다.¹⁰⁷

107. 이러한 결과가 성별, 연령, 교육수준에서는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으나, 정치적 성향에 따라서는 차이가 나타났다. 조사 결과, 통합당, 민주당, 무당파 모두 일본에 대한 강경 대응을 지지했는데, 그중에서도 민주당, 진보적 성향을 가지고 있을수록 정부의 강경 대응에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구분상, 2020. “우리 국민의 일본 인식 및 관련 쟁점에 대한 태도 분석,” 이상신 외, 『통일의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통일연구원, p.209-260.

이와 같은 결과는 양국 정부의 상대국에 대한 강경 대응이 여론의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6] 한미관계와 수출규제·'위안부' 문제 관련 일본에 대한 강경 대응(2020)



※ 출처: 통일연구원. 'KINU 통일의식조사 2020_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참조하여 필자 작성.

유사한 맥락에서,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은 더 이상 일본에 피해배상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질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2019년 54.1%, 2020년 59%로 응답된 반면, '동의한다'는 것은 2019년 17.4%, 2020년 16.6%로 나타나 일본에 대한 피해배상 요구를 지지하는 여론이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¹⁰⁸

그렇다면,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어떠한가. [그림 4-8]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한 것이다.¹⁰⁹ 이에 대해 3년 연속 일본 여론은 '모르겠다'가 가장 많이 답변되었고, 순위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사법부의 판결에 따를 필요가 없다', '제3자를 포함한 중재 혹은

108. 한편, 한일 문제의 해결은 코로나19 상황에서의 대일 협력에 대해서도 강경한 입장으로 나타났다. 「통일연구원」이 2020년도에 발표한 '통일의식조사' 중, "일본은 현재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마스크나 테스트키트 등 의료 부족을 겪고 있습니다. 한국이 일본에 의료용품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응답자의 54.1%(‘적극 지원한다’ 2.9% + ‘일본 요청 시 지원한다’ 51.2%)는 긍정적인 태도를, 45.9%(‘한일문제 해결 후 지원한다’ 28.9% + ‘요청하더라도 지원해서는 안된다’ 17%)로 비교적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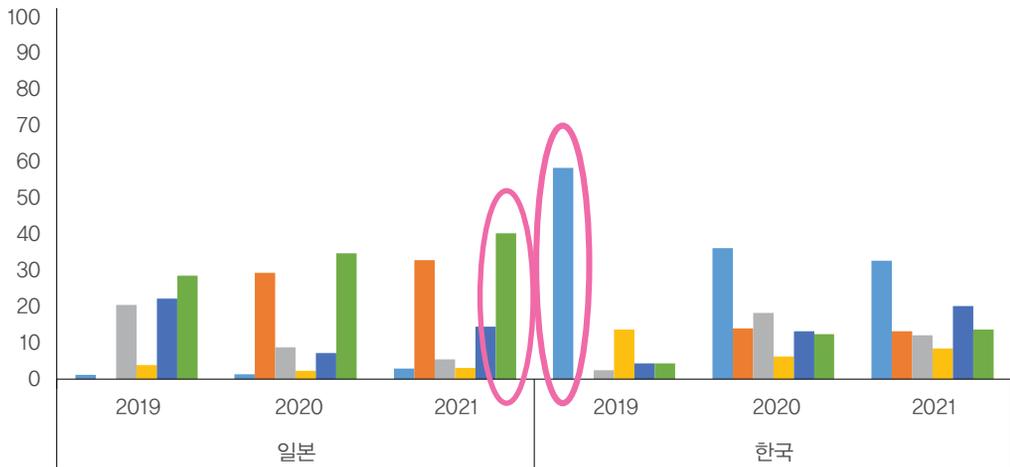
109. 본 연구에서는 가장 최근에 시행된 2021년도의 선택지와 비교를 따랐다. 다만, 3년 연속 시행된 본 질문에 대한 선택지가 약간씩 다르게 설정된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2021년도의 "한국 사법부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과 현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답변은 2020년도에는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기업의 배상조치, 강제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2019년도에는 "한국 정부가 배상조치 해야 한다"로 설정되었다. '강제집행'이라는 표현이 응답자의 답변 선택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림 4-7] 강제징용과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한국은 더 이상 일본에 피해배상을 요구해서는 안된다(2019-2020)



※ 출처: 통일연구원, 'KINU 통일외식조사 2020_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참조하여 필자 작성.

[그림 4-8] 강제징용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한일 여론(2019-2021)



- 한국 사법부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과 현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 한국 사법부의 판결은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과 배치되므로 일본기업은 따를 필요가 없다
- 일본에 더 이상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피해자에 보상을 추진한다
- 양국의 기업과 민간의 기부로 재단을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한다
- 한일 양국은 제3자를 포함한 중재 혹은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국제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
- 잘 모르겠다

※ 출처: EAI-言論NPO,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각 년도 조사자료 참조하여 필자 작성.

국제사법재판소를 통한 국제적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가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일본 여론은 앞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은 국제법 위반이고, 이 문제는 이미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되었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이 납득 가능하다'는 답변이 많았던 점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한편, 한국 여론은 '한국 사법부 판결에 따라 강제집행과 현금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가 3년 연속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만, 한국의 경우, 2019년도 강제집행과 현금화에 대한 답변(58.1%)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던 것과 달리, 2020년 36%, 2021년 32.6%로 그 수치가 점차 감소하고, '중재 혹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단'이 2019년 4.3%, 2020년 13.2%, 2021년 20.1%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실제 해결방안으로 주로 거론되었던 '양국 기업과 민간의 기부로 재단을 설립하여 피해자에게 보상한다'는 방안은 한일 양국 여론 모두에게 큰 지지를 얻지는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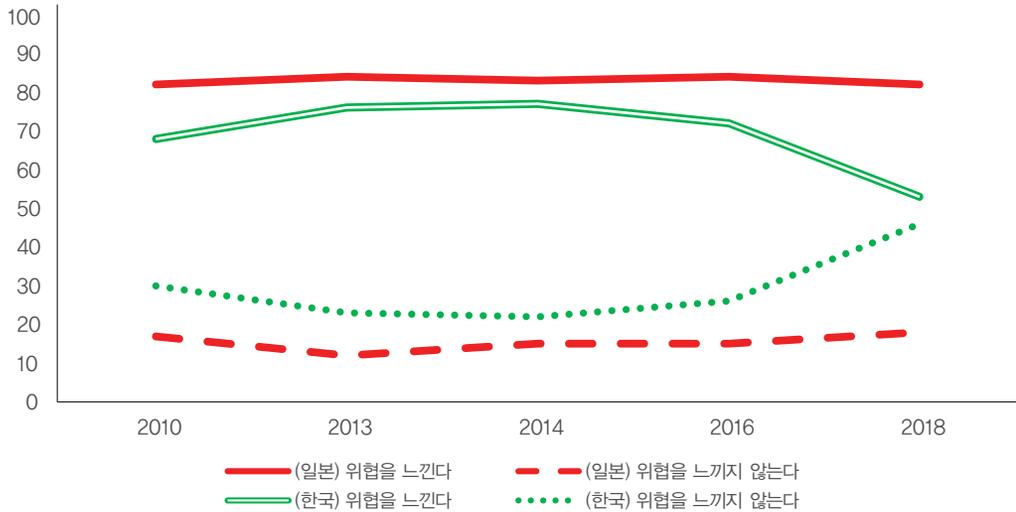
요약하면, 일본 여론은 '모르겠다'는 의견을 제외하고 보면, 강제징용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고, 따라서 한국 대법원의 판결에 따를 필요가 없다는 의견과, 한국 여론은 강제징용 문제는 끝나지 않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양 정부의 주장과도 동일하다. 다만, 한국의 경우 강제징용 문제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국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나타나, 향후 어떠한 해결방안이든 국내적 동의와 지지를 얻기 위한 설득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4.2 협력 구도: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 - 북한 문제와 중국 문제

■ 북한 문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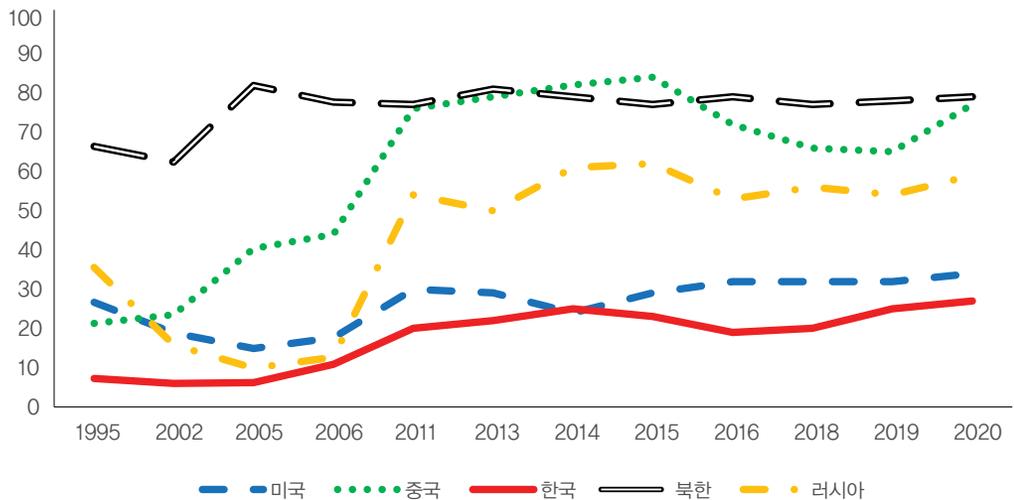
북한 문제는 한일 양국이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자, 한일 및 한미일 협력이 도모되는 사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 문제에 대한 한일의 입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협력 사안과 동시에 갈등을 겪는 사안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이해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여론이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먼저 알아보려고 한다. 아래 [그림 4-9]은 일본과 한국의 북한에 대한 위협감(2010-2018)을 나타낸 것인데, 전 조사기간 동안 일본이 한국에 비해 북한에 대해 높은 위협감을 느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9] 북한에 대한 위협(2010-2018)



※ 출처: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한일공동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그림 4-10] 일본에게 군사적 위협이 되는 국가(199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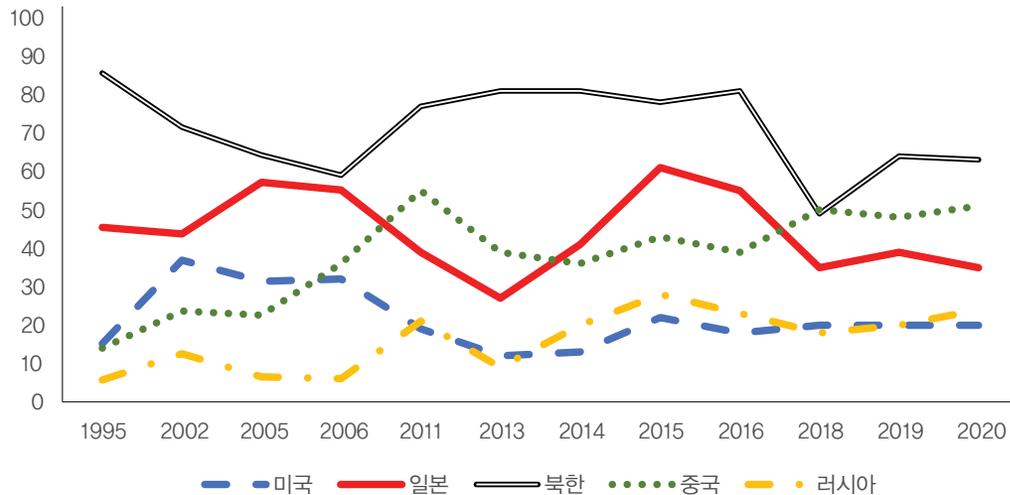
※ 출처: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한일공동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이와 같은 일본의 위협 인식은 타 여론조사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위의 [그림 4-10]의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에서 조사한 ‘일본에게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는 국가(1995-2020)’를 보면, 북한에 대한 위협감이 조사기간 평균 76.3%의 수치를 기록하며, 타 국가

에 비해 높은 위협감을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시적으로 중국을 북한보다 더 위협적으로 느낀 시기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북한에 대한 위협감이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그림 4-11]과 같이 한국 또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위협을 느끼지만, 그 증감 경향이 크고, 시기에 따라서는 일본 혹은 중국과 유사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 4-11] 한국에게 군사적 위협이 되는 국가(199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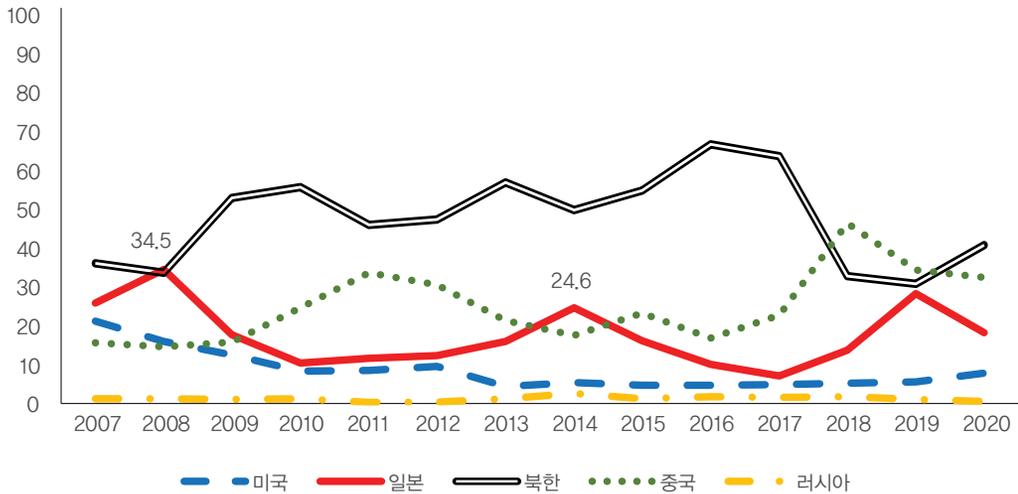
* 출처: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한일공동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같은 맥락에서, [그림 4-12]와 같이, 한국은 북한, 중국, 일본에 대해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로 미국과 러시아에 비해(미국: 평균 8.5%, 러시아: 평균 1.25%), 상대적으로 위협의 정도를 높게 느끼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핵 도발 및 미사일 발사 실험 등으로 한반도 평화에 직접적인 위협 원인을 제공하는 북한을 제외하고 볼 때, 중국 및 일본에 대해 느끼는 위협의 정도는 주목할 만하다.

특히,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북한 문제 해결과 한미일 협력에서 일본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일본을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로 여기고 있다. 구체적으로, 미국을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하는 수준이 평균 8.5%로 나타나는 것과 달리, 일본에 대해서는 시기에 따라 북한과 유사한 수준의 위협국가로 느끼거나(2008년: 일본 34.5%, 북한 33.7%, 2019년: 일본 28.3%, 북한 30.8%), 중국보다 더 위협적인 국가로 인식(2007년~2009년, 2014년: 일본 24.6%, 중국 17.6%)하기도 나타난다. 이는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일본의 역할 및 위치에 대한 한국의 부정적 혹은 제한적 인식을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4-12] 한반도 평화에 위협적인 국가(2007-2020)



※ 출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각 년도 참조하여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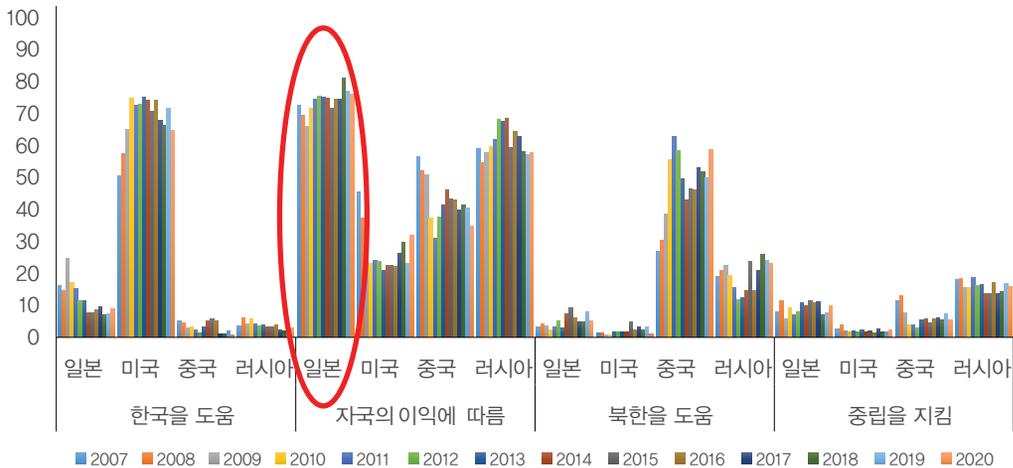
이와 같은 인식은 북한 문제에 대해 일본과의 협력 가능성 문제와 이어진다. 아래 [그림 4-13]은 '한반도 전쟁 시 주변국의 태도에 대한 예상'을 나타낸 것인데, 이 중 '한국을 도울 나라'로 미국을, '북한을 도울 나라'로 중국을 가장 많이 지목한 것과 달리, 일본에 대해서는 '자국의 이익에 따를 것이다'라고 보는 인식이 가장 많았다. 즉, 한국은 미국을 한반도 평화를 위한 「가까운 조력자」이자 「당위적 우호국」으로, 러시아와 중국을 가깝지 않고, 유사시 북한을 돕지만, 한반도 평화를 위해 필요한 「필연적 관리국」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와 달리 일본에 대해서는 때로는 위협적으로도 느끼고, 한반도 유사시 한국을 도울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어떻게 행동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보는 인식이 강하다. 이는 곧 유사 상황에서 한국의 일본에 대한 신뢰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¹¹⁰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한반도 통일을 위한 일본의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인식 감소로 이어진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그림 4-14]와 같이, 한국의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에 대한 인식과도 이어진다. 한국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 미국(평균 92.5%)과 중국(평균 83.3%)의 협조가 필수적이고, 러시아(평균 68.7%)에 대해서도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는

110. 최규빈. 2020. "주변국과의 관계 인식" 「2020 통일의식조사」,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소, p.1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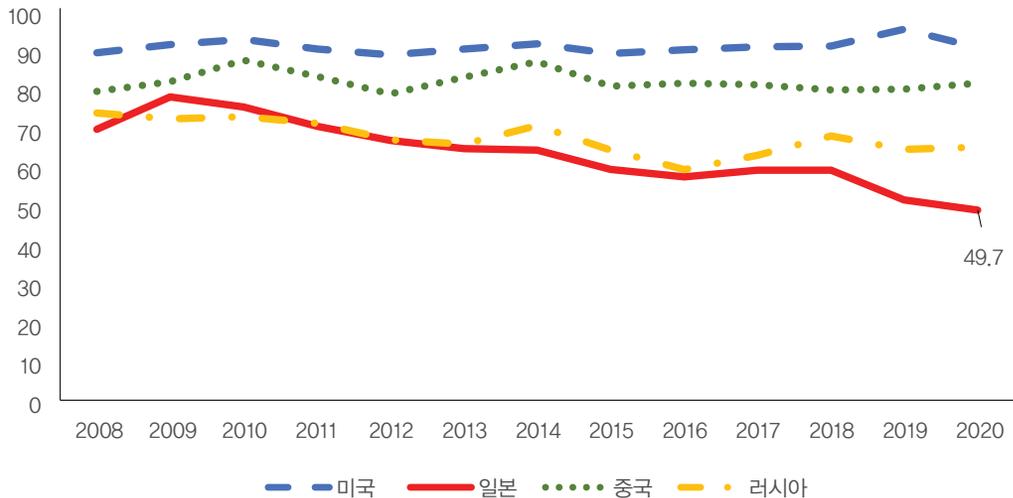
반면, 일본에 대해서는 협조가 필요하다는 응답이 점차 줄어들어 2020년에는 처음으로 50% 이하(‘필요하다’: 49.7%, ‘필요하지 않다’: 50.3%)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인식은 일본에 대해서는 실제 한반도 유사시 한미일 협력의 필요성 및 중요성과 한국 여론 사이의 괴리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¹¹¹

[그림 4-13] 한반도 전쟁 시 주변국의 태도 예상(2007-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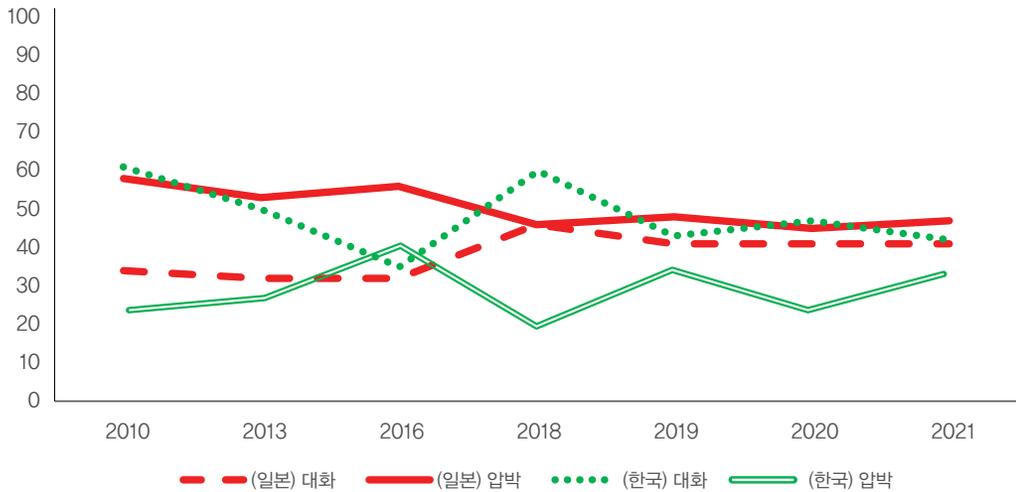
※ 출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각 년도 참조하여 필자 작성.

[그림 4-14] 한반도 통일을 위한 주변국의 협조 필요성(2008-2020)



※ 출처: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 각 년도 참조하여 필자 작성.

[그림 4-15] 북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한일 여론(2010-2021)



※ 출처: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한일공동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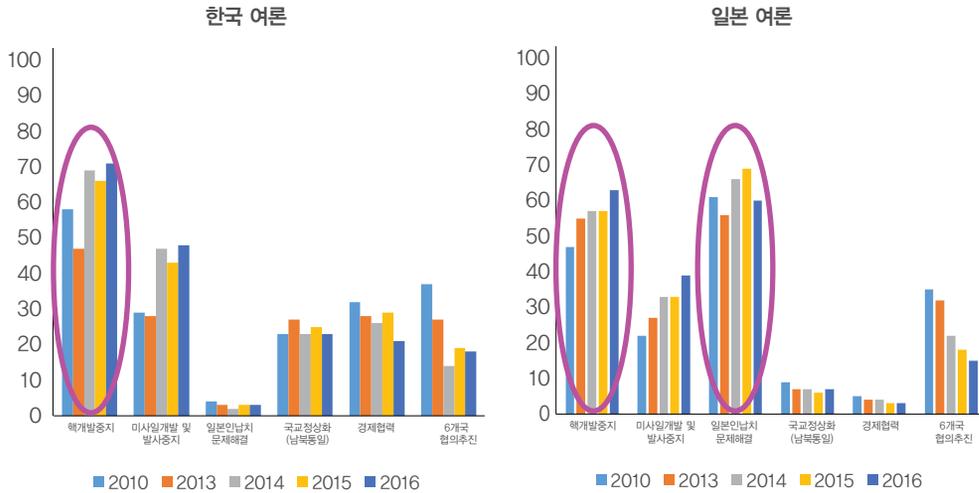
한편, 한일 여론은 북한 문제의 해결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그림 4-15]는 '북한 문제 해결방안'에 대한 한일 양국의 여론을 조사한 것인데(2010-2021), 일본의 '압박' 여론이, '대화' 여론보다 높음을 알 수 있다. 2018년도 전후로 '대화' 여론이 높게 나타난 것은 당시 남북/북미 정상회담 등에 의한 한반도 유화 무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이 역시도 한국 여론보다는 그 수치가 높지 않아, 한국에 비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북한 문제를 바라보는 한국과 일본의 시각 차이는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 해결 할 문제(2개 선택)'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4-16]에서 알 수 있듯, 일본은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인 납치 문제', '핵개발 중지', '미사일개발 및 발사 중지'를 주요 사안으로 여기는 것과 달리, 한국은 '핵개발 중지', '미사일개발 및 발사 중지', '남북통일', '경제협력' 등을 꼽았다. 특히, 일본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일본인 납치 문제(60%, 2016년도)'에 대해 한국은 3%(2016년도)로 우선순위를 높게 평가하고 있지 않음

111. 유사하게 1995년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한일공동여론조사'에서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게 주는 전반적인 영향"에 대해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일본은 '좋은 영향' 33.1%, '나쁜 영향' 17.2%, '영향없다'가 31.8% 였으나, 한국은 일본에 대해 '좋은 영향' 31.8%, '나쁜 영향' 43%, '영향없다'가 18.9%로 조사되었다. 이는 1995년 당시에도 한국 여론은 일본 여론보다 한반도 통일이 일본에 대해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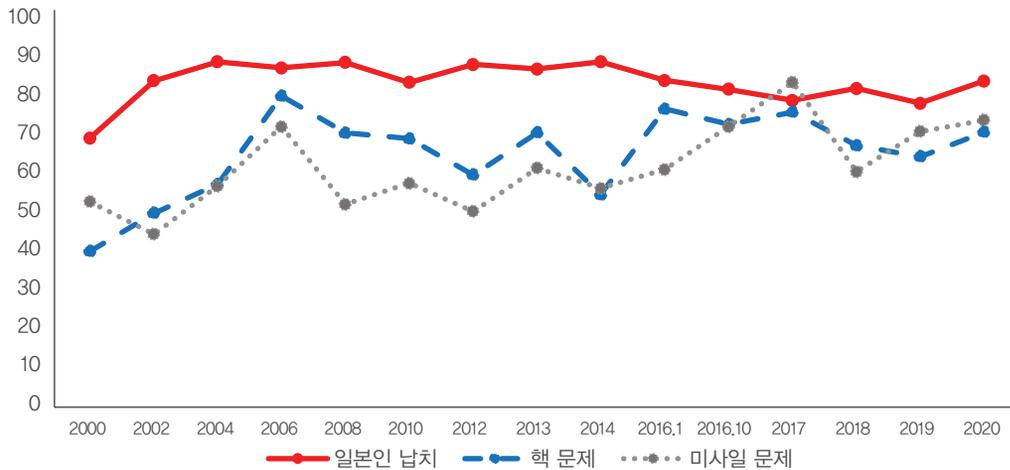
며, 한국이 비교적 중요하다고 여기는 ‘경제협력(21%, 2016년도)’에 대해 일본은 3%(2016년도)만이 우선 해결과제로 답변하였다. 이처럼 한일 양국은 역내 평화를 위해 함께 풀어야 할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현저한 인식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16]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우선해야 할 일(2010-2016)



※ 출처: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한일공동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그림 4-17] 북한에 대한 관심사항: 일본 여론(2000-2020)



※ 출처: 내각부, '외교에 관한 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특히, 일본에서는 북한 문제 해결에 있어 일본인 납치문제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는데 이는 [그림 4-17]의 내각부 조사(2000-2020)에서도 나타난다. 실제로 납치 문제의 해결을 어느 수준까지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정치적 수사의 측면과 실질적 해결 가능성의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¹¹² 납치 문제가 일본에게 있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사안임은 이론(異論)의 여지가 없다. 이에 대해 아베 총리에 이어 스가 총리, 그리고 현재 기시다 총리까지도 북한과의 '조건없는 만남'을 강조하고 있지만, 북일관계에 커다란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한일 협력 사안인 '북한 문제'에 대해서도 양국의 인식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한일 양국 모두에게 핵을 가진 북한이 위협적인 대상이라는 인식은 공유되어 있으나,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과 우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서는 다르게 인식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와 같은 인식의 차이는 곧 북한 문제가 양국 간 협력 사안이자, 동시에 갈등 사안으로 인식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중국 문제

한일 협력이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중국 문제'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격화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양측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한국과 일본은 그 입장이 매우 유사하다. 특히, '안보' 분야에서 동맹국으로서 미국과의 협력이 절대적이며, '경제'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결코 가볍게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위, '안미경중(安美經中)'의 구도 속에서 종종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에 놓이기 쉬운 양국의 협력은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이와 같은 모습은 좀처럼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한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인식, 그리고 대중 정책이 상이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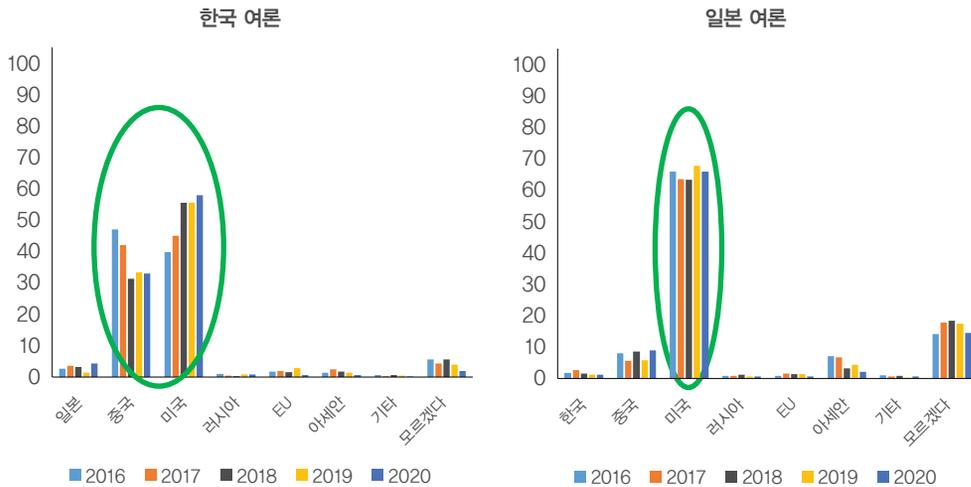
[그림 4-18]은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자국과 가장 중요한 관계의 국가'에 대해 질문한 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으로, 한국 여론이 미국과 중국을 중요한 국가로 인식하는 것과 달리, 일본 여론은 압도적으로 미국을 중요한 국가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유사한 인식은 [그림 4-19]의 조사에서도 나타난다. 한국 여론은 미국을(평균: 55.75%) 중국보다(평균 39.25%)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미국보다 중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도 있

112. 북일 납치문제에 대한 일본의 입장 변화에 대해서는 최은미, 2019. "북일 납치문제에 대한 아베내각의 인식 및 방침 변화 분석: 「소신표명연설」과 「시정방침연설」을 중심으로," 「국가전략」 25(4), pp.109-138.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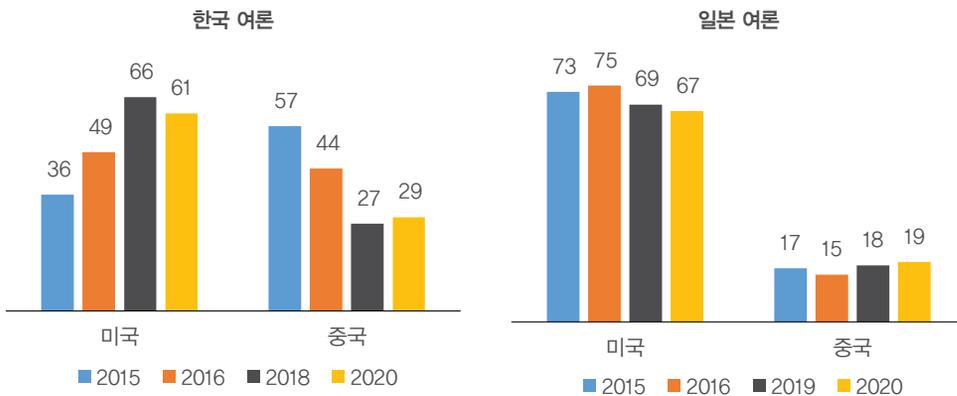
고(2015년 미국 36%, 중국 57%), 비슷한 정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기(2016년 미국 49%, 중국 44%) 있어서 전 기간 미국을 중요하게 여기는 일본 여론과는 차이를 나타낸다.

[그림 4-18] 자국과 가장 중요한 관계의 국가(2016-2020)



※ 출처: EAI-言論NPO,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각 년도 조사자료 참조하여 필자 작성.

[그림 4-19] 미국과 중국 중 어느 국가가 더 중요한가(201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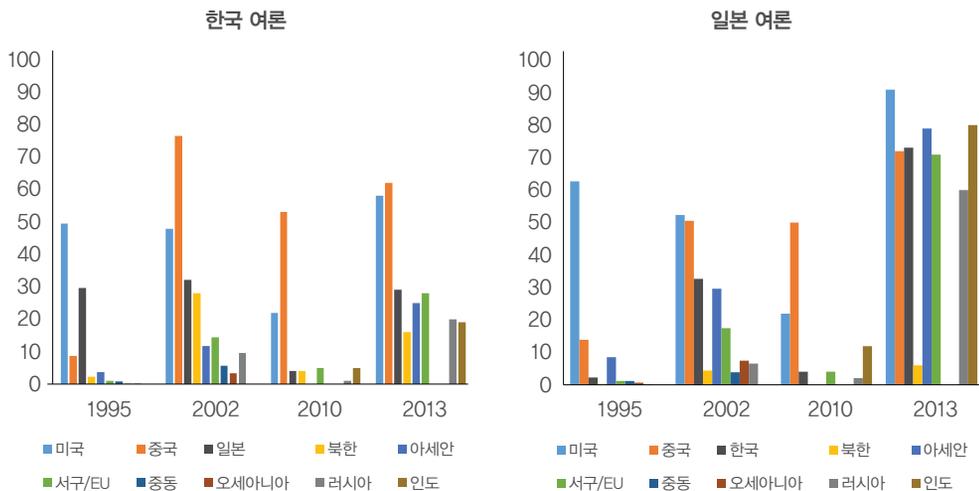


※ 출처: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한일공동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그렇다면, 경제적 차원에서 중국은 어떻게 인식되는가. [그림 4-20]은 '자국 경제에 중요한 국가(복수응답)'에 대해 질문한 것으로, 한국은 미국의 중요성을 높게 여기면서도 시간이 흐를수록 중국의 중요성을 더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 여론은 전(全)

시기 미국을 가장 중요한 국가로 보았다. 중국이 부상함에 따라 중국을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로 여기고는 있지만, 여전히 미국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2013년도 기준이지만,¹¹³ 인도, 아세안 등과의 경제관계를 점차 중요하게 여기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한국도 인도, 아세안 등과의 경제적 관계를 중요하게 인식하기 시작하였지만, 일본에 비해 그 수치가 높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EAI-言論NPO」의 2021년도 조사에서도 유사한 관점이 확인된다. ‘경제관계에 있어 중요한 국가’로 한국은 미국 86.7%, 중국 80.4%로 미국과 중국이 유사한 수치를 보였으나, 일본은 미국 71.7%, 중국 44.1%로 미국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덧붙여, 한국은 미국(86.7%), 중국(80.4%) 다음으로 일본(52.4%)을 중요하다고 응답한 것과 달리, 일본은 미국(71.7%), 중국(44.1%), 인도(33.3%), ASEAN(31%), EU(28.5%) 다음으로 한국(21.8%)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20] 자국 경제에 중요한 국가(복수응답)(1995-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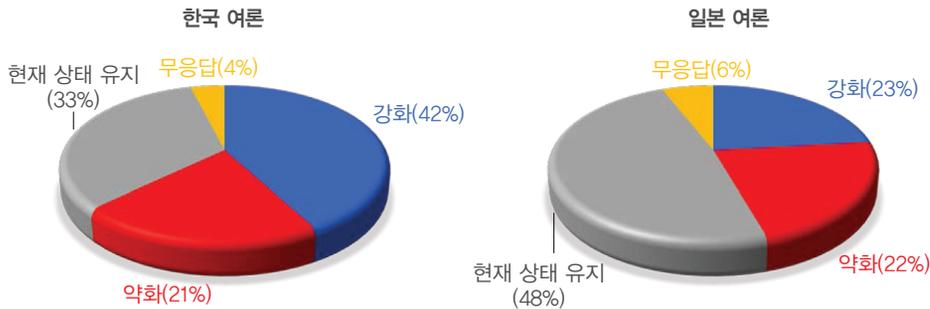


※ 출처: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한일공동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이와 같은 중국에 대한 중요성 인식은 '향후 중국과의 경제관계'에 대한 인식에도 영향을 미친다.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의 2021년 조사에 의하면, [그림 4-21]과 같이 한국은 '강화'가 42%로(일본: 23%), 일본은 '현재 상태 유지'가 48%(한국: 33%)로 가장 높은 수치를 차지하였다.

113. 해당 질문은 2013년이 마지막이고, 그 이후부터 2021년 현재까지 실시되지 않았다.

[그림 4-21] 향후 중국과의 경제관계를 강화/약화시키는 것이 좋은가?(2021)



※ 출처: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한일공동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미중 갈등과 중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 한일 협력의 필요성이 강조됨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인식, 그리고 대중 정책 및 전략적 입장은 다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본은 안보와 경제 등 전반적인 측면에서 미국과의 관계를 절대적으로 중요시하는 가운데, 경제 문제에 있어서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1990년대 일본의 버블경제가 붕괴되고, 2010년 중국에게 세계경제 2위의 자리를 빼앗기면서 중국에 대한 반감은 있지만, 중국과의 경제적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여전히 일본은 세계 경제대국 3위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고,¹¹⁴ 과거의 영광과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지위를 회복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본에게 중국은 위협적이지만, 경제적으로 중요한 국가이며, 동시에 넘어서야 하는 존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한국은 앞서 알아본 바와 같이, 일본에 비해 중국의 중요성을 높게 인식하고 있다. 이는 경제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 문제 해결과도 연관된다. 이처럼 한국과 일본의 중국에 대한 인식은 일치하지 않으며, 따라 양국의 대중 정책과 전략의 공통점을 찾기는 쉽지 않다.

결론적으로, 한일의 협력 사안으로서 중국의 부상과 이에 대한 공동대응 또한 중국에 대한 양국의 인식 차이로 용이하지 않을 것으로 여겨진다. 중국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한국과 일본의 대중 정책 및 전략을 다르게 형성하기 때문이다. 일본이 미일 동맹을 기축으로 중국과의 관계를 형성해 왔다면, 한국은 미중 사이의 균형외교를 추진해 온 것도 이와 같

114. IMF '세계전망보고서'에 의하면, 2021년 기준 GDP 1위 미국 219,216억 달러, 2위 중국 164,928억 달러, 3위 일본 51,032억 달러로 나타났고, 독일, 프랑스, 영국, 인도, 이탈리아, 캐나다, 한국이 그 뒤를 이었다. 한국은 16,741억 달러로 10위에 해당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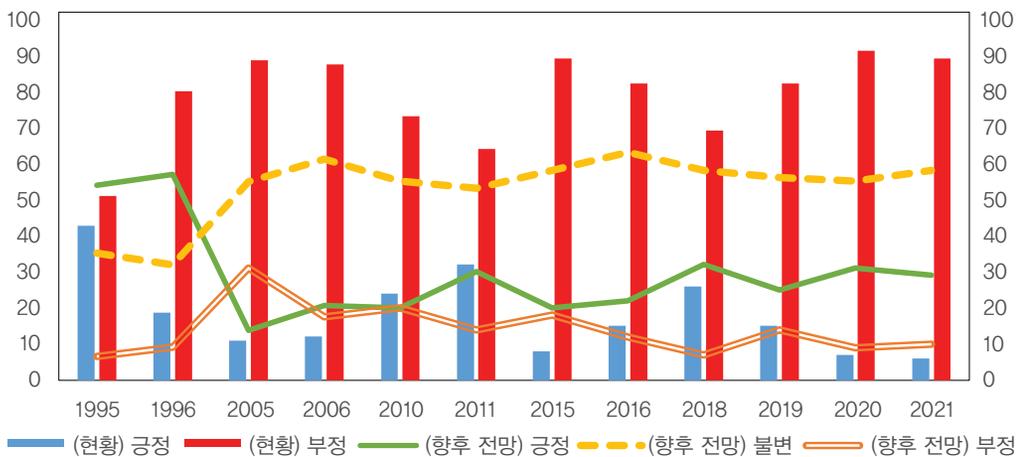
은 인식이 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에서 알아본 바와 같이, 한일 간의 대표적인 갈등 사안인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문제, 한일의 협력 사안인 북한 및 중국 문제에 대한 양국 국민들의 인식 차이는 크다. 이는 곧 양국이 풀어야 할 갈등 사안에 대해서도, 양국이 힘을 합쳐야 할 협력 사안에 대해서도 양국이 함께하기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하듯, 향후 양국관계에 대한 전망도 밝지 않다.

4.3 향후 전망

[그림 4-22]와 [그림 4-23]은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의 ‘한일공동여론조사’ 결과 중 일본과 한국의 한일관계 현황 평가 및 향후 전망(1995-2021)을 재구성한 것이다.

[그림 4-22] 한일관계 현황 평가 및 향후 전망(1995-2021): 한국 여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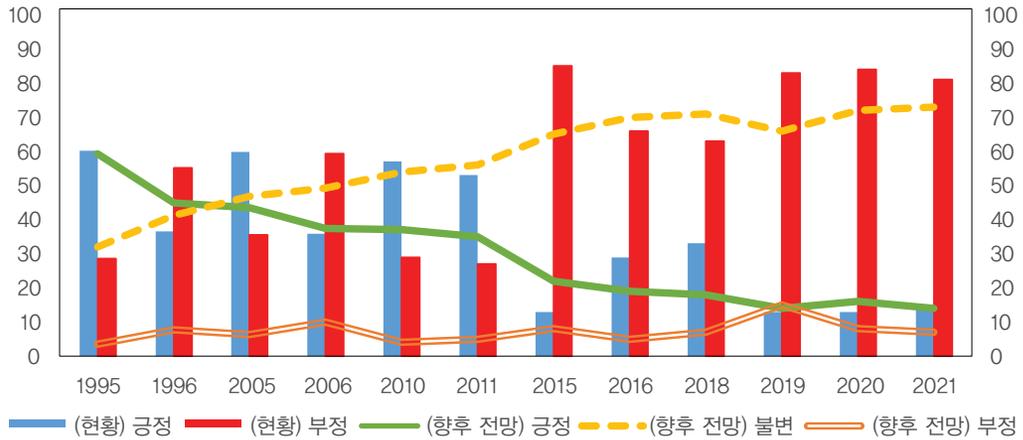


※ 출처: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한일공동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이를 통해 지난 20여 년간 양국의 여론은 ‘한일관계 현황’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시각이 증가하였고, 한국이 일본보다 현재 상황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본의 경우, ‘향후 전망’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양국 모두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인식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한일 양국 모두 한일관계 현황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전망하는 것은 한일관계 개선의 실현가능성을 낮게 본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현재의 한일관계가 다양한 분

야에서 갈등이 쌓이고, 그 가운데 양국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들이 좌절되며 실망과 불신이 지속되며, 비관적 전망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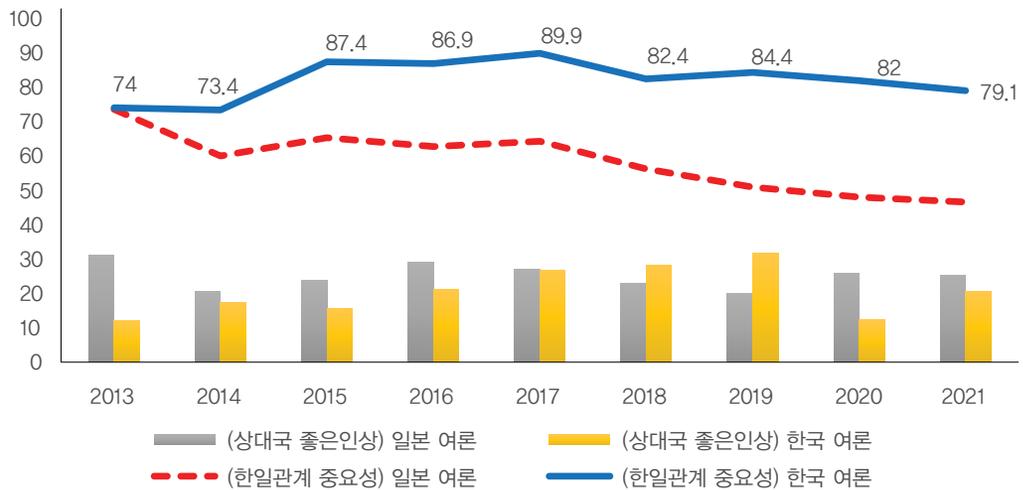
[그림 4-23] 한일관계 현황 평가 및 향후 전망(1995-2021): 일본 여론



※ 출처: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한일공동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다만, 작은 차이이기는 하지만 '현황'에 대해서는 한국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지만,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한국이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한일관

[그림 4-24] 한국과 일본의 상대국에 대한 인성과 관계의 중요성(2013-20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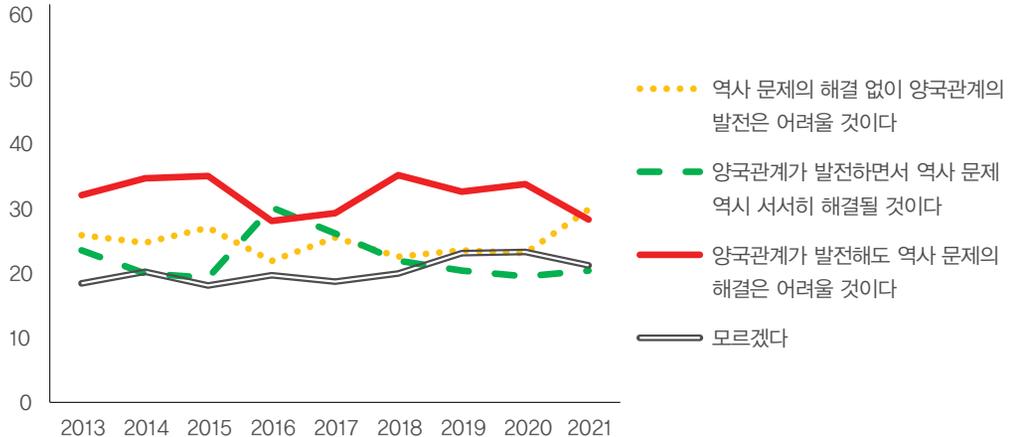


※ 출처: EAI-言論NPO,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각 년도 조사자료 참조하여 필자 작성.

계의 중요성'에 대해 한국의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나는 것과 연관지어 볼 수 있다. [그림 4-24]와 같이, 한국은 '한일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비록 하락하고 있지만, '중요하다(9년 평균 82.2%)'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 일본 여론에서 한일관계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더 큰 폭으로 하락하고, 수치도 한국에 비해 낮게(9년 평균 68.6%) 나타나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유사한 인식은 [그림 4-25]와 [그림 4-26]의 '한일관계와 역사 문제'에 대한 양국의 인식에서도 나타난다. 한일 양국 모두 역사 문제 해결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더 높지만, '양국 관계가 발전하면서 역사 문제 역시 서서히 해결될 것이다'에 대해 일본 여론보다 한국 여론이 더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일관계 현황에 대한 '부정적 평가'가 증가하는 가운데, 향후 전망에 있어 '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의견이 절대적으로 높게 나타나지만, '부정적 추이' 속에서도 '긍정적인 변화'로의 기대가 있다는 것은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다.¹¹⁵ 다시 말해, 한국 여론은 역사 문제 해결의 어려움 속에서도 한일관계 발전에 대한 기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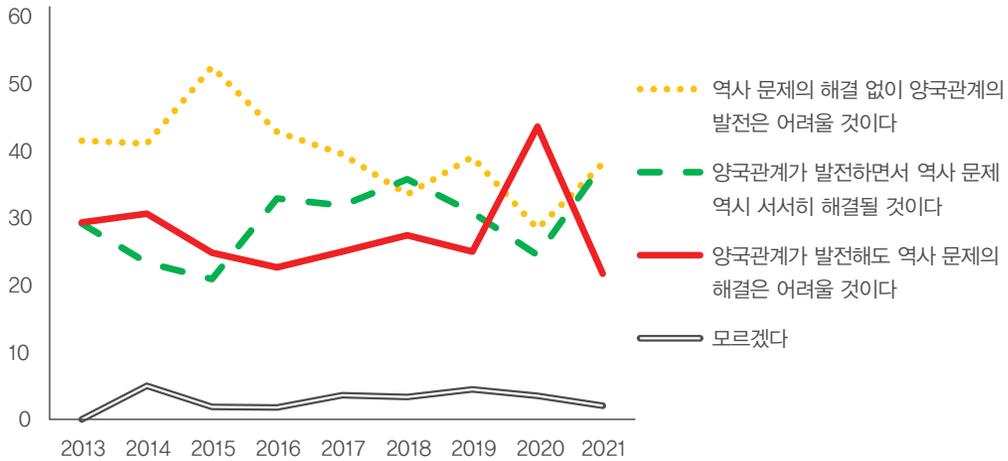
[그림 4-25] 한일관계와 역사 문제(2013-2021): 일본 여론



※ 출처: EAI-言論NPO.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각 년도 조사자료 참조하여 필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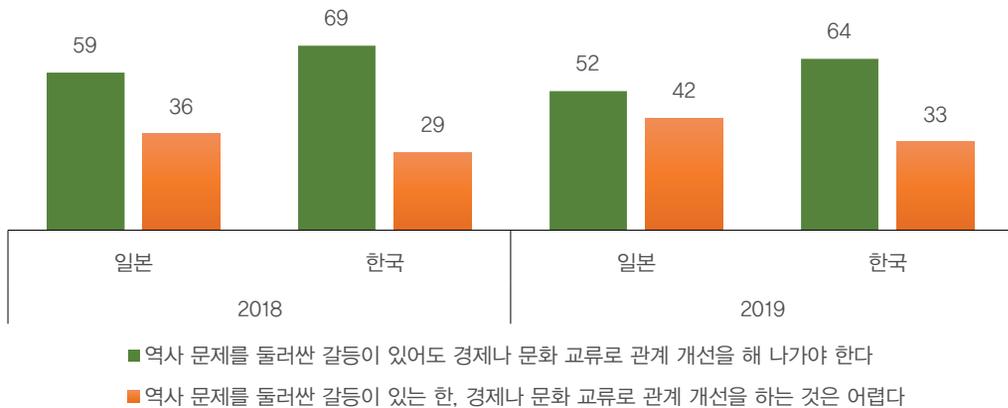
115.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조사한 '한일 갈등에 대한 양국 시민 인식 조사'에서도 전체적으로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가 가장 높은 비율이었지만, 그 다음으로 한국 여론이 일본 여론보다 양국의 10년 뒤 정치, 경제, 문화관계 등 장기 전망에 대해 더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정치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 22.6%, 일본 10.8%가, 경제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 28.8%, 일본 8.8%가, 문화 관계에 대해서는 한국 34.6%, 일본 13.7%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그림 4-26] 한일관계와 역사 문제(2013-2021): 한국 여론



※ 출처: EAI-言論NPO,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 각 년도 조사자료 참조하여 필자 작성.

[그림 4-27] 역사 문제와 경제 및 문화 교류를 통한 관계 개선(2018-2019)



※ 출처: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한일공동여론조사' 각 년도 조사 참조하여 필자 작성.

같은 맥락에서, [그림 4-27]에서 볼 수 있듯이, 역사 문제가 있더라도 경제나 문화 교류 등을 통해 관계를 개선해나가야 한다는 데에 한국이 일본보다 적극적인 것으로 나타난다. 유사한 관점에서 2021년 「EAI-言論NPO」의 여론조사에서도 ‘역사 갈등으로 악화된 한일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질문에 대해 한국 측 응답자의 71.7%가 ‘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 (2020년 61.2%)’로 답한 데 반해, 일본 측 응답은 46.7%(2020년 38.8%)에 그쳤다.

5. 나오며: 정책적 고려사항

2012년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과 일본천황 사죄발언 이후 급격히 악화된 한일관계는 2018년 제주관함식 욱일기문제, 레이더 조사(照射)/초계기 저공비행 갈등,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문제 판결과 2019년의 일본의 수출규제 및 한국의 일본제품 불매운동, 한일 GSOMIA 파동, 그리고 2021년 다시 불거진 '위안부' 문제 등 역사 문제에서 시작한 양국 갈등이 정치, 경제,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복합적으로 얽히며 대립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직면한 전 세계적 코로나19 확산 위기는 한일 간 교류마저 급속하게 감소시켰다. 해소되지 않은 양국 갈등이 쌓여가는 가운데 소통이 줄어들고, 불신과 갈등의 골이 깊어지며, 서로에 대한 이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 조사를 통해 양국이 서로에게 어떠한 존재로 자리 매김하여 왔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고 각종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양국은 서로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긍정적 인식보다 강하고, 그중에서도 '한국의 대일 인식'이 '일본의 대한국 인식'보다 더 부정적임을 알 수 있었다. 더불어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이러한 부정적인 인식은 수십 년의 시간적 흐름 속에서도 비교적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한국의 대일 인식에 비해 가변적이다. 시기에 따라 긍정 인식이 부정 인식보다 높게 나타나기도 하였다.

다만, 이와 같은 긍정 혹은 부정적 인식이 곧 상대국과의 관계에 대한 중요성과 직결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해, 한국은 일본에 대해 부정적인 감정을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한국은 일본에 대한 오래된 반감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중요한 국가로 인식하고 있음을 많은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일본은 한국의 부정적인 대일 인식에 비교할 때 한국에 대한 반감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 오히려 일본의 한국에 대한 인식은 긍정이 부정을 상회할 때도 있으며, 인식의 변화 양상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한국과의 관계의 중요성을 상대적으로 낮게 여기고 있으며, 그러한 경향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

요약하자면, 한국에게 일본은 좋아하지는 않지만 중요한 국가, 일본에게 한국은 싫어하지는 않지만 중요하지도 않은 국가로 인식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차이 속에

서 결국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첫째, ‘높은 친근감에도 불구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일본에게’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방법, 둘째, ‘일본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면서도 부정적 대일 인식을 갖고 있는 한국에게’ 일본에 대한 반감이 한일관계 발전을 저해하는 것을 타개하는 방법을 찾는 데 있다. 이를 위해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다음의 사항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일본에 대해서는’ 친근감을 넘어 한국의 전략적 중요성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일관계의 중요성은 당위적 이유를 넘어 실리적이고, 구조적인 이유에 기반한다. 한반도의 불안정한 상황은 일본에게 직간접적 악영향을 미치며, 한반도 유사시, 한미일 3국은 군사·안보적 공조체제를 갖추고 있어 함께 행동할 필요가 높아진다. 또한, 경제적으로도 한국과 일본은 거대한 글로벌 밸류체인 속에서 함께 성장 및 발전하는 관계이다. 국제 정치 경제 구조에서 유사한 위치를 점하는 양국이 경쟁관계에 놓일 때도 있지만, 동시에 양국은 상호협력적 관계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역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등의 국가의 근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이다. 따라서 양국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수호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하며, 이를 저해하는 움직임에 함께 대응해 나가야 한다. 이 외에도 양국이 함께 극복하고, 협력해야 할 문제는 적지 않다. 점증하는 미중 갈등 속에서 안보적으로 미국과 함께 하고, 경제적으로 중국과의 연계가 높은 양국이 협력하여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 또한 동맹을 강조하는 바이든 행정부의 반중(反中) 연대 형성 움직임은 한국과 일본 양국 모두에게 부담되는 과제인 만큼 함께 대응책을 모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또한, 북한 문제 해결과 북일관계 안정화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의 마지막 열쇠인 만큼 한일 간의 긴밀한 소통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최근 더욱 주목받는 기후변화, 환경, 보건, 재해재난 등과 같은 초국경적 위협에 대한 공동대응도 불가피하다. 따라서 원만한 한일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한반도, 나아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런데 한일 양국 모두 이러한 전략적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 한국의 동북아 구상인 ‘동북아플러스책임공동체(NAPCR, Northeast Asia Plus Community of Responsibility)’에도 일본의 위치는 미미하고, 일본의 대외구상인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Free and Indo-Pacific)’에서도 한국의 위치는 찾기 어렵다. 특히, 일본의 ‘외교청서’, ‘방위백서’, ‘통상백서’ 등 일본의 공식입장과 인식을 나타내는 주요 문서 등에서 한국과의 협력을 강조하는 모습은 점점 찾기 어려워지고 있다. 일본에게 한일 협력은 주로 북한 문제, 한미일 공조 등 지역 현안에 국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이다. 그러나 앞

서 언급하였듯, 한일 협력은 지역 현안 문제 해결을 넘어 더 큰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한국은 한일 협력의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함은 물론, 일본에게 한국의 중요성을 보다 알릴 필요가 있다. 그리하여 한일 양국 모두 외교 전략에서 서로의 위치를 재점검하고, 한일관계의 중요성을 되새기며, 양국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치, 외교,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전략대화를 확대해 나가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지켜 나가기 위한 다양한 연합체 및 소다자 협력 등에 적극적인 참여를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한국에 대해서는’ 일본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한일 협력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지 않도록 한일 협력의 중요성 및 이를 통한 실익을 알리는 노력이 필요하다.

앞서 한국의 대일 인식이 일본의 대한국 인식보다 부정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한국의 일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역사적 경험과 기억에 기반하여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것으로 이를 정부 차원에서 작위적으로 바꾸는 것은 불가하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도 볼 수 없다. 그러나 여론에 이끌려 우리의 전략적 판단이 흔들리고, 국익에 실질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 또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다. 따라서 일본으로부터의 노력을 이끌어내는 것과 동시에 한일 협력의 필요성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 이익에 대한 우리 국민의 이해를 높여 가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북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과의 협력이 왜 중요한지, 이를 통한 한국의 국익은 무엇인지, 한일관계의 개선을 통해 동북아의 안정은 어떻게 담보될 수 있는지 등을 보다 알기 쉽고, 납득 가능하게 알릴 필요가 있다.

정책 수립과 시행에 있어 여론의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지만, 한일관계는 유독 여론에 민감하다. 그리고 우리는 그동안 한일관계의 다양한 정책들이 부정적 여론에 의해 바뀌는 것을 수도 없이 목도해 왔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한일관계가 국내정치적으로 악용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향후 이러한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일본과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통해 국익을 증진시킬 수 있는 지속적인 고민과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한국 내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일본 및 재외동포들을 대상으로 한 노력도 함께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안내 책자, 카드뉴스, 동영상 등 다양한 형태의 온오프라인 홍보물 발간, SNS, Youtube, 관련 홈페이지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한 홍보, 국내 및 일본 내 정부 및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의 적절한 연계를 통한 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일 협력의 저변을 확대하는 노력이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앞서 제시한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 2020년도 여론조사에 의하면, 한일이 협력해야 할 분야(복수응답)로, 한국은 경제/무역/금융(62%), 외교/안보(47%), 관광(41%), 문화(38%) 순으로, 일본은 외교/안보(83%), 관광(78%), 의료/감염병(78%), 경제/무역/금융(71%) 순으로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한일관계 현황 및 전망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에서도 양국의 협력 분야로 한국은 역사 문제 공동연구(23.5%), 문화/관광(20.4%), 일본은 문화/관광(23.2%), 통상/무역(21%) 순으로 답하였다.¹¹⁶ 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한일 양국 협력의 필요성이 다양한 분야에서 요구된다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따라서 각 분야에서의 협력 노력을 통해 협력의 저변을 확대시켜 나감으로써 국익에 기반한 관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셋째, 문화적 친근감이 상대국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문화 교류는 양국이 가장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부분이자, 비교적 쉽게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분야이다. 한국과 일본의 서로의 문화에 대한 높은 호감은 양국관계 발전의 큰 자산이자, 긍정적 요소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화 교류가 곧 양국 간 역사 및 정치외교 갈등의 해결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양국 갈등이 발생했을 때, 부정적 영향을 받아 원활한 교류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문화 교류로 양국 갈등 해소 혹은 관계 개선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문화에 대한 호감은 보다 정확히는 ‘콘텐츠’에 대한 호감이지만, ‘국가’에 대한 호감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BTS에 대한 호감’이 ‘한국에 대한 호감’은 아니라는 의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 교류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보다 확산되어야 한다. 문화 교류를 통한 친근감 형성은 격화된 양국 갈등과 대립을 완화시킬 수 있는 ‘완충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일 간 문화 교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98년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이후, 즉 2000년대부터 현재까지 지난 20여 년을 되돌아보면, 문화 교류로 인해 상호 간 많은 인식의 변화가 있었고, 한일관계의 발전과 개선을 촉구하는 여론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 교류가 한일관계를 개선시킬 것이라는 과도한 목

116. 한일 양국이 우선시하는 협력분야가 다른데, 예를 들어, 한국에서 중시한 ‘역사 문제공동연구’가 일본에서는 높은 순위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가해자로서 불편한 사안을 마주하고 싶지 않다”, “역사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다”, “과거가 아닌 미래지향적 관계를 만들어 가자”는 일본 사회의 인식이 나타나는 것으로도 해석해 볼 수 있다.

표와 기대보다는 한일관계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기제라는 점을 인식하고, 양국 간 자유롭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과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의 한일 문화 교류를 더욱 활성화하는 동시에 문화 교류를 통한 한일 협력 사례 등을 발굴하고, 이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일 공동연주회, 공동전시회, 방송·통신·미디어 등을 활용한 한일 협력의 미래를 함께 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또한 그동안의 쉽고, 편하고, 즐거운 논의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민감하고, 어렵지만 다룰 필요가 있는 사안들에 대한 쉬운 접근과 이해를 도모할 수 있도록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과 실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한 관심이 서로에 대한 이해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 세대별 인식과 특성을 고려한 공공외교 전략이 수립되어야 한다.

본 보고서를 통해 양국의 상호인식이 세대별로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즉, 전쟁을 경험한 일본의 기성세대가 전쟁과 역사에 대한 반성 속 한국에 대한 미안함과 동시에 우월감을 갖고 있는 반면, 현재의 젊은 세대는 일본 내 깊게 자리 잡은 한국문화를 기반으로 한국에 대한 높은 친밀감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한일 간 역사 문제에 대해 기성세대와 특별히 다른 사고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전쟁의 상흔 속에서도 일본의 급격한 경제성장을 기억하는 한국의 기성세대는 일본에 대한 반감과 동경을 동시에 갖고 있지만, 젊은 세대들은 일본에 대한 열등감보다는 동등한 경쟁자의 시각에서 일본을 바라본다. 이들은 일본문화와 여행을 즐기며, 일본에 대한 친밀감과 긍정적 인식을 갖고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과거사 문제에 대해 기성세대와 특별히 다른 인식을 갖고 있지는 않다. 일본의 젊은 세대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젊은 세대 또한 과거사 문제와 관련하여 부정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 사안에 따라서는 기성세대보다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한다. 더욱이 일본의 30, 40세대의 인식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현재 젊은 세대의 서로에 대한 긍정적 인식이 향후에도 긍정적인 인식으로 이어질 것으로 담보하기는 어렵다. 인식은 가변적이고, 새로운 사회적 흐름 속에서 변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처럼 세대별로 다르고, 시대별로 변화하는 특성을 고려한 보다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우리의 대일 정책 혹은 대일 공공외교는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다수의 사업들이 이러한 변화

하는 인식의 차이를 반영한 전략적 접근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시행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재점검하고, 보다 치밀한 전략을 수립해 나갈 필요가 있다. 더불어 일본 내각부의 ‘외교에 관한 조사’를 통해 수십 년간 해당 시기의 인식 조사를 시행하며 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을 수립에 참고하고 있는 점을 참고하여 우리 또한 현재의 시점에서 각 세대가 갖는 서로에 대한 인식을 지속적으로 관찰·조사·축적하고, 이를 분석하는 과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사회적 파급력이 큰 정책결정자 및 오피니언리더 등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인적 교류와 한일관계에 대한 이해 증진, 네트워크 구축 노력이 필수적이다. 여기에는 직군별, 세대별 특성 또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전후 세대가 정치권에 등장하고, 역사의식과 전후처리에 대한 인식이 희박해짐에 따라 역사 문제를 둘러싼 한일 간의 인식의 차이는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한일정책대화, 한일전략대화를 강화하고, 정치외교 네트워크 복원 등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향후 양국 관계에 중추적 역할을 해 나갈 ‘3040세대’를 중심으로 한 차세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한일친선협회’, ‘한일의원연맹’, ‘한일포럼’ 등 기존 플랫폼의 외연을 확장해 나가는 동시에 새로운 형태의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한일관계가 악화되고, 서로에 대한 반목과 불신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지만, 한일 양국은 오랜 기간 동안 질곡의 역사를 함께하며 협력 및 발전해 온 관계이다. 비록 완전한 해결이 어려운 역사적 과제 속에서 여전히 갈등과 대립을 겪고 있고, 이에 대한 양국 간 인식의 차이도 좁혀지고 있지 않지만, 수십 년간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 왔고, 그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더욱이 변화하는 국제정세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양국 협력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앞으로도 한일관계 개선과 발전을 위해 얼마나 더 많은 시간과 지난한 노력이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한일 양국은 서로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며, 더 나은 미래를 위해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부록 1. 주요 여론조사 개요

■ 내각부 '외교에 관한 조사' 内閣府, 「外交に関する世論調査」(1978-현재)

- 홈페이지: <https://survey.gov-online.go.jp/index-gai.html>
- 외교에 관한 국민의식을 파악하고 향후 시책에 참고하기 위해 1975년부터 매년 시행하여 2020년까지 총 45회(1976년 제외) 실시하고 있다.
- 조사의 응답자는 전국 성인남녀 20세 이상(2016년도부터 18세 이상), 표본 수는 3,000명이나, 유효회수율 및 수치는 매년 다소 상이하다. 2020년의 경우, 1865명(회수율 62.2%)이다. 2006년부터는 조사 실시 주체가 '내각부'임을 제시한 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까지는 조사원에 의한 개별면접 청취법으로 실시하였으나, 2020년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우편배송으로 실시하였다.

■ 동아시아연구원(EAI)-言論NPO '한일국민상호인식조사'(2013-현재)

- 홈페이지: <https://www.eai.or.kr/new/ko/project/list.asp?code=17>
- 한국 동아시아연구원(EAI, East Asia Institute)과 일본 言論NPO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한일 양국의 당면한 현안에 대해 양국 국민의 평가와 의견을 조사하며, 그 결과를 바탕으로 양국 전문가 중심의 〈한일미래대화〉를 개최하고 있다.
- 조사는 양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0여 명을 성별·연령별·지역별 구성비에 맞춰 할당·무작위 추출하여 실시하며, 일본은 방문유치회수법, 한국은 조사원에 의한 대면면접조사법으로 실시하고 있다.

■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의식조사'(2007-현재)

- 홈페이지: https://ipus.snu.ac.kr/blog/archives/research_cat/unification_perception-survey
- 통일, 북한, 대북정책, 북한이탈주민, 국제환경, 사회의식 등에 대해 여론과 국민의식을 파악하여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통일 논의를 창출하며 정책 수립과 실행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마련하고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2007년부터 매년 전국 만 19세 이상 65세 이상의 성인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다.

■ 아산정책연구원 ‘아산연례조사’ 및 ‘데일리폴’

- 홈페이지: <http://www.asaninst.org/contents/tag/%EB%8D%B0%EC%9D%BC%EB%A6%AC-%ED%8F%B4/>
- 아산연례조사: 2010년 연례조사는 8월 16일부터 9월 1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 대상으로 개별방문 면접조사로 실시하였으며, 95% 신뢰구간에서 $\pm 2.19\%p$ 표집오차를 나타낸다. 2011년 연례조사는 8월 26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MMS 전화면접조사, 온라인 조사로 실시하였으며, 95% 신뢰구간에서 $\pm 2.19\%p$ 표집오차를 나타낸다. 2012년도 연례조사는 9월 24일부터 11월 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500명을 대상으로 유선/휴대전화 RDD로 응답자 패널 구축 후,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고, 95% 신뢰구간에서 $\pm 2.5\%p$ 표집오차를 나타낸다.
- 데일리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선/휴대전화 RDD 전화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95% 신뢰구간에서 $\pm 1.5\%p$ 표집오차를 나타낸다.

■ 통일연구원 ‘KINU 통일의식조사’

- KINU 통일의식조사 2020: 주변국 인식 비교연구 <https://www.kinu.or.kr/www/jsp/prg/api/dlV.jsp?menuIdx=268&category=17&thisPage=1&biblioId=1549212>
- 통일연구원의 KINU 통일의식조사는 1990년대부터 매년 4월경(2020년의 경우, 4월 국회의원 선거를 피해 5.20-6.10 실시)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를 약 1,000여 명의 표본을 대상으로 대면면접조사를 실시, 통일과 북한 그리고 정부정책, 주변국에 대한 인식, 탈북자들에 대한 태도 등을 연구하고 있다.

■ 한국갤럽

- 홈페이지: <https://www.gallup.co.kr/gallupdb/reportContent.asp?seqNo=1031>
- 1991년 이후 다양한 계기에 일본에 대한 호감도에 대해 질문하였다. 이 중 1991년부터 2011년도까지는 4점 척도 질문으로, ‘아주 좋다’와 ‘약간 좋다’는 ‘호감’으로, ‘약간 싫다’와 ‘아주 싫다’는 비호감으로 보았다. 2015년도부터는 2점 척도를 적용하여 ‘호감이 간다’와 ‘호감이 가지 않는다’로 질문하였다. 시기별로 전국 약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의 경우, 2019.7.9~7.11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원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신뢰수준은 95%이며, 표본오차는 $\pm 3.1\%p$ 이다.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문화체육관광부 「2021 해외한류실태조사」(2021)

 - 홈페이지: https://www.mcst.go.kr/kor/s_policy/dept/deptView.jsp?pSeq=1448&pDataCD=0417000000&pType=08
 - 본 조사는 중국, 일본, 대만,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베트남, 호주, 미국, 브라질, 아르헨티나, 프랑스, 영국, 러시아, 터키, UAE, 남아프리카공화국 등 18개국의 15세~59세 성인남녀 중 한국문화콘텐츠 경험자 8,500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부터 11월까지 시행되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1.1\%p$, 각 국가별 ($n=400\sim 500$ 표본),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pm 4.38\sim 4.90\%p$ 이다.

- 한국언론진흥재단 ‘한일 갈등에 대한 양국 시민의식 조사’(2020.8)

 - 홈페이지: <https://www.kpf.or.kr/front/research/selfDetail.do?seq=591089>
(2020.9.10)
 - 동 조사는 한일 양국 20세 이상 69세 이하의 남녀를 대상으로 온라인으로 실시되었으며, 한국은 2020.8.25-8.28, 1,000명(성별: 남성 51.1%, 여성 48.9%, 연령대: 20대 18.3%, 30대 18.7%, 40대 22.2%, 50대 23.4%, 60대 17.4%)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pm 3.1\%p$, 일본은 2020.8.26-8.31, 742명(남성 50.7%, 여성 49.3%, 연령대는 20대 13.6%, 30대 23.9%, 40대 24.7%, 50대 24.3%, 60대 13.6%)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pm 3.7\%p$ 이다.

- 한국일보-요미우리신문(読売新聞) ‘한일공동여론조사’(1995-현재)

 - 홈페이지: <https://www.hankookilbo.com/Series/S-PLANNING-PL-2-383>
 -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2021년의 경우, 일본은 5.21-23, 한국은 5.21-22 기간 동안 무작위로 컴퓨터로 작성한 유선전화와 휴대전화 번호로 전화를 거는 RDD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일본은 18세 이상 유선전화 407명, 휴대전화 656명, 합계 1063명, 한국은 18세 이상 유선전화 104명, 휴대전화 896명, 합계 1,0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 한국일보-한국리서치

 - 한국일보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웹조사(휴대전화 문자와 이메일 등을 통한 URL 발송)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총 256개 문항을 설계해 △국정인식 △공정 △안보 △젠더 등 폭넓은 주제들을 다양한 가설을 통해 검증하였고, 세대 간 차이 및 세대 내 이질성을 집중 분석하였다. 조사 기간은 5월 25~27일, 대상은 전국 만 18세 성인 남녀 3,000명이고 표본오차는 95% 신뢰 수준에 $\pm 1.8\%p$ 다. 2021년 4월 정부 주민등록 인구 기준으로 지역·성·연령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응답률은 14.7%(2만366명 접촉, 3,000명 응답)이다.

부록 2. 국교정상화 이후 한일 정상 연표(1965-2021.12)

박정희 [제5-9대] 1963.12-1979.10(민주공화당)	1965	사토 에이사쿠 [제61대] 1964.11-1967.02(자유민주당) [제62대] 1967.02-1970.01(자유민주당) [제63대] 1970.01-1972.07(자유민주당)	
	1966		
	1967		
	1968		
	1969		
	1970		
	1971		
	1972		
	1973		다나카 가쿠에이 [제64대] 1972.07-1972.12(자유민주당)
	1974		[제65대] 1972.12, 1974.12(자유민주당)
최규하 [권한대행] 1979.10-1979.12	1975	미키 다케오 [제66대] 1974.12-1976.12(자유민주당)	
	1976	후쿠다 다케오 [제67대] 1976.12-1978.12(자유민주당)	
1977			
최규하 [제10대] 1979.12-1980.08	1978	오히라 마사요시 [제68대] 1978.12-1979.11(자유민주당) [제69대] 1979.11-1980.06(자유민주당)	
	1979		
	1980		이토 마사요시 [임시대리] 1980.06-1980.07

박충훈 [권한대행] 1980.08-1980.08	1980	스즈키 젠코 [제70대] 1980.07-1982.11(자유민주당)
전두환 [제11-12대] 1980.08-1988.02(민주정의당)	1981	
	1982	
	1983	나카소네 야스히로 [제71대] 1982.11-1983.12(자유민주당) [제72대] 1983.12-1986.07(자유민주당) [제73대] 1986.07-1987.11(자유민주당)
	1984	
	1985	
	1986	
	1987	
1988	다케시타 노보루 [제74대] 1987.11-1989.06(자유민주당)	
노태우 [제13대] 1988.02-1993.02(민주정의당)	1989	우노 소스케 [제75대] 1989.06-1989.08(자유민주당)
	1990	가이후 도시키 [제76대] 1989.08-1990.02(자유민주당) [제77대] 1990.02-1991.11(자유민주당)
	1991	
	1992	미야자와 기이치 [제78대] 1991.11-1993.08(자유민주당)
김영삼 [제14대] 1993.02-1995.02(민주자유당) 1995.02-1998.02(신한국당)	1993	호소카와 모리히로 [제79대] 1993.08-1994.04(일본신당)
	1994	

	1994	하타 쓰토무 [제80대] 1994.04-1994.06(신생당)
	1995	무라야마 도미이치 [제81대] 1994.06-1996.01(일본사회당)
	1996	하시모토 류타로 [제82대] 1996.01-1996.11(자유민주당) [제83대] 1996.11-1998.07(자유민주당)
	1997	
	1998	
김대중 [제15대] 1998.02-2003.02(새천년민주당)	1999	오부치 게이조 [제84대] 1998.07-2000.04(자유민주당)
	2000	모리 요시로 [제85대] 2000.04-2000.07(자유민주당) [제86대] 2000.07-2001.04(자유민주당)
	2001	
	2002	고이즈미 준이치로 [제87대] 2001.04-2003.11(자유민주당) [제88대] 2003.11-2005.09(자유민주당) [제89대] 2005.09-2006.09(자유민주당)
	2003	
노무현 [제16대] 2003.02-2004.03(새천년민주당)	2004	
고건 [권한대행] 2004.03-2004.05	2005	
	2006	
노무현 [제16대] 2004.05-2008.02(새천년민주당)	2007	아베 신조 [제90대] 2006.09-2007.09(자유민주당)
	2008	후쿠다 야스오 [제91대] 2007.09-2008.09(자유민주당)

이명박 [제17대] 2008.02-2013.02(한나라당)	2008	아소 다로 [제92대] 2008.09-2009.09(자유민주당)
	2009	하토야마 유키오 [제93대] 2009.09-2010.06(민주당)
	2010	
	2011	간 나오토 [제94대] 2010.06-2011.09(민주당)
	2012	노다 요시히코 [제95대] 2011.08-2012.12(민주당)
	2013	아베 신조 [제96대] 2012.12-2014.12(자유민주당) [제97대] 2014.12-2017.11(자유민주당) [제98대] 2017.11-2020.09(자유민주당)
2014		
2015		
2016		
박근혜 [제18대] 2013.02-2016.12(새누리당)	2017	
황교안 [권한대행] 2016.12-2017.05 *2017.03.10. 대통령 탄핵	2018	
	2019	
문재인 [제19대] 2017.05-2022.05(더불어민주당)	2020	
	2021	스가 요시히데 [제99대] 2020.09-2021.09(자유민주당)
		기시다 후미오 [제100대] 2021.09-2021.10(자유민주당) [제100대] 2021.10-현재(자유민주당)

부록 3. 한일관계 주요 정치·외교 사안(2017.05-2021.12)

연도	월	주요사안
2017	05	<p>(05.10) 한국, 문재인 정부 출범</p> <p>(05.11) 문재인 대통령, 취임 계기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 · 위안부합의에 대한 한국의 정서적 수용의 어려움 전달</p> <p>(05.14) 윤병세 외교장관,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p> <p>(05.14)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통화</p> <p>(05.17-5.20) 대통령 특사대표단(단장: 문희상 前 국회의장) 방일</p> <p>(05.21)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통화</p> <p>(05.29)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통화</p> <p>(05.30) 문재인 대통령,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와 전화 통화</p>
	06	<p>(06.07-06.09) 정세균 국회의장 방일</p> <p>(06.10-06.13) 니카이 도시히로(二階 俊博) 자민당 간사장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 특사 자격 방한</p> <p>(06.18) 윤병세 외교부장관 이임 및 강경화 외교부장관 취임(-2021.2.8)</p> <p>(06.21) 강경화 외교부장관, 취임 계기 기시다 후미오(岸田 文雄) 일본 외무대신과 전화 통화</p> <p>(06.21) 일본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발표</p>
	07	<p>(07.04)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통화</p> <p>(07.06) G20 정상회의 계기 한미일 정상 만찬회담 및 공동성명 발표(독일 함부르크)</p> <p>(07.07) 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독일 함부르크)</p> <p>(07.11) 한일/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싱가포르)</p> <p>(07.29)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통화</p> <p>(07.31)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출범 · 2015.12.28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발표</p>
	08	<p>(08.07) ARF외교장관회의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마닐라)</p> <p>(08.07) 한일 정상 간 전화 통화 실시</p> <p>(08.07)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필리핀)</p> <p>(08.08) 일본 2017년도 방위백서 발표 관련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p> <p>(08.15) 아베 신조(安倍 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공물료 봉납 및 일부 각료와 국회의원의 참배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발표</p>

08	<p>(08.20-08.21) 한일 의원연맹 대표단 방한 (08.25) 한일 정상 간 전화 통화 실시 (08.29)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일 외교장관 전화 통화 실시 (08.29) 한일 6자회담수석대표 통화 (08.30)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일 정상 전화 통화</p>
09	<p>(09.03) 북한 제6차 핵실험 관련, 한일 외교장관/6자회담 수석대표 전화 통화 (09.04) 북한 제6차 핵실험 관련 한일 정상 전화 통화 (09.07) 제3차 동방경제포럼 계기 한일 정상회담 및 외교장관회담(블라디보스톡) (09.15)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일 정상/외교장관/6자회담 수석대표 통화 (09.21) 제72차 유엔 총회 계기 한미일 정상 오찬회담(뉴욕) (09.22) 제72차 유엔 총회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뉴욕)</p>
10	<p>(10.17) 강경화 외교부장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및 단체 관계자 초청 오찬 간담회 개최 (10.17) 일본 야스쿠니신사 秋季例大祭(10.17~20) 계기, 아베 신조(安倍 晋三) 총리 공물 봉납(10.17) 및 일부 국회의원 참배 실시 (10.18) 제7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계기 한일 차관회담 개최(서울) (10.18) 한미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서울) (10.19)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서울) (10.22) 일본, 제48회 중의원 선거 (10.24) 한일 정상 간 전화 통화 실시 (10.27) 이준규 22대 주일한국대사 이임 (10.31) 이수훈 23대 주일한국대사 취임(-2019.5.3)</p>
11	<p>(11.16)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서울) (11.22-11.25) 아마구치 나츠오(山口 那津男) 일본 공명당 대표 방한 (11.29)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한일 정상 및 외교장관 간 전화 통화 (11.29)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통화</p>
12	<p>(12.19-12.20) 강경화 외교부장관 방일 (12.22)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협의(동경) (12.27)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 검토 결과 보고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음. · '위안부' 등 역사 문제가 한일관계/대외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균형 있는 외교 전략을 마련해야 함. ·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일수록 국민과 함께 호흡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이 중시되어야 함. · 대통령, 협상책임자, 외교부 사이의 소통이 부족하였음. <p>(12.28) 문재인 대통령, '위안부합의 TF 조사 결과 입장문'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안부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함.

2018	01	<p>(01.04)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전화 협의</p> <p>(01.08) 한일 국장급/6자회담수석대표 협의(서울)</p> <p>(01.09) 강경화 외교부장관, '위안부합의 처리 방향 정부 입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5년 합의가 양국 간의 공식합의였다는 사실을 감안하여, 동 합의와 관련하여 일본 정부에 재협상을 요구하지 않지만, 일본 측이 스스로 국제보편 기준에 따라 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피해자의 명예·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언급함. · 주요내용: △일본 정부가 출연한 화해·치유 재단 기금 10억 엔은 전액 우리 정부 예산으로 충당, △‘위안부’ 피해자 중심의 해결방안 모색, △생존자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2015년 위안부합의는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음, △일본 정부에 재협상은 요구하지 않을 것, △과거사 문제의 지혜로운 해결과 한일 미래지향적 협력 노력 병행 등 <p>(01.16) 한반도 안보 및 안정에 관한 외교장관회의(밴쿠버 회의) 참석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 한일 외교장관 조찬(밴쿠버)</p>
	02	<p>(02.05) 한일 6자회담 수석대표 전화 협의</p> <p>(02.09) 평창올림픽 계기, 한일 정상회담(평창)</p>
	03	<p>(03.12-03.13) 서훈 국가정보원장 방일(동경)</p> <p>(03.17) 강경화 외교부장관 방미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워싱턴 D.C)</p> <p>(03.30) 일본고등학교 학습지도요령 개정 확정</p> <p>(03.30) 한일 외교장관 전화 통화</p>
	04	<p>(04.11) 고노 타로 외무대신 방한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서울)</p> <p>(04.23) 한일 국장급/6자회담수석대표 협의(서울)</p> <p>(04.24) 한일 정상 통화</p> <p>(04.28-04.29) 한일 정상 통화</p>
	05	<p>(05.09) 한일중 정상회의 계기, 한일 정상회담(동경)</p>
	06	<p>(06.14) 고노 타로 외무대신 방한 계기, 한일/한미일 외교장관회담(서울)</p>
	07	<p>(07.08) 한미/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도쿄) 강경화 외교부장관 아베총리 예방.</p>
	08	<p>(08.02) ASEAN 관련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싱가포르)</p> <p>(08.28) 2018년 일본 방위백서 발표</p> <p>(08.29) 한일 국장급 협의(도쿄)</p>
	09	<p>(09.11) WEF ASEAN 지역회의 참석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하노이)</p> <p>(09.11) 동방경제포럼 계기 한일 정상급 회의(블라디보스톡)</p> <p>(09.25) 유엔총회 계기, 한일 정상회담(뉴욕)</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재인 대통령, 아베 총리에게 「화해·치유 재단」 해산 시사 <p>(09.26) 유엔총회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뉴욕)</p>

	10	<p>(10.05) 제주 국제관함식, 일본의 해상자위대 육일기 게양 문제로 참가 보류</p> <p>(10.18) 야스쿠니 추계예대제(10.17.-20.)시 일본 정관계 인사 야스쿠니 참배 관련 대변인 논평 발표</p> <p>(10.25) 한일 차관 회담(동경)</p> <p>(10.29) 한일 문화인적교류 활성화 TF 합동회의(서울)</p> <p>(10.30) 한국 대법원 전원합의체, 강제동원판결 결과 신일철주금에 배상 명령</p> <p>(10.31) 한일 외교장관 통화</p>
	11	<p>(11.21) 한국, '위안부' 화해·치유 재단 해산 결정</p> <p>(11.26) 한국, 국회의원 8명 및 시민단체 관계자 등 독도 방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일, 자민당 외교부회 등 합동회의, "용서받지 못할 폭거" 등 내용이 담긴 비난 결의문 제출
	12	<p>(12.12) 한일외교장관 통화</p> <p>(12.14) 일한의원연맹 대표단 문재인 대통령 예방 및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 개최</p> <p>(12.18) 일본, <신(新)방위대강>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을 안보협력국 순위에서 5위로 표기(기존 2위) <p>(12.20) 일본, 한국 해군 구축함에 일본 초계기에 사격 레이더 조준 주장</p> <p>(12.24)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서울)</p> <p>(12.28) 일본, 레이더 조사 관련 영상 공개</p>
2019	01	<p>(01.04) 한국, 레이더 조사 관련 반론 영상 공개</p> <p>(01.04) 한일 외교장관 통화</p> <p>(01.09) 일본, 한국에 강제징용 문제 관련, '외교적 협의(3조 1항, 외교상의 경로를 통한 해결)' 요청</p> <p>(01.11) 한일 북핵수석대표 전화 통화</p> <p>(01.15) 한국, 「2018 국방백서」 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방교류 국가의 순서로, 일본-중국-러시아에서 중국-일본-러시아로 변경 · 일본을 중국 다음으로 변경 기술, "일본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기본적 가치 공유" 표현 삭제 <p>(01.21) 한국, 여성가족부 장관 직권으로 '화해·치유 재단' 허가 취소</p> <p>(01.21) 일본, 레이더문제 관련 한국과 더 이상 협의하지 않겠다고 선언</p> <p>(01.23) 다보스포럼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다보스)</p> <p>(01.23) 한국 국방부, 일본 초계기 근접저공비행(1.18, 1.22, 1.23) 규탄 성명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야 방위대신은 국제법규 및 국내법에 따른 적절한 운용이라며 부정 <p>(01.31) 한일 국장급 협의(도쿄)</p>
	02	<p>(02.08) 문희상 국회의장, 美 블룸버그 통신 인터뷰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 "일본을 대표하는 총리, 혹은 천황이 사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p> <p>(02.09) 한일/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서울)</p>

02	<p>(02.15) 원천안보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원천) (02.22) 시마네현 주최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에 일본 측, 내각정무관 파견</p>
03	<p>(03.06)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워싱턴) (03.14) 한일 국장급 협의(서울) (03.26) 일본, 교과서 검정 결과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 "한국이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어 일본은 항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언급 ·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 "강력히 규탄하며 즉시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는 내용의 대변인 성명 발표, 주한일본대사 초치 항의
04	<p>(04.01)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동경) (04.08) 아베총리, 주일한국대사 접견, 강제징용 문제 및 '위안부' 문제 등 현안에 대해 한국 측의 적절한 대응 요구 및 "문재인 대통령에게 전달해주길 바란다"고 언급 (04.09) 일본, 한국, 북한, 동해 호칭 문제 관련하여 비공식 협의(런던) (04.11) WTO 상소기구(최종심), 한국의 수입규제조치 WTO 협정에 합치 최종심 공개 (한국승소) ※1심 패널 판정 파기 (04.23) 한일 국장급 협의(동경) (04.23) 일본 외교청서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래지향적" 표현 삭제, '위안부' 문제는 해결되었다는 일본의 입장 서술, 독도를 '일본의 고유 영토'로 표기 · 한국 외교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감 표명,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p>(04.24) 한일 북핵수석대표 유선 협의</p>
05	<p>(05.01) 美 유엔 본부에서 개최된 지명전문가그룹(UNEGN)회의에서 동해 호칭 문제 관련 한일 대표 간 공방 (05.03) 이수훈 23대 주일한국대사 이임 (05.09) 남관표 24대 주일한국대사 취임(-2021.1.16) (05.20) 일본, 한국에 '중재위 구성(3조 2항, 제3국의 위원을 포함하는 중재위원회 구성 및 해결 규정)' 요청(기한: 6.18) (05.23) OECD 각료이사회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파리) (05.31-06.01) 상그릴라 대화 계기 한미/한일/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싱가포르)</p>
06	<p>(06.05) 한일 국장급 협의(도쿄) (06.19) 한국, 강제징용 판결문제 우리 정부 입장 발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송 당사자인 일본 기업을 포함한 한일 양국 기업이 자발적 출연금으로 재원을 조성하여 확정판결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해당액을 지급함으로써 당사자들 간의 화해가 이루어지는 방안을 제시 · 일본 측이 이와 같은 방안을 수용할 경우, 일본 정부가 요청한 바 있는 한일 청구권협정 제3조 1항 협의절차의 수용 검토 용의

06	(06.19) 일본, 한국 측 제안에 거부 의사 표명 (06.19) 일본, 한국에 '제3국에 의한 중재위원회 설치(3조 3항)' 요청(기한: 7.18) (06.28) G20 정상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오사카)
07	(07.01) 일본, 한국에 대해 반도체 제품 등에 필요한 화학제품 '수출관리강화' 결정 ·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에 사용되는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반도체 기판에 사용되는 감광제 리지스트, 반도체 세정에 사용되는 불화수소 등 3개 품목 (07.03) 한국, '화해·치유 재단' 공식 해산(설립일: 2016.7.28) (07.04) 일본,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 시행 (07.21) 일본, 참의원선거 (07.25) 한일 북핵수석대표 전화 통화
08	(08.02) 일본, 수출우대국 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각의결정 및 통과 (08.02) 아세안(ASEAN)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국장급 협의(방콕) (08.02)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참석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회담(방콕) (08.02)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08.07) 일본, 수출우대국 리스트(백색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시행령 공포 (08.12) 한국, 대일본 전략물자 수출 우대지역 제외 정령 결정 (08.20) 제9차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국장급 협의(베이징) (08.22) 한일중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베이징) (08.22) 일본,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정령 시행 (08.22) 한국, 한일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종료 결정-11.23 0시로 종료 (체결: 2016.11.23) (08.29) 한일 국장급/북핵수석대표 협의(서울)
09	(09.11) 한국, 일본을 WTO에 제소 및 일본에 대해 양자협약의 요청 (09.18) 한국,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한국의 수출입고시 개정안 시행 (09.17-09.27) 한일/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워싱턴/뉴욕) (09.20) 한일 국장급 협의(도쿄) (09.26) 제74차 유엔총회 계기 한일 외교장관회담(뉴욕)
10	(10.08) 한일/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워싱턴) (10.16) 한일 국장급/북핵수석대표 협의(서울) (10.22-10.24) 이낙연 총리, 일본 나루히토 천황 즉위식 향서 참석 방일 및 아베 총리와 회담(24일)
11	(11.04) ASEAN+3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 단독회담(방콕) (11.15) 한일 국장급 협의(도쿄) (11.22) 수출규제 관련 한일 국장급 정책대화 재개 (11.22)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 유예(조건부 연장) (11.23) G20 외교장관회의 계기 한-일본 외교장관회담(나고야)

	11	(11.28) 한일 북핵수석대표 유선 협의	
	12	(12.03) 도미타 코지(冨田 浩司) 주한일본대사 부임 (12.15) 제14차 아시아·유럽 (ASEM) 외교장관회의의 만찬 계기 한일 외교장관 환담(마드리드) (12.20) 일본, 반도체 소재 '포토리지스트' 수출규제 일부 완화 (12.24) 한중일 정상회의 계기, 한일정상회담(청두)	
2020	01	(01.13)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계기 한일 국장급협의(샌프란시스코) (01.14) 한미일 외교장관회담 계기 한일/한미일 외교장관회담(샌프란시스코)	
	02	(02.06) 한일 국장급 협의(서울) (02.15) 제56차 원헬안보회의 계기 한일/한미일 외교장관회담(원헬)	
	04	(04.01) 한일 국장급 화상협의 (04.08) 한일 북핵수석대표 유선 협의 (04.15) 한국, 제21대 국회의원선거	
	05	(05.12) 한국, 일본에게 5월 말까지 한일수출 현안에 대한 입장 요구 (05.13) 한일 국장급 유선 협의	
	06	(06.02) 한국, 일본 수출규제 관련 WTO 분쟁 해결 절차 재개 결정 (06.03) 한일 외교장관 통화 (06.24) 한일 국장 화상 협의	
	08	(08.28) 일본, 아베 총리 사의 표명	
	09	(09.04) 한일 북핵수석대표 유선 협의 (09.14) 일본, 스가 요시히데 자민당 총재 선출 (09.16) 일본, 스가 내각 출범(2020.9.16-2021.10.4) (09.24) 한일 정상 전화 통화	
	10	(10.29) 한일 북핵수석대표 협의(서울)	
	11	(11.10) 박지원 국정원장,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접견 (11.12-11.14) 한일의원연맹(회장: 김진표) 방일 (11.12) 한일 외교차관 통화	
	12	(12.23) 한일 북핵 수석대표 유선 협의	
	2021	01	(01.08)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 상대 1차 소송 승소 (01.09) 한일 외교장관 통화 (01.15) 한일 국장급 협의(화상 회의) (01.15)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일본대사 부임(-현재) (01.16) 남관표 제24대 주일한국대사 이임 (01.22) 강창일 제25대 주일한국대사 취임(-현재)
		02	(02.15) 한일 북핵수석대표 유선 협의 (02.19) 북핵문제 관련 한미일 3자 화상 협의

02	(02.26) 최종건 1차관, 아이보시 코이치(相星 孝一) 주한 일본 대사 면담(서울)
03	(03.01) 문재인 대통령, 3.1 절 기념식에서 한일관계 개선 언급 ·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일본 정부와 마주 앉아 대화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다.” (03.01) 일본, “양국간 현안 해결을 위해 한국이 책임지고 구체적으로 대응” 언급 (03.25) 한일 북핵수석대표 유선 협의
04	(04.01) 한일 국장급 협의(도쿄) (04.13)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결정 (04.14) 문재인 대통령,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등 적극 검토 지시 (04.21) '위안부' 피해자들, 일본 정부 상대 2차 소송 각하 → 원고, 항소
05	(05.05) G7 외교·개발장관회의 계기, 한일/한미일 외교장관 회담(런던) (05.12) 박지원 국정원장 한미일 정보기관장 회의 계기 방일 및 스가 총리 예방 (05.24) 문화체육관광부, 도쿄올림픽 성화봉송 코스 소개 전국 지도, 독도 표기 관련 일본올림픽위원회에 독도 표시 시정 요구 서한 발송
06	(06.04) 국무조정실장 주재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민관 협의회의' 개최 (06.11-06.13) G7 계기, 한일정상회담 무산 (06.21) 한일 국장급 협의 (06.21) 한일/한미일 북핵수석대표협의
07	(07.07) 외교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민관회의 개최 (07.08) IAEA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검증 전문가팀 구성 (07.13) 일본, 방위백서 발표 (07.19) 도쿄올림픽 계기, 한일정상회담 무산 (07.20) 한일 외교차관회담 개최 (07.21) 제8차 한미일 외교차관협의회 개최 (07.22) 제44차 세계유산위원회, 일본 근대산업시설의 세계유산 등재 후속조치 이행 촉구 결정문 채택 (07.28) 외교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관련 민관회의 개최
08	(08.02) 한일 북핵수석대표 유선 협의 (08.13) 기시 노부오 방위대신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08.13) 한국 외교부,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 초치 (08.26) 일본 도쿄전력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실시계획안 발표(8.25)에 대한 주한일본대사관 정무공사 초치
09	(09.13)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 (09.14)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방일 계기, 모리 차관 면담 (09.14) 한미일 및 한미 북핵수석대표 협의

09	(09.15) 북핵문제 관련 한일 북핵수석대표 유선 협의 (09.16) 한일국장 협의 (09.22) 제76차 유엔총회 계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 (09.23) 제76차 유엔총회 계기, 외교부 장관 회담 개최 (09.29) 일본, 기시다 후미오 자민당 총재 선출
10	(10.04) 일본, 기시다 내각 출범(1차 내각: 2021.10.4-11.10) (10.19) 한일 및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 (10.31) 일본, 제49회 중의원선거
11	(11.02) 한일 북핵수석대표 유선 협의 (11.10) 일본, 기시다 2차 내각 출범(2021.11.10-현재) (11.17) 일본 도쿄전력,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 방사선영향평가 보고서 발표 (11.17) 한일 외교차관 회담 및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회 개최 (11.22) 한일 국장 협의(서울) (11.29-11.30) 외교부 1차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방문 및 문제 해결방안 의견 청취
12	(12.03) 일본 도쿄전력이 발표(11.17)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시 방사선영향평가 보고서 초안과 관련 한일 간 브리핑 세션 개최 (12.07) 日 의원들의 야스쿠니 신사 집단 참배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12.21) 일본 도쿄전력,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실시계획안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제출 (심사 요청) (12.21) 국무조정실장 주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실시계획안 제출에 따른 긴급 관계차관회의 개최 (12.28) 일본문화청 문화심의회 니가타현 소재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후보 선정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 출처: 외교부, 주일대한민국대사관, 외무성, 주한일본대사관, 각종 신문보도 등 참조하여 필자 작성.

ASAN
REPORT

한국과 일본, 우리는 서로에게 무엇인가:
한국과 일본의 상호인식과 한일관계

발행일 2021년 12월

지은이 최은미

펴낸곳 아산정책연구원

주소 (03176) 서울시 종로구 경희궁1가길 11

등록 2010년 9월 27일 제 300-2010-122호

전화 02-730-5842

팩스 02-730-5849

이메일 info@asaninst.org

홈페이지 www.asaninst.org

편집 디자인 EGISHOLDINGS

ISBN 979-11-5570-237-6 95340 (PDF)



ISBN 979-11-5570-237-6